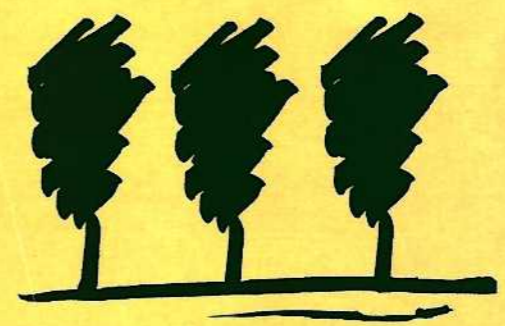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7

인권하루소식

합본Ⅶ호
(96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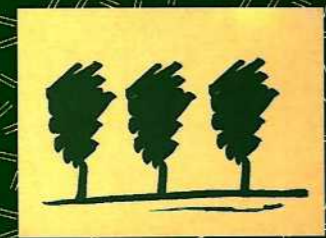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17권후 96) 호파출판

인권정보자료실
R1.1.7

민권운동사랑방



민권운동사랑방

다. 그것은 지난날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런 제도와 법률을 철저히 개폐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지 않는다.

사상과 신념, 양심을 발표할 기회마저 완전히 봉쇄당하는 5공으로의 회귀를 꺾고 이 나라를 인권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인권하루소식

96년 7월

(제675호 - 제695호)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동티모르 독립과 연대에 관심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 인권협 초청

인도네시아 식민지 동티모르의 독립과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5월 천주교인권위가 「동티모르 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교수)를 구성해 동티모르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나선 데 이어,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6월 30일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자신도 도스 산토스(33·호주 망명) 씨를 공식초청하고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인권협측은 “이번 산토스 씨의 초청을 계기로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현실을 널리 알리고, 동티모르 인권개선과 독립을 위해 한국의 인권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인권협은 지난 6월 21일부터 나흘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아태지역내의 동티모르의 미래에 대한 민중교육회의」에 대한 보고회를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열고, 동티모르에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4백여 년의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75년 인도네시아에 의해 강점된 동티모르는 인구의 30%인 20여만 명이 살해되는 등 극심한 인권탄압을 받아 오면서도 국제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3년 독립운동가 알카티리 씨의 방한과 함께 동티모르 상황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올해 산토스 씨의 방한은 94년 로드리게스 씨에 이어 동티모르 독립운동가의 세번째 공식 방문이다.

산토스 씨는 1일 기독교 인권센터, 민변 등 인권단체를 방문했고, 오늘 오후 2시엔 천주교 동티모르 소위 간담회에 참석해 동티모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3일

광주를 방문, 망월동 묘역과 사회단체를 방문한 뒤, 4일 민가협 목요일집회와 시드니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감하게 된다<관련기사 2면>.

전해투 노동부 방문 LG해고자 연행·석방

해고노동자 복지 요건을 위해 LG그룹 구본무 회장 집을 방문한 나현균(민주노동당) 총 해고자복지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전해투) 씨 등 해고노동자 9명이 지난 달 28일 '집시법 위반과 불안감 조성' 혐의로 용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30일 석방되었다. 또한 28일, 연행 소식을 듣고 성북경찰서에 가 면회를 요청하던 동료 노동자 15명도 '불신방지와 소란방지'의 이유로 연행되어 서초경찰서 등으로 분산 수용되었다가 함께 풀려났다.

LG그룹은 지난 89, 90년 노사분규로 이동렬(89년 해고) 씨 등 64명이 해고했으며, 95년 노동부장관의 복직지시에도 아랑곳 않고 단 한 명도 복직을 시키지 않았다. 이에 전해투는 LG그룹 상품 불매운동, 본사 항의 방문, 각종 집회를 통해

LG그룹의 반노동자적·반사회적 작태를 폭로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매일 오전 7-9시까지 한남동 구 회장 집 출근투쟁을 전개했다. 전해투는 이후 계속 구 회장 집 항의방문과 복지요청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강제 연행의 책임을 물어 성북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전해투는 1일 노동부를 방문해 장·차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그대신 근로기준국장 조순문 씨와 면담을 통해 해고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학련 사건공개질의 청와대 무반응

지난 5월 13명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대표 임형식, 전학련)은 지난달 7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전학련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질의서에서 전학련은 13명의 구속자 대부분이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사회생활 중이며, 구속영장에는 기재된 이적행위가 어떤 것일지 구체성이 없는 점 등을 들면서 이번 사건은 확대·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7월2일(화) 이지훈, 화염병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 장낙경, 국보법등, 오전10시, 단독1부, 519호 선고
 - 7월3일(수) 김재호외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7월4일(목) 전두환외 15인, 반관수괴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단독7부, 523호 선고
- 이상 서울형사지법

<사랑방, 인터넷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

지난 6월 21일부터 나흘간 호주 시드니에서는 ‘아태지역내의 동티모르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려 동티모르의 상황을 분석하고 독립의 전망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루투갈의 오토도대학, 시드니의 UTS대학, 시드니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이 공동준비한 이번 회의엔 세계 각국의 학자, 인권운동가, 대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가혹한 식민지배와 동티모르 민중의 독립투쟁 상황을 호주 민중들에게 홍보·교육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회의에서 진행된 각종 토론회와 교육프로그램은 유럽지역에 비해 동티모르 문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태지역에 동티모르 투쟁을 알리므로써 국제적 지원을 넓히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동티모르의 경험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첫날 회의에서 각국 학자들은 동티모르 해방운동에 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동티모르가 평화적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길’을 모색했다. Antonio(포루투갈) 교수는 국제적 압력과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석한 동티모르의 Maia 박사는 “주최 및 참석한 대학이 늘어난 점에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22일 둘째날엔 열악한 동티모르 민중들의 삶과 인도네시아의 탄압정책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티모르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이라는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에서 Marcel(동티모르 프록테스탄트 교회) 목사는 △인

도네시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기름진 농토를 차지하고 있는 점 △동티모르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전통적인 풍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 △이주자들의 유입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Sutriano 박사는 “경제발전의 이익이 주로 인도네시아인과 중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고학력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카오에서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사회의 중류층을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결성된 인도네시아 NGO(비정부단체)들이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소식을 전했다.

마지막날 회의에서는 관련당사국에 대한 비판과 입장표명이 전개됐는데, 미국의 Allan Narin 기사는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동티모르 침공을 인정하는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으며, 포루투갈 총영사 Jose Costa Pereira 씨는 “포루투갈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뉴카슬 대학의 Aditjondro 박사는 △강제적 불임 △산업 독점 △포루투갈 점령시보다 더 많은 인명살상 △성적 착취 △비민주성과 국수주의적 자세 등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호주 한청연=이진탁】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로 납부!
지로번호: 7618848

주간/인/권/호/름 (96년6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25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올해 단협중 10여 개 노조가 회사측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키로/ILLO, 한국정부에 제3차 개입금지 조항 등을 없애고 민주노총 총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고/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정책위원회 가입/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12·12와 5·18 사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하고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실무대책기구 구성키로/서울시교육청,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 학부모들에 의해 고소돼 물의를 빚은 황수연선양중 교장을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국군기무사령부, 대학재학시설 남종련 산하 오월대의 ‘민중해방군’에 가담했다가 군에 입대한 김성희 상병등 현역 사병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등) 혐의로 구속

<26일>
민주노총, 주 40시간 노동과 작업중지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2개 노조가 7월 4일부터 전면파업 돌입하겠다고 밝혀/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받은 이도행(33·외과의사) 씨 서울 영등포구치소서 9개월만에 석방/중국,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약사범에 대한 공개재판을 열어 7백69명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백31명 공개처형/일본 나고야 고등법원, 가나자와지부 정주의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위법판결

<27일>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원등 1천여 명과 함께 1천번째 목요집회

<28일>
서울지하철공사 98년까지 시카장에인들 위해 모든 지하철 역과에 유도블럭·점자 안내판 설치키로/전남경찰청 대학재학때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민족해방계열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5·여)씨 등 전남대 졸업생 13명 긴급구속/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제3차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재권(37·금속노련 직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중공업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고씨에게 노조법상의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참원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내

<29일>
지난 19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노끈으로 목매 자살한 유기환(17·고2)군의 친구들 “기환이는 학교측의 ‘운동을 그만두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는 협박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이라며 탄원서와 결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작업에 들어가/구속수감된지 10일 남짓된 미결수 양이무개(53)씨 지난 28일 오전 9시께 다른 재소자들에게 목행당해 광주병원에서 뇌수술받았으나 의식회복하지 못한다고 광주교도소 밝혀/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노맹의 정식 조직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무죄판결받은 박정숙(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 가입부분을 두고서도 유죄판결

<30일>
‘국경없는 기자들’(사무총장 로베르 메나르), 최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독립영화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외국인노동자 10여 명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지 22일째인 1일,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 국민회의)는 당 간부회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재정작업을 위해 노동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원은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은 국내 산업입력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외국인 연수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과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법채류 외국인노동자와 직접 만나면서 이들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대책방향에 대해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과 산업기술연수제도로 감독·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당대우와 인권문제 발생으로 국제사회의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반대감정이 확산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지 철회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일본정부가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7월부터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UN의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는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윤미향 총무는 “일본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의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로비와 압력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내 위안부문제에 대해 해결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도입됨으로 국내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위축되고 노동자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상한선과 근로기간 설정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정착과 가족의 이민문제에 대한 기준 설정 △국내 인력 고용이 매우 어려운 직종에 한해 도입할 것 등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현대판 노예제 실무위원회」 UN 인권소위원회의 하나로 5명의 국제적인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으나, 지난달 17-2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한 결의문에 “최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환영하면서 주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인터넷 인권운동사랑방>에
들어오시면 만날 수 있는 국내민간단체들
경제사회연구회, 민주노총, 시민사회인터넷, 엠네스티 서울대 지부, 정보연대(SING), 한국과학기술철년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미래포럼, 환경운동연합, Pro-democracy Arts and News,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US Roles in the Kwangju Massacre
- 다음호에는 국외민간단체를 소개합니다 -

<자료>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해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월18일 발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북한 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5년 한해 동안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구속되었고 1백 50명 이상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명이 처형되었고, 아직도 약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은 UN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다.

12월에 남한정부는 80년 5월 민중항쟁 무력진압의 연루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지난 엠네스티보고서 참조). 노태우, 전두환 씨 등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새 법률에 의해 기소되었다. 노태우 씨는 재직당시 뇌물수취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국과 북한과의 무역이 이 기간동안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업인들의 북한방문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상태로 남아 있다.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을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차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노동쟁의 조정법 상 제3차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1년 8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과 상고심 기각-역주).

95년 국보법 구속자 2백여명 학생, 정치활동가, 작가, 언론인, 학

자등 2백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에게 최고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에는 60살의 고령의 양심수인 기세문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비전향 출소장기수 고 윤기남씨 장례와 관련하여-역주) 한국전 당시 북한을 위해 싸웠던, 사방한 정치범의 장례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5월에 실형 2년이 선고되었다. 그의 활동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였다고 간주되어 형이 선고된 것이다.

'한' 출판사의 유덕렬 씨와 김찬희 씨도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포함한 북한에서 쓰여진 사회과학서적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7월에 구속되었다. 그들은 양심수이다. 민중정치연합 회원 7명도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는 사노맹의 재건 활동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구속되었다. 93년 7월 이후로 민정련 회원 60명 이상이 비슷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모두 양심수이다.

북한 노동당을 지지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9월에 구속된 13명은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으로 구속되었다(남한조선노동당 재건 사건-역주). 13명의 학생은 공장에 침투하여 북한을 이롭게 할 활동을 시도했다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들도 양심수일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북한에 허가없이 방문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들도 양심수이다. 그 가운데 75살의 박용길 장로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남한으로 돌아온 7월에 구속되었다. 그녀는 심장병으로 고생하였고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 결국 박용길 장로는 구속집행정지로 12월에 석방되었다.

제3차개입 구속 여전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노동쟁의 조정법 13조 2항에 의해 계속적인 구속

과 투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법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지역의 노동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즉, 제3차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11월에 민주노총 의장인 권영길씨가 3차개입 금지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94년 5, 6월 조합활동에 관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파업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발언과 연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양심수였다.

1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간주되었다. 전국기관차협의회 위원장 서선원 씨는 6월에 항의서한 전달(엠네스티는 정부에 서선원씨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역주) 이후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도 양심수이다(1995년 엠네스티 보고서 참조).

양심수 부당대우 몇몇 양심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4월 영등포교도소 관계당국은 양심수 안재구(구국전위 사건-역주) 씨의 감방 창문을 밀폐하였다. 그래서 안씨는 짧은 운동시간 외에 전혀 햇빛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후에 창문이 있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양심수 은수미(사노맹 사건-역주) 씨는 담담 의사가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고했지만 의과 수술후 5월에 병원에서 강릉 교도소로 되돌아 왔다(북부 중앙재거 수술후 일주일만에 퇴원, 창문도 없는 독방에 수감). 엠네스티는 은수미 씨가 적절한 치료를 거부당했음을 걱정하였다.

<다음호에 남한② 게재>

AI, 인턴 모집 26일까지 신청

런던에 위치한 국제엠네스티 본부에서는 제네바, 뉴욕, 런던본부에서 인턴으로 일할 사람을 찾는다. 6개월간 근무하며, 시간은 오전9시-오후5시나 오전10시에서 오후6시중 선택. 보수는 없고, 하는 업무는 UN활동 모니터, 다른 나라 AI와의 중간연락등 사무직이다.

인턴모집은 런던본부 2명, 제네바 1명 단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은 26일까지. 또한 뉴욕 1명이며, 미국에서 일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9월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AI본부:44-171-4413-5737 제네바:41-22-798-500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

민주노총, 산재를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

95년도 발생한 실제 재해율이 정부발표 0.99%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99개 소속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산재의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재해발생자 1만1백54명 중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가 무려 72.48%(7천3백60명)로 산재보험처리 재해자 2천7백94명에 비해 무려 3.6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 사업장을 산업별로 보면 99개 사업장(생산직노동자 14만7천6백72명) 중 금속 55개, 자동차 34개, 화학 등 10개로 대부분 제조업이다. 또한 1백인에서 3백인 미만 사업장이 37.38%로 가장 많았고, 3백-5백인 미만 사업장과 1천인-5천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14.14%를 차지했다.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처리하지 않고 사업주나 개인이 치료하는 공상처리율이 50% 이상인 사업장이 조사대상의 3/4를 넘었고, 공상처리율이 80% 이상인 경우도 1/3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상처리율이 50% 미만 사업장은 22개로 전체 사업장의 1/4도 안되었다.

또한 노조가 재해발생시 및 재해 사후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의 공상처리율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의 산재은폐를 노조가 일정정도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산재은폐는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이 94년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의료보험부담 급여 환급금수를 통해서 산재은폐가 1천4백66건이나 확인되었다.

구인 통해서라도 최 전대통령 진실밝혀야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2·12 및 5·18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법정에 나와 역사적 증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상처리율(공상처리자수÷산재자수×100)

합	계	10,154	2,794	7,360	72.48%
---	---	--------	-------	-------	--------

정리해고제등 강행시 민주노총 총파업불사

2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방안'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법 등을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무분별한 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 저임금 등 근로의욕의 감퇴로 오히려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42만명 전 조직력을 가동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경쟁을 살리는 길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들에 의한 무분별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자제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산토스 씨

"동티모르에선 가족간에도 신뢰할 수 없다"

동티모르인들의 독립의 열망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라는 기대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기대 속에 지난 6월 30일 독립운동가 자신도 도스 산토스(33·동티모르 인권센터) 씨가 방한했다.

잘못하게나마 그가 전한 인도네시아의 탄압상을 통해 동티모르인들의 고통스런 식민지 생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다.

"동티모르에선 가족간에도 신뢰할 수가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족 내부에도 스파이를 심어놓기 때문이다. 동티모르인들은 모여서 학습을 할 수도 없다. 여행객들은 동티모르의 실상을 사진에 담아갈 수 없다. 안보기관원들은 이를 감시하기 위해 여행객이 외출한 사이 호텔방과 짐을 뒤지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부에 실상이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동티모르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인도네시아 경찰은 1백65명의 동티모르 젊은이들을 체포·구금했다. 이들은 6월 4일 발생한 카틀러카 이슬람 세력간의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평화시위 중이었으며, 인도네시아군은 실탄을 발사하면서 이들을 진압·체포했다. 이날 발표로 3명이 사망했으며, 연행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도 둘이나 포함됐다.

정식영장없이 체포된 이들은 변호사의 조력이나 적십자위원회와의 접촉을 봉쇄당하고 있으며, 고문에 의해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전하며 산토스 씨는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지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인권단체의 지원과 많은 홍보를 당부했다.

세계의 인권④ -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법적 '조사'와 '고문' 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아직도 '고문'을 얘기하는가? 춘향이 가 곤장맞던 적 얘기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 중 하나이며,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유엔고문관련 특별보고관은 95년 활동보고서에서 상당한 고문의 위협에 처한 4백10명에 관련된 1백13건의 긴급호소문을 43개국 정부에 전달하였고, 7백50여건에 관하여 48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달 그리스 아텐에서 열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고문에 관

한 국제회의'의 참석자들은 구타와 불로 지지는 고문이 가장 보편적인 고문형태로 남아 있을 뿐더러, 깨끗하고 향상된 방법이라는 이유로 전기고문과 잠안제우기, 고통스런 자세를 장시간 취하게 하는 고문(position torture)이 빠르게 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랍인권조직의 대표자는 "현대의 기술 덕분에 정부는 불처벌 속에서 행동하고 있고, 이 점이 고문을 멈추려는 우리의 노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많은 정부가 인권활동을 억누르는 방법 개발에는 더욱더 창조적이 되어갈 뿐더러 고문방지 수단을 취하기보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에 더 큰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많은 정부가 고문을 방지하기 보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선 어느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95년 1월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기부등 수사기관의 변호사·가족 접근금지, 잠안제우기, 집단구타 등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인권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에서 비유럽인·인종적 소수자·망명자를 구하는 난민들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부당한 총격과 살상에 경적을 울리고 있다. 영국은 전기충격 곤봉과 다리 족쇄의 수출로 자국 인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미국은 경찰의 과다 폭력으로 매년 시당국이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어주고 있

으나 책임자가 형사처벌된 예는 드물다. 그 피해자들 또한 대다수가 인도적 소수자이다. 이스라엘은 94년 5월에서 95년 5월 사이에만 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체포하여 상당수를 변호사접견없이 30일까지, 가족면회 없이 1백40일까지 구금하면서 눈을 가리운 채 구타하기, 잠안제우기, 장시간 족쇄 채우기 등을 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고문 또한 심각해, 9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은 앞서서에서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문문제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심각한 고문은 체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강간이다. 한 동티모르 여성은 서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체포되거나 매 맞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다만 강간이 두려울 뿐이다.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울먹이고 있다. 9살, 10살난 아동이 독방수용되거나 부모나 친척의 소개를 캐기위해 고문당한 예도 상당수이다. 이런 우울한 목록들을 접어두고 보면, 어느 정부나 자국법에서 고문과 여타 가혹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을 뿐더러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관련 국제조약의 당사국이다. 세계인권선언 5조(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의 정신을 따라 국제사회는 75년 고문방지선언, 79년 법집행 공무원의 행위윤리규정, 82년 의료인 윤리규약, 84년 고문방지조약, 88년 여타의 구금 또는 수감된 자들을 위한 보호원칙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에나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폭력은 용인할 만한 것으로 보는 환경이 도사리고 있다. 즉 합법적인 '조사'와 '고문' 사이에 뚜렷한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고문의 문화는 한 사회에서 얼마든지 쉽게 자라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통제와 가정·학교

에서의 가혹한 훈육이 당연시되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곳에서는 변창할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찰서와 감옥에서의 잔인성이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신이 제공하는 '면허'에 의해 공무원이 저지른 고문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저지할 의무, 사적 개인 간에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할 '수평적 의무(horizontal significance)' 또한 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문반대 운동가들은 '방패'가 아니라 '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방지와 강제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 규정이 있어야 하

며, 고문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보상과 치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백지상태의 답변과 회피를 우려하는 한편 효과적인 '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92년부터 유엔고문방지조약에 따른 선택의정서를 준비중이다. 여기서 수록할 만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했거나 그릴 위험이 있는 어느 곳이나 유엔대표가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는 규정이다. 위원회의 95년 회의에는 '보편 권한(universal jurisdiction)'(국제법상의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했건 간에 그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 내에 있을 때 어느 국가든 재판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을 들어 94년 네덜란드를 방문한 칠레의 피노체트 장군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요원한 문제이지만 영속적인 국제사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형이다.

"그것(고문)을 받아들일 때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다"는 어느 고문피해자의 상처는 우리 사회에 돌는 아프디 아픈 종기일 것이다. 【류은숙 인권교육실장】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 회, 석방촉구 위해 입국

75년 간첩혐의로 구속돼 20여 년이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수 유정식(61, 안양교도소 수감 중) 씨 석방을 위한 「유정식 씨를 지원하는 회」(대표 오카 데루오 동경대 교수, 유정식 회) 사무국장 이마오카 후미코 씨등 3명의 일본인들이 3일 입국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석방 요망서와 그동안 서명운동에 참여한 5천8백 명의 서명서도 함께 가지고 왔다.

이들은 한국 도착 즉시 법무부 보안 2과장을 만나 서명서와 석방 요망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려 했으나 법무부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6일 오후 본국으로 떠날 때까지 여야의원들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전할 예정이다. 유정식 회가 92년 생간 이후 회원들은 1년에 2-3차례 유 씨와 면회를 시도

하고, 법무장관과 정치인들에게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면회는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되었다.

이마오카 후미코 씨는 "유정식 씨는 현재 심한 고문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특히 유 씨가 형 만기일이 2년 6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속한 석방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씨를 가르쳤던 일본인 교수 와타 쇼우난 씨등은 석방 요망서를 통해 "유 군은 모국의 축산과 농업의 장래를 내다보며 연구 사업에 헌신했고 함께 배운 사람들은 모두 그의 정열에 감명을 받았다"며 "조속한 석방으로 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면 귀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식 씨는 67년 12월 건국대학교 축산대 4학년 재학중 축사기술 연구를 위해 일본에 갔으며 68년 복한에 다녀온 적이 있다. 같은 해 동경대 대학원 농업생물학과 연구생으로 들어가 공부를 마치고 70년 귀국했으며, 5년 뒤 재일동포 등 7명과 함께 학원-정계 침투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유정식 씨를 제외하고 당시 함께 주범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달남 씨는 77년 특별사면되었고 나머지 6명도 모두 10여년 전에 석방되었다.

한편 유 씨는 95년 8·15 광복절 특사로 20년 감형을 받았으나, 85년 옥중에서 읽은 일본잡지 <문예춘추>에 기재된 북한기사를 다른 수행자에게 얘기한 것이 발각 되어 반공법으로 추가형 3년을 선고받아 99년에 나 형이 만료된다.

유 씨의 가족들에 의하면 재판 이후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뒤 유 씨는 정신분열증과 실어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인 공포증과 기피증이 심했다. 심지어 면회 온 가족과 담당교도관, 다른 재소자들을 중앙정보부(원안기부) 수사관으로 오인해 피성을 지르고 전신을 떨기도 하는 등 정신분열이 심

한 상태였다고 한다. 현재 유정식 씨는 89년 안동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타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편지로나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밤낮으로 벌레우는 소리, 바람소리 등 환경이 들리는 이명현상을 앓고 있으며, 허리디스크와 신장염, 시력장애 및 청각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남북합의 이행촉구 종교인 전국순례 마감

지난 6월 25일 제주도에 출발한 종교인들의 순례가 4일 저녁 서울지역 종교인대회로 마무리됐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등 4개 종교계가 공동 주최한 이번 순례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91년 남북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전국 12개 도시에서 종교인대회를 치르고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서울대회에 앞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진 종교인들은 △남북합의서 정신에 따라 북한 수해동포돕기에 적극 나서줄 것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는 93년 4개 종교계의 성직자들로 구성됐으며,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지선 스님, 김현 교무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인터넷 인권운동사랑방>에 들어오시면 만날 수 있는 국내민간단체들
경제사회연구회, 민주노총, 시민사회인터넷, 엠네스티서울대 지부, 정보연대(SING),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대력토리, 환경운동연합, Pro-democracy Arts and News,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US Roles in the Kwangu Massacre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3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소장 김경열)는 '지방자치체 실시 1년, 장애인 관련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책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는 장애인 관련 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했으나 재정의 취약성과 지방간의 편차로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몇 가지 조례가 제정되어도 법 자체의 문제점에 의해 실효성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의 조례인 광주시의 자판기 관련 조례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기존 상조회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해 별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이 제자리걸음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 경우 장애인 단체의 정책참여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현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지부 기획과장은 "제주지역에서 장애인 복지 조례 제정 및 개발채권 이익금 등을 통한 재원 확보와 총 9인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장애인단체대표가 4인이 참석하게 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위반 연행 전학투련 또 1명

수배를 받아오던 전국학생투쟁연합 의장 여성오(서울대총학생회장, 국사학과 92학번) 씨가 4일 오전 10시30분 신림 9동에서 시경 소속 형사 10여 명에게 연행되었다.

연행당시 여 씨는 수행원 3명과 승용차 안에 있었는데, 경찰들은 구속영장의 제시도 없이 여 씨의 팔과 다리를 든 채 강제로 구인했다고 한다. 그뒤 여 씨는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체의 면회를 금지당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23, 27일 전학투련 소속 명원창(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씨등 2명이 전학투련 결성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전해투 후원회 모집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위원장 나현균, 전해투)가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후원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한 달에 1천 원이나 1년에 1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후원회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전국 단위노조 및 전해투 상황을 우편이나 모뎀으로 전송한다. 계좌번호:국민은행 820-01-0159-668 김세균

복지합의 불이행 대우해고자 상경투쟁

89, 91년 해고된 부산 대우정밀(사장 권오준) 해고자들이 94년의 해고자복지 합의각서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우정밀 해고자들과 대우그룹측은 94년 합의각서를 통해 89년 해고자 3명은 올해 5월말까지, 91년 해고자 35명은 계열사에서 1년 내지 2년을 근무한 뒤 원직 복귀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우정밀은 약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들

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정밀 노사팀 관계자는 "94년의 합의각서는 대우정밀 노사간의 합의서가 아니고 해고자들이 그룹측과 맺은 비공식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전원복직은 힘들겠지만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마포 민주당사에서 농성중인 대우정밀 해고자 복지실천협의회(의장 박종석·33) 해고노동자들은 오늘 오전 11시반 여의도 대우증권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복지합의서 이행 및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할 예정이다.

행사와 동정

-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7월5일(금) 오후2시-4시
 - 장소:국회 소회의실
 - 주최: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동대책위(319-8955)
- 지역운동 발전을 위한 서울민주시민연합 하루집회
 - 일시:7월6일(토) 낮1시-밤11시
 - 장소:광화문 도림빌딩 지하 노블 호프(737-7054)
 - 주최:서울민주시민연합(392-5321)
- 여성노동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 일시:7월8일(월) 오후2시-6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민주노총, 노총, 여연(273-9535)
- 평화와 통일을 여는 그림마당
 - 전시기간:7월10일(수)-14일(일)
 - 개막전:7월10일 오후6시
 - 장소:인사동 이심일세기화랑(735-4805)
 -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45-5872)
- 노후복지센터 개원축하식
 - 일시:7월11일(목) 오전10시30분
 - 장소:노후복지센터(363-8005)
 - 주최:한국노인의 전화(722-8007)
- 조각간첩다큐멘터리 비디오 테이프 판매
 -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조각간첩인 신귀영(60, 80년 간첩혐의로 구속) 씨 사건을 비디오로 제작, 7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영어로 더빙이 된 비디오도 있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천주교인권위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777-0643
- 노인의 전화 회계자원봉사자 모집
 - 한국노인의 전화는 회계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문의 722-8007
- 재가노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 서울 송파에 위치한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고 말벗이 되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음. 문의 203-3677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정부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서 밝혀

민간부문의 96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현재 경제위기는 노동자의 고임금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축적소유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 확장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중 정리해고제 등은 노동자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와 노동자 생활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직접 만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가 활동도 하기 전에 정부 독단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것

은 예초 노사관계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평화적으로 협상을 끝냈을 만도기에 노조 김창한 위원장의 수배조치 철회와 구속된 복진길 수석부위원장 등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한진중공업 사용주가 요청한 일방중재 철회, 그리고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재벌들의 구시대적 의식과 행태를 포기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주의 이익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검·경찰의 중립과 원래 구성 취지에 맞게 노개위가 활동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자신과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히던 딸의 동거남을 살해, 구속되었던 이상희(72) 할머니의 5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옥)는 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공판 결과에 대한 평을 발표해 "이상희 할머니가 집행유예로 결정된 것에는 환영하지만, 재판부가 할머니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의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여성계가 앞장설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피해여성들이 또 다른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여성단체들은 이상희 할머니 구명운동을 시작하여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서명과 탄원서 제출, 재판 방청인단 조직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희 할머니는 지난 4월 딸의 동거남을 살해하고, 5월 7일 구속되었으며, 지난 달 21일 검찰은 법정 최저형인 정역 3년을 구형했다.

등 도입을 막기 위한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 더 나아가 각 시민사회단체와의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동티모르에도 위안부 19일 동티모르 모임

4일 저녁 7시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동티모르 국제회의의 보고회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조용환 변호사는 △유엔 동티모르 특별위원회 설치 △인도네시아 군 철수 등의 결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티모르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 강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기아자동차가 생산을 맡기로 한 인도네시아 국민차의 명칭이 '티모르'로 정해져 동티모르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내용 등이 관심을 끌었다.

이어 벌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동티모르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것에 뜻을 같이하고, 19일 저녁 6시 천주교인권위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인터넷 인권운동사랑방>에
들어오시면 만날 수 있는 국내민간단체들

경제사회연구회, 민주노총, 시민사회인터넷, 엠네스티서울대 지부, 정보연대(SING),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미래포럼, 환경운동연합, Pro-democracy Arts and News,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US Roles in the Kwangju Massacre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 회관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공청회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현실화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입법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석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노동자가운데 단 5.8%만이 합법 취업자이며, 불법법 상태인 산업기술연수생 36.7%, 불법체류자 57.5% 등 현실적으로 95%에 가까운 숫자가 불법 노동자에 해당한다.

박 소장은 "이들의 장기체류를 무조건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부작용만 안산할 것"이라며 "8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체류자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론 인권보장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수퍼 어글리 코리아'라는 불명예를 당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도 노동력이기에 앞서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력이 앞서 사람"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연수생제도가 이미 실패했으며, 이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연수생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사·공익단체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노조가 적극적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며 "그 속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를 통해 국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도정책, 노조 참가해야 외국인력 도입시 국내노동자의 실업문제, 노동조건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나타난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박석운 소장은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조건 속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등, 공동기자회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장 김상곤)등 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전국연합 의장)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제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시급히 해결할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측의 요구만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7개 단체들은 △노동자의 근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제도와 정부의 시도 철회와 △노사관계 개혁이 노·사간의 요구를 상호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맞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확고한 원칙 천명, 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 등이 기본입장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독자 투고 715-9185

○ 인권간행물 ○

- 「민족예술, 7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 주요내용:21세기 문화복지, 무엇이 보이는가/지금 우리가 연대할 필요, '푸른영상' 사태를 보며/사전심의폐지 기념공연 <자유>를 보고 등 84쪽.
- 「국제엔네스티, 7.8월호-AI 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아무도 안전하지 않는 나라: 중국/개진 약속과 버려진 목숨들, 러시아 연방 등 27쪽.
- 「우리교육, 7월호-우리교육(730-1521) · 주요내용:교실을 토론의 장으로 일구는 교사/전교조 7주년 기념 교사대회/청소년의 유행과 소비 등 183쪽.
- 「고난함께, 제45호 -고난 모임(393-4662) · 주요내용:국보법 폐지, 모든 양심수 석방, 사상전향제 종식 권고/아내를 한 번 때리는 것쯤이야!/안기부직원, 그뻘 어쩔수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 미안하다! 등 42쪽.
- 「신문로 포럼, 통권32호-신문로 포럼(733-0969) · 주요내용: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하라/정부예산 0.4%로 청소년 문제 해결될 수 없다/더 이상 복지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등 45쪽.
- 「노동사회연구, 제7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 주요내용:미국의 노사관계 개혁과 던롭위원회/덴마크노조의 교육체계/독일의 산별적 임금체계 등 131쪽.
- 「한울노동법강좌, 15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 주요내용:통상근로와 같은 숙직근로, 야간연장수당 주어야/사용자 지휘감독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일숙직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등 70쪽.
- 자료집:「민가협 제8차총회보고서」-민가협(763-2606) · 주요내용:양심수 현황/감옥 인권실태 보고서/양심수 명단/출소 장기수 종합검진 보고서/무연고 출소장기수 주소록/양심수후원회 회칙/구치소·교도소 주소록 등 68쪽.
- 자료집:「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한국성폭력상담소(576-7128) · 주요내용:어린이 성폭력 실태/어린이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 정신의학·사회문화·법제도적 측면에서 등 81쪽.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8일 노동·여성계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유연화 정책중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 등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약 2백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발제와 토론을 맡은 참가자들 간에 치열한 상황에 따라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정가자(여연 노동위

원회 위원장) 씨는 "오랜기간동안 여성노동운동계는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90년 초반부터 실시한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 논의로 여성들이 비정규화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구체적인 유연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 김영대(민주노총 노동특위 위원장) 씨는 "유연화 정책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주부와 고령자등 비정규노동력으로 충원하는 정책으로 여성노동력은 인

력도 쓰고 버릴 수 있는 주변노동력이 되며, 이렇게 주변화된 임시직 여성들이 노조 등과 같이 조직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한국경영인총협회 상무) 씨는 "여성노동자가 주변화되는 것과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도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중대와 경력자를 배출하는 하나의 훈련통로로 이용된다"며 파견제 지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성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하나가 노동법상 여성이 과보호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개혁위원회(노개혁) 위원인 임종률(성균과대) 교수는 "군사정권시절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위압적이었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는 생리휴가등 여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 사실"이라며 "노개혁에서는 공평성 원칙에 입각해 이렇게 지나친 차별 조항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7월9일(화) 권영길, 제3차개입금지등, 오후2시, 단독5부, 320호 속행 김기용, 국가상대 손배소송, 오전10시, 민사지법 559호
- 7월10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서형준, 국보법, 오후2시, 단독4부, 524호 선고
- 7월11일(목) 전두환의 15인, 반관수괴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서미연, 국보법, 오후3시, 단독3부, 317호 선고
- 7월12일(금) 명원창, 국보법, 오전11시30분, 단독5부, 519호 선고 양규현, 제3차개입금지등, 오후2시, 단독4부, 524호 속행 전상훈,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이기주,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선미, 국보법, 오후3시30분,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충렬, 국보법, 오전11시, 단독9부, 317호 선고 허인희,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김기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정미은,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오치근,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손영우의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상 서울형사지법

위를 현재보다 떨어 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들의 58%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며, 생리휴가를 몇몇하게 사용하는 여성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남성중심의 성의식" 성폭력 여학생 왜곡보도

최근 잇따른 여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8일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성폭력피해 여학생 출신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10개월간이나 숨기면서 임신사실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일로 학교마저 자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은 10대의 문란한 성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성폭력상담소는 비난했다.

또한 소녀가장 성폭력 사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의 기울일 것과 다른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개념을 혼돈하지 말아야 하며 적어도 여성노동자의 지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적자에 허덕이는 <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인칼날 '진보'단체 겨냥

'좌경, 폭력학생 엄단'이라는 정부방침하에 학생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적단체를 단속한다는 공안기관의 칼날은 친북이나 비합법이나의 관점을 넘어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공개조직에까지 미치고 있다. 울들이 사회주의학생연합, 전국학생정치연합 등에 '엄단'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학생운동권 내 온건우파로 평가받던 21세기 진보학생연합까지 이적단체 혐의로 구속사태를 맞았다.

지난 6일 오전 서울시경은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의장 송상교, 21세기연합) 활동과 관련, 제1기 의장이었던 이종석(외국어대 87, 학원강사) 씨 등 12명을 이적단체 결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이 가운데 이채주(서울대 90, 병역특례 과정) 씨가 불구속으로 7일 석방됐고 나머지 전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세기연합은 지난 94년 진보학생연합, 진보정치대학생연합, 생활진보대중정치대학생연합 등 3개의 공개 학생정치조직이 통합·결성된 단체로 교육개혁, 참여정치 등을 활동목표로 삼아왔다. 80년대 연열(NL)과 피디(PD)로 대표되는 이념구도를 거부하고 '다양한 진보와 구체적 실천을 추구한다'는 21세기연합은 현재 전국 40여 개 대학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반북·친북 모두를 반대하는 21세기연합에 '한국단' 단체를 이롭게하는 이적단체'라는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한 관계자는 "경찰이 내부 책자의 몇몇 구절을 끼워 맞춰 조직 강령으로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혐의 적용에 어처구니 없음을"이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활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결혼 후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사 또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 등 이미 활동을 끝낸 전 간부들에 대해서 까지 칼날을 휘둘렀다.

<구속자 명단> 이종석, 최성진(중앙대 90, 학원강사), 이철원(서울대 89, 공익근무요원), 박범용(* 91), 권경원(*), 송상교(*), 홍 선(*), 이기진(상명대 92), 한광웅(서울교대 91), 차정애(한성대 91), 최혜범(한신대 90),

중부지역당 사건 구속 과거 들추기 여전

홍기훈(31·수원연합 홍보부장) 씨가 92년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혐의로 지난 2일 연행·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일 새벽 6시경 홍 씨는 우유배달 중 동네아귀에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택수색을 통해 컴퓨터, 디스켓, 서적 등을 압수당했다. 그는 현재 청주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부인 환경임 씨는 "92년 사건발생 당시는 피했는데,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인한 구속이 있따르는 것을 보고 인젠가 연행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생활수입은 남편이 우유배달로 벌어들인 것이 전부로 한 씨는 "노부모와 8개월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양혜우씨 보석

양혜우(31·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씨가 지난 6일 구속 한 달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양 사무국장은 지난 달 6일 김해성 목사의 구속으로 성남 경찰서에 가서 면회를 요구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주/간/인/권/호/름

(96년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1일> 전남경찰청, 남송린 산하 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각 대학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6)씨 등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거제연락소 양귀성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충남 아산시 신장면 오목리 이아무개(11·소녀가장) 양 마을사람 12-14명으로부터 4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 성폭행/헤이그 유엔전범재판소, 보스니아 내전중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병사들이 이슬람계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밝혀/독일 헌법재판소, 나치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 개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3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정부가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못 밝혀/민주노총, 99개 노조를 대상으로 95년 발생한 산재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발표인 0.99%보다 산재를 3.5배 높아/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한국인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군속 헨리 매켄리(36·전기기술자)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안기부,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칸수(50) 씨 간첩혐의로 구속

<4일> 국제자유노련, 김 대통령에게 노동자 석방과 해고자 복직 촉구하는 공개서한 채택/광주지법 사노맹 호남위원회 재건 혐의로 6월초 구속된 이호성 씨등 10명 보석과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풀려나/서울경찰청 서울대 총학생회장 여성오(24·국사4, 전국학생투쟁연합 의장, 수배중) 씨 폭력적인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긴급구속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연옥 부장판사), 이상희(72·여) 씨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말일경찰청장 경찰의 중립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전국 경찰관서에 보내

<6일>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중생이 교실에서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다가 출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7일> 노동부·법무부 출입국 발표, 5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 인취업자수는 모두 16만7천5백63명이며, 이중 59.8%인 10만1백48명이 불법체류자

<해설>===== 매년 적어도 두 차례씩 한국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유정식씨를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장 이마오타 후미코씨는 언제보아도 자그마한 몸집에 은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다. 그가 지난 주 또다시 한국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75년 간첩혐의로 구속된 20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유정식(61)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5천8백 명의 서명지를 들고왔다. 이밖에도 일본 내에는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모임이 많다. 이들은 20년을 한결같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이다. 꾸준한 이들의 활동은 생색내기, 언론알리기 사업에 연연하기 쉬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학교내 성폭력 이제 드러낼 때” 신양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

유치원 원장이 성교육을 벌이던 원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하고,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학교에서 양수가 터져 출산을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오늘. 신양중 교장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모였던 「황수연 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 등, 공대위) 17개 인권·여성·교육 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이상 이러한 사건이 호지부지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적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 안전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수호(전 교조 서울지부장) 선생은 “숨겨진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 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들이 극히 예외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대 문제”가 있다”며 “더 이상 가해자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로 더 많은 우리들의 아이가 병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3.5%, 교사에 의한 성폭행 또한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95년 상담한 전체 1천21건의 성폭력 상담 중 3.5%인 36건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었다”며 “교사가 직접 성교육을 받

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교과과정 내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현재 언론들은 피해자 유발론과 같이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보도를 요청했다.

성폭력예방교육 필수화 공대위측은 정부당국에 신신양중 전교장인 황수연 씨의 구속과 안산 우성유치원 등의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치료 △각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성교육 전담상담교사의 체계적 양성과 성폭력예방교육 필수화 △성폭력을 조장하는 소비·향락을 요구했으며, 이후 교육부 장관 면담과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기로 했다.

유치원 원장, 집단적 성추행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안산 우성유치원 사건 대책위원회(대표 김명수)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해 유아에 대한 성폭력 행위 처벌 규정 강화와 범국민적인 성폭력 추방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중현(피해 원아 아버지) 씨는 “아이가 아침에 차를 태워줄 때마다 싫다고 울고 불고 해 때려주고 했는데,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일찍

오는 아이부터 원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듣고서야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그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우성 유치원 원장 정태영 씨는 예절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남녀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서로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현재 정 씨는 한 아이에 대해서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 피해 원아생 38명이 안산 본오파출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눔의 집 여름캠프

나눔의 집에서는 '역사 바로 알기-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여름수련 캠프'를 8월 3-4일, 10-11일 두 차례에 걸쳐 갖는다. 이번 수련 캠프에는 정신대 영화상영,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감상, 강연 등이 마련되었다. 장소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수련관이며, 청소년이나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인원은 30명, 회비는 2만원. 문의: 0347-64-0064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

60대 교사가 10살 제자 지속적인 성추행

◎10살 여아를 3학년부터 60대 담임교사가 계속 성추행을. 만지기도 하고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도 함. 협박하여 얘기를 못함. 담임이 바뀌었는데도 특별반에서 계속 마주침. 멍하니 앉아있고 깜짝 놀라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보여 부모가 알게 됨. 교장에게 알리자 선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직서를 받음. 학교에서는 고발하면 직무유기로 학교가 책임 문책당하니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유도. 그러나 검찰에 사건 접수시키고 교육청에도 진정함.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찾아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지만 법정에 세우고 싶다고 함. 고소후 수사 중. (96.5)
 ◎중2 유도부원으로 시험전 체중을 재는데 선생이 1-2킬로가 넘는다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고 체중 재라 함. 유도협회에 문의해보니 옷무게는 따로 재서 빼는 것이 관례라고 함. (96. 5)
 ◎여고때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앞에서 자취했는데 기혼교사가 지속적으로 강간. 졸업 후에도 집앞에서 기다리는 등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대처방안을 문의. (96.5)

◎고2 여학생인데 사귀는 오빠와 여관에 들어가다가 선생에게 들켰는데 이를 미끼로 3번이나 성추행을 당함. 학교에 안가려고 해서 부모가 알게 됨. (95.7)
 <자료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 마창의장 구속 3년전 업무방해 혐의

민주노총 마창지역협의회(마창지부) 의장 홍여표(35) 씨가 지난 5일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홍 의장은 지난 6월 28일 (주)한국산본에서 발생한 해고자와 직원들간의 충돌사태 때 회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3년전 효성중공업 해고자로서 회사 출근투쟁을 벌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이에 마창지부는 △3년이 지난 내용을 문제삼는 점 △홍 의장이 95년 8월 창원경찰서에 출두조사 당시 별다른 사법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검찰(담당검사 윤운걸, 창원지검)의 지휘하에 전격 구속한 것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28일 홍 의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박 아무개(26·한국산본) 씨는 "상처도 가볍고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고소취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외부압력을 의식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행동계획, 민간참여 보장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9일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권태준 등, 한국민간위)는 지난 달 1-1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회의 참가 보고대회와 한국도시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권태

준 공동대표는 "회의 기간 동안 한국민간위 활동이 어느 때 보다는 활발하고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제 국가행동계획에 우리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환경 등 각 분야별 토론을 통해 한국민간위는 주거권이 채택된 행동강령을 국내에 반영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인간의 권리 존중과 인간중심의 개발정책 수립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논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와 투명성 보장 △정부가 인정한 주거권의 법적 보장 등을 요구했다.

NHK 위안부 방영 취소 범무성 비밀취재 필미

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일본 NHK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프로그램을 중지하는데 대해 NHK회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정대협 등은 지난 3,4월 NHK 프로그램 제작국 디렉터로부터 8월로 예정된 '위안부'문제 특집 프로그램 취재협조를 요청받고 응했으나, 지난 2일 돌연 제작 중단 연락을 받았다. NHK 측은 "일본 범무성의 허락 없이 위안부 자료를 비밀촬영했기 때문에 제작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비밀 취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은폐해 왔기 때문"이라며 "진실 전달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포기한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자료>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8월 25명의 정치범을 포함한 1천8백여명의 죄수들이 특사로 석방됐다. 그 중에는 70세인 김선명 씨와 65세의 안학섭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51, 53년부터 수감되어 있었다. 적어도 25명 이상의 장기수들이 과거 정권에 의해서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고, 그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며 여전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으며 오랜기간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수감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장형 씨는 84년 6월 구속된 이후 87일 간 경찰청 보안국에 의해 심문당하는 동안 고문을 받았다고 전한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황대권 씨는 85년 6월에 체포된 이후 안기부에 의해 60일 동안 접견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기간동안 황대권 씨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7월에 황대권 씨와 8명의 다른 장기수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항의와 요구조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정치적 피의자들이 경찰청과 안기부에서 심문을 받는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술서에 사인을 하라며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복종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2월에 살인죄로 기소된 3명은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그들의 자백이 고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석방됐다(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역주). 4월 63세의 박창희 교수는 구속후 19일 동안 안기부에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매질과 위협을 하고, 술을 마시게 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8월에는 서울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박영생 씨가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발가벗겨져 결박당한 채 동등이로 매질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살인죄로 복역중이던 19인이 11월 1일 처형되었다. 그 중에 90년 8월 구속된 후 매질과 고문에 의해 자백했다고 한 김철호 씨도 포함돼 있다.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도 50명이 있다.

그 해 동안 엠네스티는 줄곧 국보법의 개정과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를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지난 수십 년간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근절 그리고 구속 후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사형수들의 감형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6,11월에 남한에 관한 보고서 발행했다. 또한 11월에 국제엠네스티 한국방문 대표단은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안기부 부부장 등과 현안에 관해 토론하였다. <번역=인권정보자료실 제공>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산 계양전기(사장 이상익)의 관리자들이 조합원들과 지역 노동자들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양전기 노조(위원장 윤옥동)는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경 김문영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리자 80여 명이 반월공단 노동상담소에 난입해 상담소에 있던 노동자 15명을 집단폭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폭행으로 신인철(경기노련 안산지구 사무차장), 윤관중(대원산업노조 조직부장) 씨 등이 전신 타박상과 허리 부상 등을 입었다고 노조측은 전했다. 그러나, 계양전기 총무과 대리 김 아무개 씨는 "몇몇 외부인이 자꾸 3자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방문했던 것"이라며 "단순한 몸

싸움이 벌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경찰서는 당일 현장에서 51명의 관리자들을 연행했으나, 이튿날 모두 석방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들이 출두해 조서를 꾸민 뒤에나 검찰 지휘하에 영장발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양전기는 해고된 윤노조위원장의 복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6월 10일부터 부분파업이 진행되자 회사측은 25일 직장폐쇄를 신고했고, 현재 총조합원 3백여 명 가운데 핵심 조합원 53명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직장폐쇄가 진행중이다. 현재 회사출근을 저지당한 조합원들은 안산역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아침

마다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회사측의 노조와해에 맞서 조합원들의 힘만이 아닌지역이나 금속연맹 차원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양전기 사태와 관련, 경기남부지역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12일 안산역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공안탄압 중지 단식 광주교도소 양심수

광주교도소내 기결사동 양심수 3명이 최근 급증하는 공안탄압의 중지 등을 요구하며 9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양무(광주전남연합 조동위), 송진환(92년 남총련 의장), 박경근(94년 광주대 학생회장) 씨 등 3명은 △학생들의 대량검거·구속 중지를 용공과경색력으로 매도하는 정부당국의 탄압 중지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보안법을 철폐 등을 요구했다.

다. 한편, 강정희(94년 전남대 총여학생회장) 씨 등 미결수 8명도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시한부 단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49명인 광주교도소내 양심수들이 동조단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김명희】

정리해고제 반대 현충리, 경총 항의방문

10일 오후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영희) 산하 조합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정리해고제 도입 중단과 해고자 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첫째, 잘못된 노동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속자나 해고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정리해고제는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은 자주생들의 대량검거·구속 중지를 용공과경색력으로 매도하는 정부당국의 탄압 중지를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보안법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아래 지로로 납부를 구독료 월1만원

적자에 허덕이는 <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인터넷 인권운동사랑방>에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해외민간단체들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북한수해돕기 인터넷 캠페인 Help North Korean Flood Victims : News /일본군 위안부 문제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The Comprehensive Human Rights Initiative Home Page/Amnesty International On-line/Human Rights Resources/DIANA -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tabase/Human Rights Web/Australian Human Rights Page/Solidaritygroup Political Prisoners/Human Rights Watch/APC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Greenpeace/EFF (Electric Frontier Foundation)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강의 시 한국지부, 전국교육대회 가져

지난 6, 7일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96년 전국교육대회가 대전 가톨릭회관에서 엠네스티 회원을 비롯한 불교인권위, 청소년개발원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교육대회에서는 한상범(동국대 법대) 교수의 '인권보장과 동양사상'이 발표돼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한 교수는 시민혁명의 성과로서의 인권보장제도가 정착된 서양의 사상과 아시아에서의 인권제도 및 한국의 인권사상 전개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의 인권사상의 전개'에 대한 한 교수의 이번 강연은 '인권의 역사'하면 서구의 역사를 떠올릴 정도로 국내에서 인권의 역사에 대한 논의는 깊지 못한 현실에서 의미를 띠고 있다. 그는 한국의 인권사상의 흐름을 실학과 개화사상, 기독교의 전래, 동학과 3·1운동 이후의 불교개혁운동 등의 순서로 짚어나갔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같은 정치·경제적 강자를 둔 사회에서 인권문제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인간에 대한 진실과 성실성에 의한 접근을 통해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다음호 게재>.

이밖에도 '한국정부의 인권정책 비판'(이대훈 참여

연대 사무국장), '동북아 인권상황과 엠네스티 국제사무국의 역할'(클레어 맥베이 엠네스티 국제사무국 동북아팀 담당자)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학살자 재판거부 비난 전국연합·참여연대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 학살자들이 재판을 거부하자, 전국연합(상임의장이장복)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5·6공 시절 각종 시국사건의 양심수 재판에서 강압적 재판진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독재자들이 재판을 거부한 것은 기막힌 현실"이라며 "참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용서도 거론될 수 없고, 사회일각에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사면설이나 해의당명설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이 져야 한다"며 "국선변호인만으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국선변호인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오늘 김해성목사 재판, 교계원로 석방촉구

지난 6월3일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 단입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된 김해성 목사의 1심 재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0일 박형규 목사, 박종화 목사, 김동완 NCC총무등 교계원로 1백인은 김목사의 1심 재판에 즈음하여 "김목사의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1. 인권보장제도와 그 수용의 문제

(1) 비서방 사회의 근대 법제의 수용의 과정
'근대화'라고 하는 말은 서방사회가 르네상스 이래 종교개혁과 계몽시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룩한 체계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에서 인도의 식민지화와 중국의 반(半)식민지화가 그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근대화'해야 한다. 개개인을 인간으로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근대적 인권의 사상과 제도는 농경사회 신분지배의 상하주종의 윤리와 특권자적 지배질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2) 천부인권과 저항권 사상의 제도화 - 시민혁명의 성과로서 인권보장제도의 정착화

아시아의 근대화에서 서양의 문물제도를 들여오면서 법제의 일환인 인권보장제도를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서양의 시민적 법제의 기본은 자연법으로 나타나는 정의의 법과 악법에 대한 저항권을 기점으로 하는 인간존엄의 사상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구지배층이 지배하고 있는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하는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 이념적으로 정당화한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1689)은 천부인권으로서 생명 자유 및 재산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제시한 것이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은 바로 로크의 저항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서양의 근대시민혁명 성과인 입헌주의의 인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든 이념을 제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문헌법을 통해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정하고 정부권력의 인권보장 책무를 명시하였다. 나아가서 만일 정부의 권력남용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될 경우에 악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기의 인권을 보존 실현하는 정치의 주체로서 지위가 주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부터 근대법의 권리 보장구조는 권력자에 대한 불신과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 통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 운영의 구성을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주권자로서 주체성을 견지하지 못하면 인권제도는 헛바퀴를 돌리게 된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제기한 이념은 교회 및 왕권신수설의 지배로부터 세속적 국가의 해방, 신권정치로부터 개인의 내면과 외면에 걸친 해방, 혹은 인간의 자율과 자립이었다.

서양에서 몇 백년의 진통과 유혈 끝에 왕을 죽이고 교회의 권위와 특권을 거세하면서 이룩한 혁명을 통해서 왕이 신이 아닌 보통사람과 같은 생물이며 교회의 권위나 특권은 시민이 인정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원체현을 통해서 노예정신의 사슬을 끊어 버릴 수 있었다. 아시아는 그러한 노예정신의 청소작업 없이 수구 반동사상을 온존시킨 채 서방의 외견적 제도 수입으로 시대 발전의 물결을 피해 보려고 한 지배층의 논리를 방치한 채 아시아 본래의 정신유산을 사장시켜 왔었다.

<다음호에 계속>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청년운동단체 비상

에국크리스찬청년연합 13명 또 연행

지난 6일 [21세기 진보 학생연합] (의장 송교상) 회원 12명이 연행된데 이어 11일 오전 에국크리스찬청년연합(의장 이재용, 예칭) 간부와 회원 13명이 시경 소속이라고 밝힌 수사요원들에 의해 장안동 분실로 연행됐다.

연행 당시 함께 있던 이윤진(이재용 씨의 부인) 씨가 "국보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연행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비춰볼 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년운동 단체들의 연행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호국(한청협 대변인) 씨는 "좌익·폭력학

생 집단 명령 이후 일선 경찰들이 경쟁적으로 청년운동단체를 대상으로 연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안정국이 적어도 8-15 범민족대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예칭은 개신교와 천주교 소속 청년들이 모인 단체로 지난 87년 구성되었으며, 구성 당시에도 국보법으로 이재용(31·직장인), 정동희(35·예칭 창립회원, 고려G & M 대표) 씨 등 3명이 연행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그뒤 10년 가까이 지역 통일운동을 해왔으나 경찰은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아 왔다.

<구속자 명단> 이재용, 정

동희, 유영재(36·예칭 부의장, 사회복지센터직원) 김상진(31·예칭 조직국장) 홍덕희(33·회사원) 박경수(27·신홍전문대 학생) 전경희(28·예칭 사무국장) 권일찬(28·병원원무과 직원) 김형태(29·예칭 재정부장) 이영건(28·보험회사 직원) 이지연(25) 양준석(33·전 의장, 빛두레신앙학교 간사) 권희수(26·성관대생)

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

'표현의 자유 쟁취 및 음비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

(공동대표 이장호 등)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명동성당에서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거리 불법 상영제'를 열기로 했다. 독립영화의 취지와 의미, 음비법·영화법의 문제점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상영제엔 푸른영상 등 독립영화단체와 각 대학 영화모임 등이 참여한다.

김태일 대책위 사무국장은 "독립영화는 자본과 검열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저항·실현 정신을 갖는 것에 기본 취지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푸른영상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상영제와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첫 상영제에선 <상계동울림> <백색인> 및 이성강 씨가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단병호 씨 만기출소

민주노총, 15일 환영회

단병호(48·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는 15일 밤 11시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다. 당일 민주노총은 환영식을 가질 예정이다.

단 위원장은 93년 현대중공업 임·단협 투쟁때의 활동을 빌미로 95년 7월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구속됐다. 지난 4월에는 4월 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금속연맹 사무국장 조명래 씨 등 2명이다.

"외국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김해성 목사 공판 참가기...징역 2년 구형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청 3호 법정.

수십 명의 신도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미색 수의를 입은 김해성 목사가 재판정에 등장했다. 한달 여의 구금생활 때문인지 수염이 덩수룩하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지만 여전히 여유있는 웃음과 자신감이 얼굴 가득했다.

김 목사는 한달 간의 구금생활에서의 심경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견해를 차분하고 또렷하게 전달해 나갔다.

"포수에 묶인 모습 그대로 외국인노동자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세계 인권선언, ILO조약 등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국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등 노동에 대해 동등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공무집행을 제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교회에 또다시 공권력이 난입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목숨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며 법이라는 명분 때문에 불의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다는 그의 엄숙한 선언에 청중은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을 보장하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제정만이 결론입니다"며 김 목사는 모두진술을 마쳤다.

검사실에서 나즈막한 목소리로 구형이 떨어졌다. "징역 2년에 처해주시쇼"

오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김 목사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지 못할 듯하다.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 미 백악관 보고서 밝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과테말라 인권침해와 연루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 6월말 백악관의 한 위원회는 "CIA의 정보원이 과테말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유린(살인)에 참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80, 90년대 CIA에 고용된 과테말라 정보원들이 암살·고문·납치 등을 저질러 왔으며, CIA 관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 엠네스티는 "CIA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엠네스티 라틴아메리카국장 살리나스(Salinas) 씨는 "CIA에 의해 미국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CIA 업무 지원을 중단하고 CIA 정보원 채용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과테말라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는 90년 미국 시민 마이클 데빈(Michael Devine) 씨와 92년 과테말라 게릴라 지도자인 에프레이마 바마카(Efraim Bamaca) 씨가 살해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94년 10월 미국인 변호사인 바마카의 아내 하버리(Harbury) 씨는 남편 실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32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여 백악관으로부터 진상조사 약속을 받아냈고, 지난해 3월 바마카가 고문당한 뒤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동아일보 7월 3일자 참조>.

83년 온두라스에서 실종된 카르니(Carney) 씨의 누이 코놀리(Conolly) 씨는 CIA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며 "인권유린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사한 자들을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해 석방 탄원 김추기경, 청와대에 서한

12일 김수환 추기경은 박노해 씨의 석방을 탄원하는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하고 다음주 초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 추기경은 서한에서 "8·15 광복절에 박노해 시인의 특별석방을 청원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최근 직장암으로 4차례의 수술을 받고 병환중에 있다"며 "박노해 시인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새출발을 하게 선처해 달라"고 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김 추기경의 서한과 별도로 현재 박 씨의 석방을 위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운동에는 강원룡 목사, 계훈제 씨, 이든명 변호사,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이부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성폭력피해자 기금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장 최영애)는 성폭력 피해 아산, 평창의 소년가장과 여성을 위한 기금을 모집한 성폭력 피해 여중생에게 필라고 밝혔다. 기금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활동에 쓰여질 것이며 최근 피해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수신자:한국성폭력상담소)

○ 인권간행물 ○

- 「세상일기」 7월호-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 주요내용:신경영의 추세와 화이트칼라의 고용문제/노동배제를 통한 자본의 경쟁력 우위전략/자유만 남고 검열은 가라 등 120쪽.
- 「산재노동자 소식」 2호-산재노동자소식지 공동발행위원회(868-2379)
· 주요내용:민주노총 원년을 맞이하여 산재추방을 위한 활동/산업재해 피해자 조직들의 움직임과 전망/현대계열 대기업노조,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상담/포항 철강공단내 기업체 노동자 건강 "모른 채" 등 53쪽.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소식」 제10호-정대협(365-4016)
· 주요내용:6.23 제주도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시위 참여 할머니 경찰서 연행, 진술서 강요/필리핀, 대만, 서울, 미국 등에서 일본 도요다 자동차 불매운동 시작/7, 8월 국민기금 반대 일본 전국 순회집회에 정대협 참석 등 14쪽.
- 「유토피안」 제4호 -문화정치 유토피안(236-0988)
· 주요내용:문화비평파트 심포지움 발제문-색수알리메, 옥망 횡단과 부정의 힘, 옥망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문화이론으로서의 정신분석/인권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등 109쪽.
- 「작은것이 아름답다」 7월호-녹색연합(325-5525)
· 주요내용:환경비상사태선포와 자동차 장례식/생태문화기행, 안면도 갯벌과 까나리갯/녹색에너지 기행, 희망의 대안을 찾아서 등 137쪽.
- 자료집:「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황수연 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576-7128)
· 주요내용:교사에 의한 제자 성폭력 사건 실태/공대위의 향후 활동계획/공대위에 전화제보된 몇가지/성추행 관계 보도 및 토론실 감무리/신양중학교 한 교사의 호소문/통신에 올라온 성추행 관련 사건 토론 소개 등 29쪽.
- 자료집:「여성노동과 노사관계 개혁방향」-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주요내용: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정책의 방향/유연화정책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의 방향 등 61쪽.
- 자료집:「세계주거회의의 실천과제와 민간단체의 역할」-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3673-3031)3)
· 주요내용:세계주거회의의 한국민간위원회 활동보고/인간적 주거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는 도시주거환경 등 47쪽.
- 단행본:「벌거벗은 나라들」, 세계화가 남긴 것-유엔사회개발연구소 지음, 조영환 옮김, 한울출판사
· 주요내용:세계화의 과정과 그 정치학/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동하는 세계시민, 국제이민의 새로운 시대/법외의 경향, 세계적인 법외서 봉회현장/정체성의 위기, 인종분류종교 그리고 폭력/책임이 없는 자유, 다국적 기업의 끝없는 성장 등 346쪽.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

적자에 허덕이는 <하루소식>에 힘을 주세요.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지난 두 달간 연행자 2백 80여명, 구속자 1백1명. 5월 7일 국무총리 주제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의 '좌경업단' 방침이 가져온 전과다.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사상·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탄압이 5공 때의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울초 사회주의학생연합, 한국노동청년연대 구속 등으로 꾸준히 진행돼 오던 '진보'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은 5월 7일의 공개적 선전포고를 거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왔다. 선전포고 후 첫 목표물이 됐던 전국학생정치연합에 이어 5월 나라사랑청년회, 6월 이른바 '전남대 자주대오', 7월 들어 21세기진보학생연합, 예국 크리스찬청년연합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는 모조리 사냥의 먹이가 되고 있다.

마구잡이 조직사건 일련의 조직사건에 일관된 탄압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각 단체의 성격은 스펙트럼의 빛깔만큼 다양하다. 강한 이념지향적 단체에서부터 민간통일운동 단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어떤 단체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조선일보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무엇 하나 공통된 요소가 없어 보이는 단체들이

일제히 국보법상 이적단체라는 조항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단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자신들을 드러낸 공개조직으로써 정부의 사양그물에 쉽게 걸려들었다는 점, 그리고 진보를 지향한다는 점 정도일 듯하다. 이들의 구속 근거가 되는 활동내용이 무엇이냐는 점 또한 의문이다. 다수의 구속자는 운동권 내에서 이미 활동을 정리한 일반 시민들이었다. 또한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구속했다가 '이

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구속수사 남발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결국 정부는 소심한 레드 콤플렉스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을 뿐이다. 탄압의 양상도 '우선 잡아 놓고 보자는 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조선대에 서 벌어진 학교학생 연행·혼방 사건이나, 국보법 위반은 아니지만 인권하루소식 기자 김수경 씨를 불법 연행·구금한 사건은 최근

경찰의 반인권적 작태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김 씨에게 즉시에 회부하겠다고 협박까지하다가 결국 '조사에 착오가 있었다'는 한 마디로 무마시키려던 태도는 무감각한 인권의식과 실적위주의 검거·구속방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보수층 끌어안기 "정치적 반대자들을 거세하고 보수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각 분야·단체 활동가들의 공통적 분석이다. 그러나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재야·인권단체들의 대응양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자세와 꾸준한 연대'의 필요성이 재삼 강조되는 현실이다.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존립근거 마련위한 공안당국의 발악"

-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8:15를 앞두고 통일운동세력들이 집결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기세를 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서도 무분별하게 탄압하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그동안 문민정부로부터 멀어졌던 중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동세력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 ◎남규선(민가협 총무) 야권의 분열과 4·12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자신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이다. 이에 운동세력들은 이러한 탄압 사례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해 대중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 ◎전영석(한총련 대변인) 대선을 앞두고 학생운동세력과 민민운동들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음모이다. 특히 학생들이 김 정권의 대선자금 공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여론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서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윤기원(변호사) 공안당국자들이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존립 근거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의 한 발로 대대적인 연행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인권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속이 됐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각오하지만 정작 석방이 되면 호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 ◎이상영(충북대 법대 교수) 문민정부하에서도 공안당국자들이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존재기반인 국보법을 가지고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본다. 특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도 목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보수세력과의 대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러한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안보 차원에서 필요악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의 대안으로 공안 사건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생활 구성구성에 파고 들어 있는 국보법의 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 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 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사전 신고된 집회에서 준비해온 상징물을 문제삼아 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평화집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

러자 경찰은 해산명령과 함께 최류탄을 발사하며 성남연합의 한용진 씨 등 31명을 은평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또한 14, 15일 은평경찰서 등으로 항의방문한 89명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15일 집회당일 연행자중 불구속으로 입건된 김기창 씨를 제외하고 30명은 훈방됐다.

한 관계자는 "항의방문자들에게 대해서는 경찰측이 괘씸죄를 적용, 과거 집회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즉심 또는 구속조치를 한다고 해 구속자가 더욱 늘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 △5월 7일 이수성 총리 주재 치안관계 장관회의, 학생 및 재야 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 8일 전국학생정치연합 13명 구속, 9명 수배
- 23일 명원창 상근관대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관련)
- 27일 현인숙 승의여전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관련) 서울지검 공안부, '이적표현물 특별단속반' 구성해 좌익인쇄물 계속 단속키로
- 28일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3명 구속
- 29일 대구지역 해방노동자동맹전선 결성 혐의 4명 구속 대구지역 사노맹 가입·활동 혐의로 5명 구속
- △6월 1일 남영동 대공본실 항의방문 간 나사청 회원 40명 연행, 7명 불구속 입건, 나머지 벌금형
- 5일 범민련 강순정, 정영민 씨 구속
- 11일 '민족해방군'관련, 전남대 출신 현역군인 6명 구속
- 14일 경찰, 하교중인 조선대생 17명 연행 뒤 훈방
- 15일 사회주의학생연합 관련, 이상훈 씨 구속 권택홍 영남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
- 18일 경찰, 경북대 병력투입해 인혁당추모비 강제철거
- 19일 민정련 광주지부 사건으로 김영만 씨 구속
- 18-24일 류혜숙 씨 등 조선대생 5명 구속
- 28일 전남대 94년 학생회 간부 13명 긴급구속
- △7월 2일 노진주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홍기훈 씨 구속
- 3일 단국대 무하마드 칸수 교수, 간첩 혐의로 구속
- 4일 여성오 전국학생투쟁연합 의장 구속
- 6일 21세기진보학생연합 소속 11명 구속, 1명 불구속
- 9일 이수성 총리 국회연설에서 '좌경엄단' 방침 밝혀
- 10일 경산대 총여학생 부회장 이은순 씨 구속
- 11일 예국리스찬청년연합 13명 연행, 1명 수배
- 13-15일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 참가자 31명 연행, 항의방문자 89명 연행
- 14일 폴란드에서 북한대표 만난 혐의로 이승환 씨 구속

주간/인/권/초/름 (96년7월9일부터 7월14일까지)

-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12차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석용(40)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교도통신> 보도, 일본 외무성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자 3백여 명에 대해 의료·복지 지원사업 명목으로 10년간 8억 엔 지원방침
- <10일>
미군측, 68년 매향리 주한미군 제7공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계속된 폭격 및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에 대해 주민 1인당 1천만 원씩 모두 3백50억원 보상 예정/진동면 용산리·초리·동파리 일대 농지 2백16만 평의 소유주들, 73년 국방부가 미군에 전용공여지로 내준 농지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공여지 해제소송키로/경북경찰청 북한의 대학이름을 티셔츠에 새겨 판매한 혐의로 경산대 총여학생 부회장 이은순 씨 긴급구속
- <11일>
인천중부경찰서, 도원동 2여상 김아무개(62) 교장이 2학년 사이무개(15) 양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착수/장흥경찰서, 담임을 맡은 어린이를 성추행해온 혐의로 장흥초등학교 전기철(54) 교사 긴급구속/인천남부경찰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정물산 대표 김광석(31) 씨 구속/부평경찰서, 집앞에서 놓고 있는 아아무개(6) 양을 빈터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위성술(35) 씨 구속/경북 안동경찰서, 의붓딸을 성폭행해온 혐의로 손호섭(48)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 <12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강문중 부장판사), 이경현(29·여, 89년 전교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도중 학교안으로 들어온 진압경찰에 쫓기다 머리다쳐 오른쪽 마비, 지능 유치원생 수준 상태)씨와 가족들에게 원심개고 7천6백여만원 지급판결/용인경찰서, 초등학생 자매 성추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도교통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다음달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보도.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피해자 6명 일본의 '국민기금' 사무실 찾아가 정부차원의 국가보상 실시할 것 요구
-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의로 이승환(38·한청협 부의장) 씨 구속/정부, 신한국당 장애인특수학교 설치확대와 그들용 시범사업 실시등 장애인재활 지원 종합대책 수립키로
- <해설>
매향리 주민 3백50명이 68년 공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계속된 폭격 및 사격 훈련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73년 국방부가 미군에 전용공여지로 내준 진동면 농지 2백16만 평의 소유주들이 재산권 회복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공여지 해제소송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러나 현재 한미 행정협정상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몰라하는 태도는 불만대 부채질하는 격 밖에는 안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등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민주노총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말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재일교포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현재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손유형(66·전주교도소) 씨 등 재일한국인 정치범 6명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며 일본의 「한국 인권기금국제센터」(운영위원장 최철교, 인권센터)와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

원하는 회 전국회의」(공동대표 요시마쓰 시게루 등) 회원 9명이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해 16일 출국했다. 이들은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바라는 일본 국회의원 1백30여 명의 서명서를 1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제출했으며, 정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손유형 81년 4월25일 골프여행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방문 중 연행되어 83년 3월 사형 선고, 체포당시 부터 위암, 후두암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현재는 혼자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88년 12월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으며 95년 8월 잔여형 반감.
- ◎김병주 83년 11월28일부터 84년 1월25일까지 60여일 동안 감금되어 가혹한 고문조사를 받았다. 김 씨에 의하면 "벽에 붙혀 놓은 채 20명의 정보부 직원들이 4명씩 교대로 때렸으며, '너같은 놈은 죽어서 남산에 묻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88년 12월 징역 20년으로 감형, 95년 8월 잔여형이 반감.
- ◎이현치(43·대전교도소) 대학을 졸업후 귀국해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중 81년 10월9일 당시 임신중이던 부인과 함께 연행이 되었다. 법정에서 "간첩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83년 무기징역을 선고, 88년 12월 징역 20년 감형.
- ◎김대홍(38·대전교도소) 고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로 유학을 와 공부하던 중 81년 9월 보안사에 연행, '형에게 간첩교육을 받아 한국에 침입한 간첩'이 되어 83년 무기징역 선고, 재판 중에 "한국의 다니나 도로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간첩행위가 되느냐"고 강력한 부인을 했으나 무시되었다. 88년 12월 징역 20년으로 감형.
- ◎서순택(66·대전교도소) 한국여행중 친형인 서순은 씨와 함께 체포. 90년 2월 안기부에서는 "일본 국내최대의 대남공작조직" 간부로 사건이 발표되었고, 91년 무기징역이 확정. 93년 징역 20년으로 감형. 95년 잔여형이 반감.
- ◎김장호(54·대구교도소) 82년 한국 친척방문 중 연행되어 83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과 이혼을 해서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다.

터는 93년 7월 각국의 인권 단체와 협력하면서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재일한국인의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탄압, 투쟁으로 대응" 애청, 명동성당서 농성

지난 11일 이재용(예국크리스찬청년연합(애청) 의장) 씨등 13명의 회원이 연행되었던 애청이 16일부터 명동성당과 애청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 들어가며 이들은 "성당과 교회내의 자주적인 청년활동이 국보법 위반의 이적단체로 둔갑하고, 주장이 고무관양이 되는 이러한 총체적 탄압의 선택은 강고한 투쟁"이라며 "연행된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명의 연행된 회원 중 권일찬(28·병원원무과 직원), 김형태(29·애청 재정부장) 씨등 5명은 경찰이 강요한 '애청 관계자들과의 접촉과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불구속으로 석방되었다.

◎ 주요 공판 안내 ◎

- 7월18일(목) 이지훈,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정민주의 1, 국보법, 오후2시, 고법 합의5부, 404호 속행
- 7월19일(금) 김성용의 3,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진 김형만,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진 황윤미, 국보법, 오전11시, 단독9부, 526호 신진 김민욱,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신진 유현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중대재해를 세계 4위. 날마다 ‘산재예방, 산재예방’ 떠들면서도 아직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산업현장이다. “사업주에게만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강력한 재계의 반발을 맞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의 참여권과 관련해, 지난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의 문제와 유해위험작업중지권의 문제였다.

실효성없는 건강진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장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근(금속연맹 조선편과) 산업안전국장장은 “현행 제도에서 검진기관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며, 그 결과도 사업주를 거쳐 노동부나 노동자에게 통보된다. 제도적으로 개별 노동자가 결과에 이의제기할 권한이나 노조가 참여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 이것이 형식적인 진단과 측정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원진래이은의 사례에서처럼 현행 건강진단을 통해 선 직업병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진기관의 선정에 최소한 노조의 동의권이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국장이 제시한 개선책이었다.

조정진(노동당 건강연구회) 정책실장은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과 노동과정의 변화를 알 권리 △

공정의 변화전에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을 권리 △노동과정 변화에 대한 거부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LO규약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자문권 및 사업주와의 협의·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스웨덴 등 몇몇 유럽국가들은 노동과정변화에 대한 협의·결정권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 실장은 “최소한 ILO규약만큼은 우리나라에서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묵숨지킬 권리”

김 국장은 ‘작업중지권이 파업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계개의 기준은 법이다. 법만 지키면 작업을 중지할 필요도 없고, 위험사항이 시정되면 곧바로 작업이 재개된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작업중지권은 ‘묵숨지킬 권리’이며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개별노동자에게 작업거부권이 부여되는 1단계, 노조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2단계,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3단계, 산업안전요원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4단계로 구분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4단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3단계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단계만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이며, 현재 단 체험약과정에서는 3단계의 보장을 쟁점으로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조 실장은 국

내제도 개선방안으로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금지 조항 마련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작업자 보

호조항 마련 △작업자에게 대한 판단주체마련 등을 제시했다.

<인권하루소식>
17일자는 제헌절
관계로 쉬었습니다.

○ 행사와 동정 ○

□ 해외시민운동가 초청 토론회

“남미에 있어서 정당정치와 시민운동간의 관계”

- 일시: 18일(목) 오후 4-7시
- 장소: 성가수녀원(735-7832)
- 초청발제자: 훌리오 산타아나(남미 에쿠에니칼 운동, 사회운동의 일선 이론가이자 지도자)
- 주최: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744-3964)

□ 세계인권포스터전

- 일시: 19일(금) 오후 2-3시(개막식)/ 19일-8월4일
- 장소: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갤러리(지하 2층-547-2233)
- 주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한겨레신문사

□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전국대표자,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19일 오후 3시
- 장소: 중앙 범국민대책위 사무실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 일시: 20(토) 오전 10시- 오후 6시
-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당(참가비 1만원)
- 내용: 1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2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3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 주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4)

□ 제5회 기록고 논단 “1997년, 홍콩의 새로운 도전”

- 일시: 23(화) 오후 4-6시
- 장소: 성가수녀원 강의실(735-7832)
- 발표자: 권 내왕 목사(홍콩기독교연구소 소장)
-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12-3317)

□ 에드 델라 도레(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 대표)씨와의 간담회

- 일시: 23일 오후 6시
- 장소: 사회교육원 2층 회의실(744-3964)
-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796-8364)

□ 산업재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공청회

- 일시: 18일 오후 5-8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내용: 기초발제-산재장애인의 재활실태 및 문제점/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 주최: 산재추방을 위한 공동사업추진위원회(문의: 노건 866-9175/ 산재노협 868-2379)

□ 산재의 올바른 이해와 노동자문화 함께 만들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에서는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와 산재추방운동에 관심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상교실, 좋은 영화보기모임, 노동자 글쓰기 모임, 민중노래배우기 모임 등을 갖고 있다. 참가비는 1천원. 문의 868-2379

□ 홍콩경찰에 의해 기소된 박무영 씨 출국

지난 1월 홍콩에서 개최되었던 ‘연구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회의중 홍콩경찰에 의해 공공장소 소란죄로 기소된 박무영(38-구리노동상담소 소장) 씨가 18, 19일 이틀간 열리는 1차 공판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민중노총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3당 외노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목사 병보석, 37일 명동농성 마감

지난달 3일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상담소) 소장 김해성 목사가 구속된 이후 6월 10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16일 김 목사의 병보석 출감과 함께 37일간의 농성을 끝으로 마감되었다. 1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가면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상담지원활동 탄압 중단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상

담소 사무국장) 씨의 석방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사면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농성결과 대부분의 요구 사항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 이상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보낸 진근화(외국인노동자협의회 간사) 씨는 “두 분이 모두 석방됐고, 법무부측이 농성에 참가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과 상담소 근처에서는 일체 외국인노동자의 단속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농성은 승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환경·노동특위(위원장 이규규) 소속 3당 간사들이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안전으로 올릴 것을 약속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13일 20여 개의 사회·종교·노동단체들이 모여 구성되었던 공동대책위는 이후 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며, 이달 안으로 그동안 4만여 명에게 받은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 제출과 함께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다.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단체항의방문도 집시법 적용사항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측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은평경찰서를 항의차 방문했던 성남연합회원 48명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원 처벌됐다. 이날 참석자 중 윤용배(31·성남 사랑 청년회 회원) 씨가 공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9명에게 벌금 3만원형이 내려졌다. 또 훈방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구류 2-3일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성남연합회원 윤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비롯해 연행과정 때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나, 신고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시법 6

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경찰측 입장이다.

그러나 연행과 처벌의 과정이 합법적이었느냐는 데는 여전히 의문시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다. 벌금형을 받고 나온 우이영(33) 씨는 “항의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연행을 시작했으며, 일행중에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들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집시법 18조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성남연합회는 윤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비롯해 연행과정 때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나, 신고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시법 6

“국보법 철폐 다짐” 방북 여대생 공판

작년 북한에서 열린 범청학련 대회에 참석했던 한총련 소속 정민주(인천시립대 92학번), 이해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 씨의 결심공판이 18일 오후 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감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에 없다”며 “다시한번 국보안법의 반통일성과 반민족성을 철폐하면서 더욱 국보법 철폐 투쟁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30일 오전 10시.

연경탐압 저지, 천주교 대책위 18일 발족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천주교 단체들은 예국크리스찬청년연합(예청) 사건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를 18일 긴급구성했다.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 천주교대책위)는 예청 관련자 구속 및 ‘빛두레 신앙인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교회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공권력 탄압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미 활동을 종료한 전 회원을 비롯한 예청 관련자 13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마구잡이로 긴급구속하고 사실자채의 입증어려움 압수수색을 근거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축소·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주교대책위는 19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중지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 명, 탈주자 발생

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국민들은 양심수일 수도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그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보고는 없다. 몇 건의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직과 집권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은 아직 공식이다. 90년 전 주석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씨가 부친을 승계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상반기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년 더 연장된 부친의 주모기간이 끝난 이후에 김정일 씨가 공식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8, 9월 홍수로 상당한 경작지와 농작물, 사회간접 시설(infrastructure)이 유실되고, 약 5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도 수백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 수의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에 아주 위험스럽게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수해로 인한 구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자, 12월 말까지 북한을 떠나 중국 동북부로 간 국민이 수십 명에 이르지만 중국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 또한 불명확하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17, 18세이며 형법상의 '반역죄' 처벌 조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87년부터 지연시키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최초보고서 작성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북한 국민들(nationals)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되어 아마도 양심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에서 북한 국적을 가진 수 명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러시아에 잔류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투옥될 위험이 있다. 그

중에는 90년 소련과 북한 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벌목노동자로 러시아에 갔던 최경호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93년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여, 95년 2월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러시아 잔류를 허가받으려 했다. 그는 3월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1개월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 같다. 그 이후 그의 부인은 그와 연락할 수 없었다. 만약 감금되어 있다면 최경호 씨는 단지 자신의 이주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구금된 양심수로 간주될 것이다.

또 과거에 벌목노동자들이었던 다른 사람들도, 94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들 역시 러시아 내지 독립국가연합의 다른 국가들에 잔류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 중에는 88년부터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한 최연단 씨도 있다. 그는 94년 6월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직후 북한의 외교관에게 인도되었다. 역시 벌목공이었던 이송남은 94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북한 관리들에게 감금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한다.

공식보도(official report)로는 양심수일 수 있는 이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93년부터 중국 베이징에 거주했던 황성국, 황성산, 황성권 삼형제는 북한측의 요청으로 강제 송환되어 구금되었다. 그들은 10월에 베이징으로 돌아 왔다. 북한 관리들은 그들이 북조선에 있는 동안 구금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60년대 가족과 함께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간 조호평 씨는 구금되었으며, 아마 그도 양심수일 수 있다고 한다. 공식보도에 의하면 조호평 씨는 67년 간첩활동으로 수감되었으나 74년 10월 탈옥했다. 북한 당국은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같은 달 군인 셋을 살해한 후 보트로 탈북하다가 추격당해 보트난파로 죽었으며,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조호평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AI는 시바타 코조씨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95년

AI 보고서 참조).

공식보도에 의하면 최근 몇 해 동안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95년 몇 건의 사형이 선고·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12월에 입수된 비공식 보고에 의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홍수가 있는 직후 형사범으로 사형당했다고 한다.

AI 대표단은 4월 북한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 관리들, 판사와 법학자들을 만나 법의 개선과 형사 사건(prisoners' cases)에 대해서 논의했다. AI는 8월 조호평 씨와 그의 가족의 운명에 대해 계속적인 우려를 표명한 요약보고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허진 문 뒤의 인권 침해를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 단체가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서 95년 기간의 투옥에 대한 보고를 더 상세하고 있다. <끝>

[번역·진보정치연합 제공]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동·국회의원 간담회

18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 대표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최근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동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에 연락절차를 밟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하고, 조성준 의원 등 국회의원 3명과 김문수(신한국당), 이미경(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민주노동 관계자들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노력을 부탁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해 "산협현장의 파업권과는 다른 의미의 단체행동권"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며 교사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의원은 '노동과 공동으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안했고, 한영애 의원은 "노동법 개정논의의 속셈은 정리해고 등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노조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심한 재검토를 통해 확실히 얻어낼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민주노동이 정당한 노동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

외국인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의 농성을 마감한지 이틀 만에 법무부가 '불법채류 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 적발'이라는 제목의 심뜩한 사건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회 의원들이 보호법 제정 노력을 약속하고, 법무부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근처에서는 불법채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외국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직후에 발표된 것이어서 관계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위 조직에 대해 근거도 없이 '대공협의를 약속하고, 법무부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근처에서는 불법채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적용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추구와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해학 등, 공대위)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일제의 만행으로 고국을 떠났던 중국동포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또다시 쫓아낸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친목단체일 뿐인 중국노동자협회를 짓밟아 범죄단체를 색출한 듯이 소란을 피우는 법무부의 뻔뻔스러운 작태를 그만 둘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노동자협회의 상급단체인 중국노동자센터 소장 오천근 씨는 "중국동포들이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당하는 각종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친목단체"라며 "법무부가 7백50여 명의 회원밖에 없는 단체를 2천여 명 이상이 모인 거대 불법단체라고 부풀려 사건을 발표한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야비한 의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대공협의를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채류자들의 대공협의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채류자들이 대규모 조직화·집단화 경향에 대해 철저히 차단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20일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해단식과 김해성 목사 환영회와 함께 중국노동자협회 탄압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체험! 삶의 현장 청소년 열린학교

「제2회 청소년 열린학교」(교장 김진균, 열린학교)가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 한겨레 신문사, 환경운동연합 등의 후원으로 한양대와 건국대에서 열린다.

열린학교는 풍물, 방송, 만화, 신문기자, 사진 등 18개 교실에 전문강사를 초빙하며, 올해에는 현직교사 20명이 각 교실 담임으로 참가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농촌활동과 지리산등반, 야간행군으로 진행되는 '체험 삶의 현장-6박7일간의 무전여행'. 행사를 계획한 구정인(24) 씨는 "나약함으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노동의 소중함과 공동체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행사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돼 사회봉사증도 발급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열린학교는 희망, 생, 참배지 않았으나 그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채류자들의 대공협의점을 지속적으로

“팬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

<현장스케치>-세계인권포스터전

19일 오후 2시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다 함께 인권문제에 동참하는 계기로 삼자"는 축사와 더불어 세계인권포스터전의 막이 올랐다.

양심수·고문·실종·여성·사형 등 인류 보편의 인권주제들이 '그림'이라는 세계 공통언어로 전달되는 이번 포스터전은 피카소의 작품을 비롯해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어느 포스터는 "말을 막을 수는 있지만 정신을 죽일 수는 없다"고 외치고 있고, 목이 잘린 곰인형은 "인간은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한 젊은이의 입에 코르크 마개가 물려있는 그림, 구멍 뚫린 헌법 법전의 자리에 석창살이 들어선 그림, 이러한 각각의 상징들 사이로 버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키 여사의 얼굴도 눈에 띈다.

전시장 한 자리에 88년 버마대학살 과정에서 생존한 유잔나 킨(Yuzana Khin)의 사진이 걸려 있다. "...눈을 떴을 때 수백 명의 동료학생들이 학살되어 있었다...그들을 위해 팬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그것이 인권이다." 킨의 사진이 전하는 메시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8월 4일까지 서울 전시를 마치고 이후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1달 간의 순회전시회에 들어간다.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간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지난 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칸수(50·필리핀) 씨의 변호인 접견이 18일 안기부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안기부측에서는 22일 경에 간수 교수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밀실 수사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간수 교수의 변호인인 박원순, 김한수 변호사는 지난 16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전화를 통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며, 18일 오후 2시 경 세곡동 안기부에 도착해 20여 분간 접견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사담당자는 ‘간수 교수가 종래 일반 국보법 위반 피의자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간첩이므로 국익차원에서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 달라’고 부당한 것으로 전한다.

박 변호사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수사결과에 걸쳐 이야기했지만, 안기부 수사관은 ‘조사받는 동안은 절대 변호인 접견을 시켜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성명서를 발표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안기부가 발표할 수사결과가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후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가 그대로 언론과 방송에

보도될 경우 언론사에 대한 정보도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 흥미보다 대책마련을

최근들어 거의 매일 신문 지상을 장식하는 내용은 성폭력관련 사건이다. 교장의 성추행, 소녀가장에 대한 마을주민의 성폭행, 유치원생 집단추행 등의 기사는 죽히 읽는 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최근들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또한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가 친족을 비롯한 주변인물이고, 50% 이상의 성폭력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가 밝힌 96년 상반기 상담현황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가운데 친족 17.7%, 교사 및 강사 4.9%, 동내사람 13.1% 등 주변 사람이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33.2%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55%에 해당한다.

이번 자료가 전체 성폭력 사건이 아닌 상담 사례에 국한된 자료였다는 점, 그리고 시기에 따라 특정 성

폭력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통계와 비교해볼 때 이번 통계가 일반적 추세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상담소측의 설명이다. 조종신 상담실장은 “최근의 신문기사내용은 숨겨진 사실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며 “성폭력 사건은 결코 선정적·충동적·일시적 문제로 다루어질 게 아니라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 사실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고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 상반기의 고소율은 15.2%로 지난해 11.6%보다 증가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 인권간행물 ○

- 『포럼 2001』 7월호-포럼 2001(747-8897)
 - 주요내용:YS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민주노동 및 공공부문의 96년 입단투 진행/한국농업의 미래는 있는가?/신농정과 농민운동의 과제/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등 69쪽.
- 『함께읽음』 7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주요내용:장애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수성 국무총리의 장애우 복지 구상/독일 장애우 복지제도에서 얻는 교훈/특수학교 입학, 아직도 거부당하고 있다/장애우 시설 보육사, 인권이 없다/월드컵 유치와 장애우 삶의 질은 별개인가? 등 85쪽.
- 『참여사회』 7·8월호-참여연대(797-7116)
 - 주요내용:286급 통일운동의 쟁점/시대 고민/시민사회 지배 넘보는 삼성·LG·현대/달린 교실을 여는 사람들/마지막 대안, 녹색으로 바꾸는 세상/기묘한 선 브라질 시민운동/인권실현의 희망을 심는다, 광주인권지기 등 104쪽.
- 『수레바퀴』 6,7월호 -이랜드노동조합(323-0456)
 - 주요내용:민주노동운동의 밑줄로 다시 태어날 동지의 삶/직장탁아소,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부담해고! 그러나 복직을 향한 노력들 등 24쪽.
- 『교회와 인권』 제10호-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 주요내용:제 3천년기를 맞아 생각하는 교회와 인권/노동인권의 기본, “결사의 자유”/월간 주요 인권 동향 등 12쪽.
- 자료집:『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외노 인권보장과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319-8955)
 - 주요내용:외노문제에 대한 대책방향/외노의 법적 지위 및 인권보호/외노 보호법제정을 위한 의견/외국인력정책 기준정립과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 등 68쪽.
- 자료집:『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조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민주노동(765-2010)
 - 주요내용:노동자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와 작업중지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조의 참여권에 대한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 등 55쪽.
- 자료집:『96 전국교육대회』-AI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동북아 인권상황과 국제사무국의 역할/인권보장과 동양사상, 한삼법(동국대 법대 교수)/난민활동에 대한 설명 및 육상 등 20쪽.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적자에 허덕이는 <하루소식>에 힘을 주세요.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노동권>

한국정부는 노조의 재정 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3조를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지난 3일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무함마드 칸수 교수에 대한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안기부는 칸수 교수를 남한에서 12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정수일(62·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 일

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와 신빙성을 떠나 분명한 위법”이라며 과거 밀실수사를 답습하고 있는 안기부의 수사관행을 비난했다. 또한 남규선(민가협 총무) 씨는 “안기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행위자체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적용된다고 지적하며, “간수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도 80여 회의 팩스 수신이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사건을 발표한 점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안기부측은 칸수 교수가 북한에 아내와 세 딸이 평양에 살고있으며, 84년부터 필리핀 국적취득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물로 기본 암호표와 지령 해독용 책자, 독약 앰플 등을 제시했으며, 오후 1시경에 서울지점으로 송치됐다<인권하루소식 7월20일자 참조>.

1-6월 내의 상담은 총 2천 6백13건이며, 이중 구타상담이 7백66건으로 29.3%를 차지했다. 또한 구타를 당한 여성들은 대부분 그자리를 피해 도망(19.5%)가는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9.7%)와 경찰을 호소하는 경우(2.9%)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찰이 가해남편에 격리조치를 취한 경우(6.5%) 당시의 구타를 막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혜선(상담국장) 씨는 “아내구타는 사회적으로 제재와 통제를 받는 범칙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큰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경찰, 가정에서 해결해라”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여성의 34.7%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동한 경찰의 80.6%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전화)가 펴내는 <여성의 눈으로>(7월호)에 발표했다. 가정내의 폭력이 더 이상 가정내에서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전화추진에 상반기 사례 결과를 보면, 경찰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지적되었다.

정대협, 기금반대 서한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측이 19일 위안부 3백 명에게 2백만 엔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민기금 이사장 하라다 씨에게 20일 반대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위안부와 국회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는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피해국민에 대한 무시와 인권모독”이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 (96년 7월부터)	
구속자(1-21일)	30
합계	30

○ 주요 공판 안내 ○

- 7월23일(화)
 - 정병동의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진 임원준의 2, 점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진
- 7월24일(수)
 - 최병호의 1, 업무방해, 오후2시, 합의3부, 421호 신진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423호 신진 손영우의 8,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7월25일(목)
 - 전두환의 15, 반란수괴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추원형, 국보법,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신진 이부영,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오전9시30분, 합의1부, 309호 선고
- 7월26일(금)
 - 김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유용기, 국보법, 오후2시, 합의1부, 418호 속행 연성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이기주,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전상훈,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박선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선고 정미은,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오치근,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명원창, 국보법, 오후2시, 단독3부, 5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 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개정의 첫번째 대상은 헌법 제3조이다.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거나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와 그 부속도서가 53년 휴전협정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2개의 분단체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조속히 분단의 현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을 담도록 개정하는 두 가지 해결방식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4조도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평화공존과 평화통일과 모순될 가능성이 많다

(2)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북방정책, 남북경협등 국가정책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밖에 없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남북교류의 진전에 명백한 걸림돌로 작용한 국보법은 그대로 두면서 한편으로 정부와 기업 등의 교류와 교역에는 면허부를 부여하겠다는 이중적 정책의 발로였다. 특히 남북교류와 교역의 허가권을 정부의 수중에 일원화하고 그 철저한 통제 아래 둬으로써 민간간의 자율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이른바 '창구단일화'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을 통한 이산가족의 만남은 근 6년동안 겨우 8백22명만 성사된 정도이다. 87년 11월 2일 이후 대만과 중국 사이에 오간 이산가족의 숫자가 7백6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정도로 적은 숫자이다. 91년 이후 중국과 대만 사이를 오간 서신만 해도 매년 6백만 통을 넘어선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협력사업의 승인과 허가를 정부의 손 아래 둬으로써 사실상 남북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그 승인의 대상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그만큼 남북교류의 과실을 재벌등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남북의 자유스러운 교류는 남북한 주민의 인식을 평준화하고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허가제에서 신고제, 방문자유 확대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호 ②편 계속>.

주/간/인/권/호/름

(96년7월16일부터 7월21일까지)

<16일> 제일동포 출신 정치범 6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일본 국회의원 1백30명의 연대 서명서 정부에 전달

<17일>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안'에서 성교육을 실시토록/경찰, 북한의 김형직사법대와 자매결연식 주도한 혐의로 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씨 등 10명에게 사전연장 발부

<18일>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 긴급구성/유엔 국제법위원회, 중대한 전쟁범죄 등을 범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안전에 대한 죄' 법전 초안 완성했다고 <고토 통신> 보도

<19일>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채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재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예국크리스찬청년연합 이재용(30·의장) 씨 등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20일> 청주 여중 3학년 박모(15) 양, 지난해 10월 귀가도중 쾨아무개(45·농업)씨에게 성폭행당해 임신·출산해/청량리경찰서, 정신지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최정근(50·상업)씨 구속/부산 한진중공업측, 노조원이 파업농성에 적극 참여하거나 가족들이 동조시위에 나선 경우 사원아파트 입주 취소할 방침이라는 공고문 발송해 반발 사/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신부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21일> 73년 유신독재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했던 당시 주미공보관장 이계현(71) 박사 23년만에 귀국/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회사측이 노조간부 10여명을 포함해 파업농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 86명을 업무방해와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징계위에 넘겨/북극권 고수에게 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올려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거부/태국의 톤무리 형사지법, 지난 5일 방콕시 지역 초등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수피드 채드루(5)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수리판 사이동(28)에게 사형선고

<해설>===== 연일 구속·연행 보도가 신문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구속사건을 접하면서도 이에 맞서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대책이나 대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늘 수세적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18일 긴급구성된 천주교 단체들로 구성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의 활동은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연일 계속되는 인권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모든 사립·공립학교 교사들의 자유로운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 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

'직업병 생산 공장'으로 유명했던 원진레이온공장은 93년 폐업했으나 계속 직업병 판정 노동자들이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폐업이후 3백19명의 노동자들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원진직업병 노동자의 50%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폐업 당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노동부로부터 1백50억원 상당의 재해 위로금 지급과 직업알선 등 약속을 얻어냈으나 공장 폐업 3년이 되는 지금,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그 당시의 약속들이 '현실적인 약속'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는 원진레이온 노동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원진문제 올바른 해결-보상금 확보 및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표1> 직업병 판정자 연령별 현황

	단위:명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남	31	61	87	134	121	87	32
여	4	6	15	20	28	9	2
계	35	67	102	154	149	96	34

<표2> 연도별 직업병 판명자 수 (사망자 수)

	단위:명													
	81년	84년	85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합계
남	1(1)	(2)	(1)	5	17(1)	10(2)	19	41(2)	87(4)	97(1)	33(4)	159(6)	84(1)	553(25)
여					7	(1)	10	1	9	14(1)	11	19(1)	13	84(3)
계	1(1)	(2)	(1)	5	24(1)	10(3)	29	42(2)	96(4)	111(2)	44(4)	178(7)	97(1)	637(28)

비상대책위원회 전위원장) 씨는 "현재 원진직업병 피해자는 총 6백37명이다. 이중 공장 폐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백19명이어서 정부측이 출연한 1백50억원 중 20여 억원만이 남아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표2 참조>. 또한 그는 "원진직업병은 진행형 직업병이므로 이후 계속해서 발생할 확률이 크다"며 기금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원진직업병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박석운 원진직업병 연구소 소장은 "93년 직업병 등급을 정할 때 대부분이 보상액이 적은 10-11등급이었다"며 "하지만 그때 낮은 등급이었던 노동자들이 현재 중증장애 상태가 많아 등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직업병 전문병원 설립 △자활·복지시설 건립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시설의

기금은 공장터를 매각해 남은 1천6백억 원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전문 치료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양길승(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수의원 원장) 씨는 "폐업된 직후 전문 의료 시설 마련을 주장했지만 원진노동자 스스로가 몇 푼의 돈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계속 발생될 동료 노동자들의 미래와 현재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전문병원과 자활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직업병 판정자들 대부분이 45-55세 노동자들이고, 다른 곳에 취업하기도 힘들어 3-4천만 원의 보상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표1 참조>.

"더위에 쌀부패 위험" 전국연합 적십자사 전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창복 상임의장, 전국연합)은 북한수재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모은 쌀 23가마와 지원금 1천만 원을

23일 오전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전국연합은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쌀 1백10가마 등 8천여 만원을 모금해 통일원에 전달하려 했으나, 통일원은 세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더위에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 쌀을 최대한 현금화하고 나머지 쌀과 모금액의 일부를 이날 적십자사에 전달하게 됐다.

최용재(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씨는 "적십자사의 처리과정을 지켜본 뒤, 나머지 7천2백여 만원의 전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적십자사가 쌀을 보내지 않고 다 물품으로 교체할 경우엔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전달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티모르 독립위한 모임 가을 창립대회

(가칭)「동티모르를 생각하는 모임」(동티모르 모임)이 지난 19일 명동 가톨릭센터에서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동티모르 인권회복을 위한 국내 민간인 모임인 이 모임은 △한국정부의 동티모르 관련 외교정책 비판적 감시 △동티모르 지원 및 연대 캠페인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모임 조직 △기금 지원하기 위해 모은 쌀 23가마와 지원금 1천만 원을

동티모르 모임은 앞으로 1,2차례 더 준비위원회를 가진 뒤, 올 가을 공개적인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다.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 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가보안법이 반통일법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의 존재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북한을 병사하여 수많은 국내인들이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처벌받아 왔다. 북한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간첩을 처벌하는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문민정부'와 국보법

새로운 정부의 정책으로서 국보법의 과감한 폐지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국보법의 폐지는 커녕 새로운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보법이 부활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다.

③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위한 노력

국보법 사건의 증대와 그 남용에 따라 그 개폐운동이 다시 활발해 졌다. 가장 먼저 법원에 의해서도 큰 도전을 받았다. 지난 95년 한해 동안에도 여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국보법의 남용이 견제를 받았다.

95년 동안 있었던 무죄 또는 위헌제청신청사건은 △부산지법의 국보법 위헌제청신청 △서울지법 항소1부의 이창복의장 무죄 △서울지법 항소3부 박치관씨 무죄판결 △서울지법 항소5부의 진상호씨 무죄판결 △부산지법의 주우열씨 무죄선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예외적이며 상급심에 의해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법부가 국보법의 남용에 확실한 견제판이 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야당은 국보법의 개폐를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94년 3월 민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국회법사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보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민주당의 무성의로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재야 역시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④ 확산되는 국제적 개폐 압력

한국의 국보법 폐지에 열의를 보인 것은 정작 외국 정부와 국제사회였다. 미국무성은 거듭하여 한국의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국보법의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94년도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도 인권악화의 원인이 되는 국보법을 지적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거듭 국보법의 개폐가 긴급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국보법 개폐권고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민주화 주장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⑤ 국보법 개폐의 불가피성

국보법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금품수수, 찬양·고무·동조등 모든 조항이 냉전과 적대의 산물인 만큼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대에는 양립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적·물적 교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적성의 모호화: 국보법의 본질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북한에게 유리한 일체의 행동을 금지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미 시대 상황이 더 이상 북한에게 유리한 행동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을 전적으로 분쇄하고 고립화시키려면 남북교류 그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 남북교류의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북한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이적시키고 이를 돕는 어떠한 행동도 범죄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국보법의 전제는 무너진 셈이다.

△비밀성의 문제: 국보법은 국가기밀법지, 수집, 누설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대단히 확산하여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인사와 접촉하는 어느 누구도 이 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남북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보면 상호간에 기업과 영업에 관한 정보, 그에 관련된 은갖 정치·경제·사회·문화 정보를 주고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북한과의 기업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의 국보법과 같은 기밀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밀의 개념을 극도로 제한하여 진실로 군사기밀등 보호의 가치가 있는 정보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과거의 모호한 국가기밀법을 88년 수정하여 이러한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있다.

⑥ 국민여론과 자신감

최근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는 크게 변화되고 있다. 93년 6월에 민족통일연구원이 국보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폐론이 70.9%에 이르고 있었다.

94년 12월 12일 공보처가 한국경찰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로는 남북경제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72.2%로 압도적이었다.

4. 통일촉진법령의 제정과 이행

①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

남북한은 92년 2월 19일 남북한 기본합의서, 같은 해 9월 17일 부속합의서를 각각 발효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서의 이행은 통일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이다.

② 통일과정에서의 제조약의 준비

남북관계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서로 다른 두 법을 체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할 조약마련등 정비작업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해결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요구한다.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서는 사실상 남북교류의 기본적 법제가 될 수 있었다. 남북관계가 점차 심화될수록 법제정비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달의 주제-노동권>

모든 사람·공립학교 교사들의 자유로운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복직합의서 이행 대신 폭력테러 대우그룹, 해고자 17명 업무방해로 고소

24일 오후1시30분 경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힐튼호텔(회장 정회자) 앞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름으로 된 복직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던 해고노동자들이 회사측 직원 20여 명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학준(91년 대우정밀해고자) 씨가 실신해 서대문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대우, 직원등 폭력행사 특히 이날 집회가 합법집회였으며, 현장에는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언론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세계 경영'을 부르짖

는 대우그룹의 본질을 보여 주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사태는 이날만 있던 것은 아닌데, 11월부터 있었던 힐튼호텔 앞 집회에서 매년 집회방해는 물론 폭력테러가 자행되었다고 민주노동당은 전했다. 심지어 대우그룹은 지난 13일 열린 합법적인 집회개최에 대해 대우정밀해고자 17명을 업무방해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하였다.

해고자복지 약속불이행 이번 대우정밀해고자의 서울상경투쟁은 대우그룹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우그룹측은 89, 91년 해고되었던 38명의 노동자에 대해 96년 5월까지 모두 복직을

시킬 것을 94, 96년에 합의했다. 하지만 복직 합의서인 4월 1일이 되어도 회사측으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해고자들의 면담요구에도 그룹측과 대우정밀(사장 권오준)측에서 두 달이 가까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17명의 해고노동자들은 7월 1일부터 24일 현재까지 김우중 회장 방배동 집과 대우증권 등 대우계열 회사를 중심으로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대우정밀해고자복직실천협의회」(의장 박중석, 대우해복협) 박중수(선전담당) 씨는 "지난 4월부터 대우정밀 권오준 사장에게 복직이행을 요구했지만 대우정밀과 직접한 합의가 아니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죽지 못해 살아온 해고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배부른 소리를 들먹이는지 사장의 양심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측이 집회 때마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강력 대처하는 것에 대해 대우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전계환, 대노협)와 함께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며, 대노협도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합의서가 이행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김해성목사등 선고공판 징역 2년 구형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목사와 양해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공판에서 김 목사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김 목사는 지난 16일에, 양 씨는 6일 보석 출감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3일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 연행과정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으며, 양 씨는 성남경찰서로 향의집행을 갔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독자투고715-9185

복직될 때까지 투쟁 이후 대우해복협은 회사

우토로 교민 주거권 인정 촉구집회 및 항의서한 전달

일시: 7월25일(목) 낮12시
장소: 일본대사관 앞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우정밀 해고자복직 투쟁 일지 (89년부터 8년간 투쟁, 조수원씨 95년말 자살)

- 89. 대우정밀 임금상향투쟁 과정에서 3명 해고
- 91. 대우정밀 임금상향투쟁 과정에서 35명 해고
- 94. 5.25 38명 중 35명 해고자들 대우정밀 복직 전에 계열사에서 1년6월-2년간 근무하고 96년 4월에 대우정밀에 복직하기로 그룹과 합의
- 95. 12.15 조수원(당시 29세 대우정밀 병력특례 해고자) 씨 복직 요구하며 자살
- 96. 1.3 89년 해고자 3명에 대해 96년 5월까지 복직 합의
- 4.1 합의서에 의한 대우정밀 복직 요구했으나 불 이행
- 7.1 해고노동자 17명 서울 상경투쟁 시작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23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중, 노개위)가 주최하는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61명의 노조 조합원을 경찰이 연행한 것에 대해 24일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측에 의하면 만도기계와 계양전기, 대림자동차의 노조원들은 노개위 공개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부를 방문했다. 만도기계의 경우 올해의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노조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구속시킨 데 항의방문한 것이며, 계양전기와 대림자동차는 회사측의 노조탄압과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기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집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대회 관련 이승환씨 검찰송치

지난달 19, 20일 이틀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 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한시해 씨와 만나 8-15 민족대회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의(국보법의 회합·통신)로 구속되었던 이승환(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씨가 24일 서울 지방 검찰청(담당검사 이용운)으로 송치됐다.

검찰 송치전에 이 씨를 접견했던 이기욱 변호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와 함께 동행했던 문정현 신부는 17일 법원이 ‘바르샤바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 씨에 대해서는 구속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려 관련 단체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행사와 동정○

- 한국정당정치와 지역주의 월례토론회
 - 일시:7월25일(목) 오후 7시
 - 장소: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대회의실
 - 주최: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362-6086)
- 구속자 후원의 밤
 - 일시:7월25일(목) 하루종일
 - 장소:명륜동 이즈 호프
 - 주최:학생운동탄압분쇄와 구속동지구출을 위한 학생대책위(953-1518)
- 범민련관련자들 항소심 1차공판
 - 일시:7월25일(목) 오후 2시
 - 장소: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 문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762-1238)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임시 운영위원회
 - 일시:7월29일(월) 오후 2시
 - 장소:민족회의 사무실
 -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45-5872)
-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 정책간담회
 - 일시:7월30일(화) 오후 3-6시
 - 장소:연세대학교 일관관 제1회의실
 - 주최:한국교회인권센터764-0203)
-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 모친상
 - 박원순 변호사가 7월24일 새벽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부산 동아대 부속병원 영안실이며, 발인은 26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남 창원군 장마년 장거리 선산이다.
 - 문의:051-256-7011(부산 영안실), 796-8364(참여연대)
- 노동과 건강연구회 주소 변경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6-4 구로선경오피스텔 712호
 - 전화: 866-9175 팩스:586-4385
- 5·18 민중항쟁 자료집 신청 안내
 - 80-94년까지 5월투쟁 일지와 5월과 죽음, 12·12와 5·18 관련자 서훈과 포상 내용 등 5·18 민중항쟁 자료집이 완성되었다. 가격은 플로피 디스크 3.5인치 1장당 3천원.
 - 문의: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062-25-8117)

<인터넷 인권운동사랑방>에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해외민간단체들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북한수해돕기 인터넷 캠페인 Help North Korean Flood Victims : News /일본군 위안부 문제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The Comprehensive Human Rights Initiative Home Page/Amnesty International On-line/Human Rights Resources/DIANA -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tabase/Human Rights Web/Australian Human Rights Page/Solidaritygroup Political Prisoners/Human Rights Watch/APC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Greenpeace/EFF (Electirc Frontier Foundation)

<이달의 주제-노동권>
모든 사람·공립학교 교사들의
자유로운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장애인 먼저’보다 ‘장애인 소외’우려 4월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 발족

범국민 캠페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먼저’ 운동(‘먼저’ 운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다. 아직까지 장애인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먼저’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소외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로 추진된 ‘먼저’ 운동은 4월 3일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중앙추진본부장 조일목, 중앙협의회) 결성대회와 더불어 본격화했다. 6월까지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방협의회

결성을 마친 중앙협의회는 현재 장애인에게 차례 양보하기, 편의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작업과 ‘인연맺기 운동’ 등의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운동과 관련해 이형용(중앙협의회) 간사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자신도 예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에게 나서는 장애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의 지시로 추진된 ‘먼저’ 운동은 4월 3일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중앙추진본부장 조일목, 중앙협의회) 결성대회와 더불어 본격화했다. 6월까지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방협의회

운동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정작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장애인들의 의사와 참여가 무시되고 있다는 데 첫번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번 운동이 장애인들을 정책 결정의 들러리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고,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장애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장애인 복지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운동 추진과정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2주전 대구에서 열린 ‘장애인 먼저’ 실천대회에서는 대회장에서 발표된 ‘장애인 참여 결의문’의 내용을 놓고 지역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결의문의 내용이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이웃의 관심에

맡기는 등, 장애인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결국 대구지역 장애인들은 ‘먼저 운동 불참’이라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불쌍한 사람 돕기 식의 시혜적 관점에서 운동이 진행되는 한, 고용이나 생활보장 등 실질적 장애대책 마련보다는 전시용 슬로건과 이벤트 차원의 운동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먼저’ 운동과 관련한 잡음은 축소·무마할 문제가 보다 확대·공개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운동의 추진 당사자들과 현실적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단체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인권운동의 방향 인권센터 정책간담회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한국인권운동의 방향과 정책을 점검해 보고 한국교회의 인권선교과제를 세우는 ‘창립정책간담회’를 오는 30일(화) 오후 3-6시 연세대 알렌관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는 ‘한국인권운동의 전망과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과제’ (김상근 목사) ‘과거정산(유신, 5·6공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곽노현 교수)의 주제발제가 있다.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외국인노동자들이 한 달 가까이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던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목사와 양 씨는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밝히고 “다만 한번도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신분이 분명해 김 목사에게는 징역8월에 집유유예 1년을, 양 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은 예상했다”며 “이후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적자에 허덕이는 <하루소식>에 힘을 주세요.
지로번호: 7618848

“우토로교민 주거권을 인정하라”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당해 오늘날까지 살아온 우토로 교민 80세대 3백80명의 주거권이 박탈될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25일 낮 12시 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속에 우토로주민의 주거권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경남(NCC 인권위원회) 목사는 “우토로마을 문제는 또하나의 정신대문제이다. 이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전후책임 규명에 원인이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정부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50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를 하루 아침에 빼앗기게된 우토로 교민의 싸움은 지난 8년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 문제가 알려지게 된 것은 불과 지난 4일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천주교 인권위·NCC 등에서 우토로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서명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 우토로 교민문제를 처음으로 알리고, 직접 현지를 2번 방문한 조상훈(광진구) 시의원은 “우토로 마을은 조그만 한국인 마을이다. 그곳은 50년간 억눌리고, 탄압받아오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책임을 무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이를 민간기업에 맡겨버린 것이다. (유)세일본식산 회사는 자본의 논리대로 교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당시 강제징용되어 온 이들을 우토로마을에서 내쫓는 것은 다시 한 번 삶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일본정부는 전쟁책임과 전 후보상 차원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시인하고 우토로 주민의 주거권을 인정·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조상훈 의원, 김경남 목사, 박정기(유가협) 회장 등 대표단은 일본 대사관 정치과장에게 대사관 입구에서 우토로 교민 토지문제에 대한 인권협의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7월 말경 있을 예정인 우토로마을 소유권문제에 관한 1심 재판결과는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정보통신 주권 수호 PCS 국정조사 촉구

재벌기업들간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진흥당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고 활동해온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등, 범대위)는 지난 19일 활동 평가와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범대위측은 “비록 PCS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끝났지만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하반기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재벌 통신 독점의 폐해를 알리고, 범대위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한 내용해설과 분석 등을 담은 소식지 발간과 지역별 범대위 및 노동·학생 단체

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강연, 설명회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국회를 대비해 자료 취합과 청문회, 국정조사권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핵발전소 반대투쟁 광주 사회단체 집결

영광핵발전소 5·6호기 건설반대를 위해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20여개 종교·시민·노동운동 단체들이 (가칭)「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저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긴급대책회의)를 결성하고 핵추방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긴급대책회의의 구성은 지난 11일 감사원이 ‘영광군의 발전소 건설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영광군수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건설허가를 다시 내주라고 명령한 점과 19일 핵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 공동의장 박재완 신부와 김현수 사무국장 등 3명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영광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긴급대책회의의 임낙평 씨는 “감사원의 철회 판결은 지방의 불안정 등 위험성에 대해 고려치 않고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향후 모든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대책회의는 이후 매주 목요일 아침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7월 말경 영광군과 도의회 그리고 핵발전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등, 전국사제단)은 영광 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국사제단은 “영광군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중앙 정부측이 건설허가를 명령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한편, 영광핵발전소 5·6호기 건설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반대활동을 해온 「영광핵발전소추방위원회」(위원장 강호성) 소속 회원들은 지난 22일부터 군수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9월 11일까지 핵발전소 앞에서 박재완 신부 실형선고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인권운동사랑방>에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해외민간단체들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북한수해돕기 인터넷 캠페인 Help North Korean Flood Victims : News /일본군 위안부 문제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The Comprehensive Human Rights Initiative Home Page/Amnesty International On-line/Human Rights Resources/DIANA -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tabase/Human Rights Web/Australian Human Rights Page/Solidaritygroup Political Prisoners/Human Rights Watch/APC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Greenpeace/EFF (Electric Frontier Foundation)

<이달의 주제-노동권>

모든 사립·공립학교 교사들의 자유로운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홍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

작년 12월 4일 고 장현구(당시 27세, 제적)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경원대 사태가 8개월이 다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26일에는 1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새벽 4시경 유원목(부총학생회장) 씨 등 학내 문제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학생 14명을 구속하기 위해 폐포포그등을 동원해 최루탄을 단사하며 1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대학본관에 투입되었다. 당시 본관 3층에는 고소·고발된 학생 14명 뿐이었으며, 이들은

의자,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건물 밖으로 도움을 청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경찰측은 최루탄과 소방호스, 해머와 곡괭이 등을 동원해 구속하려 했으나 결국 3시간 동안의 전쟁터를 방불케한 접전 끝에 7시경 철수했다고 학생회측은 전했다.

새벽4시 1천여명 투입

이 당시 경찰측은 학내 동아리실등에 있던, 구속대상인 김장훈(영문4) 씨 등 14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그 뒤 당일 아침 9시경 해당학생 학부모와 학생들이 성남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불법연행에 항의하자 풀어주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한 폭력적인 연행 과정에서 조지영(총학 선전국장, 관광경영 3학년)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씨는 연행된 뒤 경찰버스 안에서 머리를 박으라는 말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곤봉으로 목을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최명화(영문 2) 씨는 연행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찰측은 '경원 TV'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학교당국의 폭력사태를 담은 비디오테이프 1백여 점과 학생회, 동아리실에 있던 서류와 물품 등을 압수했다.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점유 선고

‘노동자-사민을 위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24일 13명이 국보법(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으로 무더기 구속되었던 한국노동청년연대(한노청) 이기주 의장 등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기호 판사(형사합의 22부)는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한노청의 이념적 기초는 맑스주의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는 생각은 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노청 관계자는 “대부분 5년 이상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점유를 선고한 것은 공안기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후 의장 등이 석방된 뒤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결과> 이기주: 징역2년 점유3년/전상훈(부의장): 징역1년6월 점유2년/박선미(편집국장): 징역1년 점유2년/오치근(대의협력위원장): 징역1년6월 점유2년/정미은(총무국장): 징역1년 점유2년

여 명의 경찰병력이 1차 투입되었는데, 당시 학생회측은 농촌활동을 떠난 상태였다. 당시 동아리실에 있던 고종환(건축설비 3, 동아리탈패 소속) 씨가 “영장을 제시해라”고 요구하자 “영장없다. 수배자를 잡으러 왔다”고 말한 뒤 “나가라”는 고 씨의 요구를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곧 석방했는데 이는 경찰측이 미란다 원칙도 준수하지 않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학생회측은 “무장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학내문제 개입 차원을 넘어, 현시기 공안정국 조성으로 예국학생들을 구속하려는 김영삼정권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96 민족평화선언 각계 인사 106인 참여

26일 휴전협정체결 43돌을 맞으며 박용길(통일맞이 이사장)씨등 각계인사 1백6명은 96년 민족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족평화선언을 통해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감돌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당면과제로 △평화협정체결 △남북공동조약체결 △수해 복구 등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도울 것 등을 선언했다.

5일 1차 공권력 투입
또한 이미 지난 5일 3백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

또다시 과거 활동을 문제 삼아 군 복무중인 군인과 학생 등 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었다.

이 사건의 연행자 모두는 원주에 소재한 상지대 출신들로,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기무사 소속이라며 여준성(군복무중·93년 총학 정책실장 90학번) 씨의 집을 찾아와 가택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상지대 총학생회의 대공만(학생복지위원장, 89학번) 씨는 “여 씨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른 연행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돼, 알아본 결과 6명이나 더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27일 당일 면회를 한 학생들과 가족들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잠을 깨우지 않는지 몹시 피곤해 보였으며, 10명 이상이 나타나 있는 조직표를 가지고 추궁을 했다고 전했다”며 더욱 많은 연행자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근래들어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에 대해 오창익(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차장)씨는 “정부당국자들 시각에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주사파이거나 색깔이 붉다는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반 국민에게 먹히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 씨등 군인 4명은 36사단 헌병대에서, 장용길(통계학과 91학번, 95년총학 정책국장) 씨등 3명의 학생들은 강원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명단>

여준성/정재호(식영과 91, 94년 총학생회장)/이문수(물리학과 91, 95년 총학 문화국장)/김계현(산업공학과 91) 이상 군인/장용길/최해선(식영과 92, 94년 과학회장)/김인봉(전산과 94, 96년 과학회회장)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유치원생들을 ‘예절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안산시 우성유치원 사건에 대해 피해 부모들과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안산시 우성유치원 성폭행 사건 대책위’(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의 첫 사업으로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집단·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원장 정태영이 ‘성’에 대한 무방비 상태인 어린이에게 성추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원장을 법정 최고 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해 친고죄 폐지, 불고지죄 추가 및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기관 및 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문의:0345-418-6361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 (96년 7월부터)	
구속자(22-28일)	7명
합계	37명

주간/인/권/호/름

(96년7월22일부터 7월28일까지)

<22일(월)>

안기부, 무하마드 칸수(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씨 북한 출신 고정간첩 정수일(62) 씨로 밝혀졌다고 발표/도봉경찰서, 초등학교를 유인해 성추행한 강호군 일병(21) 붙잡아 수사기관에 넘겨/미국 시카고 중심가의 나이키 전문체인점 ‘나이키 타운’ 앞에서 인도네시아 여성헤고 노동자 시위

<23일(화)>

노사관계개혁위 주최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만도기계 노동자 61명 연행

<24일(수)>

서울지법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 6월 폴란드에서 북쪽 인사들을 만난 혐의로 구속된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구속적부심 청구 22일 기각, 24일 검찰송치

<25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조원철 판사), 김해성 목사에게 징역8월, 집유1년 선고/천안경찰서, 대학가내에서 데이트 중이던 여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남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아무개씨등 5명 구속영장 신청, 2명 수배/일본 우토로 고교인 주거권 인정을 촉구하며 인권협 30여 명 일본대사관 앞 시위

<26일(금)>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 26일 시위중 직격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목포대생 정지법(24·법학4)씨가 국가상대 손해청구소송 환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 전 교조가 작년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등록 신청 거부취소처분 소송에서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 등록을 거부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 옛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일시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전달할 사과서한에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 명기할 예정

<27일(토)>

청소년대회 광장, 청소년 1천5백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34.4%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6천여 명의 좌익·쿠르트족 재소자들의 교도소내 처우개선 요구 받아들여져 69일만에 단식투쟁 마감, 단식투쟁 통해 12명 사망, 20명 위독/미국 전 국방부 관리, 일본 오키나와현의 반미군 감정 무마위해 훈련 장소를 한국으로 옮길 것을 제안

<28일(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1·2심서 살인 및 방화죄로 징역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17)군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해설>===== 전·노씨 등 12·12와 5·18 사건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구형이 다음주초에 내려질 예정이다. 과거침산에 대한 제대로 된 진행은 커녕 재판정에서 전·노의 사면을 요구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8개월 만에 마무리 짓는 이번 재판에 모든 국민과 전세계의 양심있는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재판결과를 통해 우리는 현정부가 목청껏 외쳐온 역사바로세우기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의 주제-노동권>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을 철폐하라
-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말』지 판매금지 이유를 밝혀라 전국 서점, 보안과 판매금지 협박받아

학생과 노동자, 재야 인사들의 인신구속도 모라자, 이제는 공보처에 정식 등록 대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월간지까지 공안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월간 『말』지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말』지 8월호가 전국 서점에 출고되자마자 각 출판과 서점에 보안과 형사들이 찾아와 “『말』지를 몇 권 팔았느냐”

말하라”는 등 협박과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보안과 형사들의 조사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대도시에서 일어났으며, 일부 서점에서는 책을 숨겨두거나 추가신청을 피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금도서 목록 대며 협박
광주 소재 서점의 경우

지난 26일 경 광주 동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들이 찾아와 판금 도서목록을 적은 8월지 종이 2장을 들이대며 “『말』지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해, 서점 주인이 항의를 했으나 결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서점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줬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 광장 서점 이광식 씨에 의하면 전주 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형사라고 밝힌 사람이 『말』지와 『길』지가 포함되어 있는 판금 도서목록 가져와 “판금금지 도서는 팔아서는 안되니까 반품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형사들은 “오늘 업무일지에 잘 써야 하니까 그럼 반품했다는 확인서만이라도 써달라”고 졸라, 손님이 많고 계속 귀찮게 해 형사들이 쓴 종이 서명만 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을 하반기 개정될 것”-63.6%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소속 노조 간부들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중, 노개위)에 참가한 것에 대해 58.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63.6%가 ‘노동법은 을 하반기에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21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에 참석한 2백24명의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개정 관련 노조 간부 의견’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설문조사는 주진우(민주노총 조사통계부장) 씨는 “최근 노동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조합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개위 참여에 대해 대체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매우 잘못된 일로 지금이라도 참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간부들도 18.1%나 되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생리휴가제에 대해서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0.7%, ‘생리휴가를 건강유급휴가로 대체해 남녀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가 43.8%로 나타났다.

성명서 발표를 통해 “『말』지는 군사정권하에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말』지측은 “11년 동안 합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언론매체를 경찰이 어떤 근거로 서점 주인들을 협박하면서 팔지말라고 요구를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며 “이는 4·11 총선 이후 지속되는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다 정확한 사태파악을 한 뒤, 모든 조치를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씨 국보법 구속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이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이던 조성우(47) 씨가 29일 오후 10시30분 동대문 부근에서 안기부에 연행, 구속되었다고 전국연합측은 30일 밝혔다.

조씨의 구속은 바르샤바에서 북한대표와 만나 8·15민족대회 개최문제를 논의한 이승환 씨의 구속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연합측은 30일 성명을 통해 “안기부가 이승환 씨를 구속한데 이어 조씨마저 구속한 것은 민간차원의 다양한 통일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냉전적 발상을 비판하며 조씨를 비롯한 통일인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96년 7월분 총목차(675-695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75	7/2	1	"동티모르 독립과 연대에 관심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인권협 초청으로 방한/전해투, 반 복되는 LG해고자 연행·석방에 항의하며 노동부 방문/전학련 사건공개결의에 청와대 무 반응/주요공판안내
		2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주간인권호름(6월24일 부터 30일까지)
676	7/3	1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UN 현대형 노 예문제 실무위원회,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급 철회/노진추 회원 불법 연행
		2	<자료>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96 남한편① -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AI, 인턴 모집 26일까지 신청
677	7/4	1	민주노총,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산재를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민변, 최대통령 구인 통해서라도 진실 밝혀야/민주노총, 정리해고제 등 강행시 총파업 불사/<인터뷰>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산토스 씨 "동티모르에선 가족간에도 신뢰할 수 없다"
		2	세계의 인권④ -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법적 '조 사'와 '고문' 사이에 뚜렷한 구분선 있어야
678	7/5	1	고문후유증 앓고 있는 장기수인 유정식 씨 석방촉구 위해 일본 유정식회 입국/남북합의 이행촉구, 종교인 전국순례 마감
		2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적어"/전학투련 또 1명, 국보법 위 반 연행/전해투 후원회 모집/복지합의 불이행, 대우해고자 상경투쟁/행사와 동정
679	7/6	1	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밝혀/이상희 할머니 집유 판결,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동티모르 모임 "동티모르에도 위안부있다"고 밝혀
		2	합법 취업자 5.8%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민변등, "노동법 개악 의혹"에 대 한 공동기자회견/인권간행물
680	7/9	1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성폭력 상 담소, 성폭력 여학생 왜곡 보도는 "남성중심의 성의식"이라고 언론 비난/주요공판안내
		2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안칼날 '진보' 단체 겨냥/중부지역당 사건 구속, "과거 들추기 여 전"/양해우씨 보석 석방/주간인권호름(7월1일부터 7일까지)
681	7/10	1	신양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 "학교내 성폭력 이제 드러낼 때"/<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 - 60대 교사가 10살 여자 지속적인 성추행/나눔의 집 여름캠프
		2	3년전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마창의장 구속/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국가행동계획에 민간참여 보장해야/<자료>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96 남한편② -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682	7/11	1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광주교도소 양심수, 공 안탄압 중지 단식/현충원, 정리해고제 반대하며 경총 항의방문
		2	AI 한국지부, 전국교육대회 가져, 한상범 교수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강의/<자료요약> - 인권보장과 동양사상/김해성 목사 재판, 교계원로 석방촉구
683	7/12	1	청년운동단체 비상, 예국크리스찬청년연합 13명 또 연행/김해성 목사 공판 참가기-"외국 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징역 2년 구형/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 요일 명동성당/단병호 씨 만기출소, 민주노총 15일 환영회
		2	<자료요약>인권보장과 동양사상② -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행사와 동정
684	7/13	1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변란의 증거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박충렬 씨 사건 일지/인권하루소식 편집장 불법연행·구금
		2	CIA 정보원, 암살·고문 자행했다고 미 백악관 보고서 밝혀/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기금마련/김 추기경 청와대에 박노해 씨 석방 탄원/인권간행물
685	7/16	1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다> "존립근거 마련위한 공안당국의 발악"
		2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폐쇄적 적용해 시위경력자 구속조치/정부의 '좌 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주간인권호름(7월9일부터 14일까지)

<인권하루소식> 96년 7월분 총목차(675-695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86	7/18	1	"재일교포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탄압, 투쟁으로 대응" 애청, 명동성당서 농성/주요공판안내
		2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행사와 동정
687	7/19	1	"3당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복사 병보석 석방, 3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 마감/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측 신고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이라고/인권탄압 저지, 천 주교 대책위 18일 발족/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2	<자료>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96 북한편 -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소환, 수재로 이재 민 50만명 탈주자 발생/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688	7/20	1	"법무부! 야미한 술책 그만둬라", 친목단체인 「중국노동자협회」에 빨갱이 혐의 씌워/<현장스케 치> - 세계인권포스터전, "펜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라"/체협! 삶의 현장, 청소년 열린학교
		2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간수 교수 변호인들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성폭력 사건 홍 미보다 대책마련을/인권간행물
689	7/23	1	간수 교수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 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가정폭력에 경 찰의 적극 개입 필요, "경찰, 가정에서 해결해라"/정대협, 기금반대 서한/주요공판안내/국보법 구 속자 상황판
		2	<자료요약>-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주간인권호름(7월16 일부터 21일까지)
690	7/24	1	원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 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전국연합, 북한수재민돕기 쌀 '더위에 부패 위험'으로 적십자사 전달/동티모르 독립위한 모임 가을 장립대회
		2	<자료요약>-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폐해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추진법 제정 필요
691	7/25	1	복지합의서 이행 대신 폭력테러, 대우그룹 해고자 17명 업무방해로 고소/대우정밀 해고자복지 투 쟁 일지(89년부터 8년간 투쟁, 조수원씨 95년말 자살)/김해성 목사등 선고공판, 징역 2년 구형
		2	"누구 위한 노동법 개정인가", 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잠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 대회 관련 이승환 씨 검찰송치/행사와 동정
692	7/26	1	'장애인 먼저' 보다 '장애인 소외' 우려, 4월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 발족/김해성 목사 징 역 8월에 집유 1년 선고/인권센터 정책간담회, 한국인권운동의 방향
		2	"우토교도인 주거권 인권하라",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정보통신 주권 수호, PCS 국 정조사 촉구/핵발전소 반대투쟁, 광주 사회단체 집결
693	7/27	1	홍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무법천지 경원대 14명 학생잡기 혈안/"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선고/96 민족평화선언, 각계 인사 106인 참여
		2	<대우정밀 해고자들이 원직복직을 원하는 까닭> "약속과 신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상급자 명령 불복종시 강제 출국", 중국인연수생 8명 기독교회관 농성/인권간행물
694	7/30	1	민가협,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핵발전소 건설반대자 실행선고에 대해 독일 환경단체 석방 촉구/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주요공판안내
		2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우성유치원 성폭행대책위, 어린이보호특별 법 제정 촉구/주간인권호름(7월22일부터 28일까지)/7월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
695	7/31	1	말지 판매금지 이유를 밝혀라, 전국서점서 보안과 형사들 판매금지 협박/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63.6% 율하반기 노동법개정 예상/전국연합 자문위원장 조성우씨 구속
		2·3	96년 7월 총목차(675-695호)

광주대교구, 영광핵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기도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오는 8월 5일부터 매 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광주 가톨릭센터 앞에서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철폐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모든 성 당에 일제히 영광핵발전소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기로 결의했다.

구독료! 아래 지로로 납부를

적자에 허덕이는 <하루소식>에 힘을 주세요.

지로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96년 8월

(제696호 - 제717호)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①
사실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략 우려

전·노 재판이 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다가올 사면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31일 열린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정책간담회에서 '유신, 5·6공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산'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서 세워놓은지 반 년이 지난 지금 재판은 파행으로 흐르고, 5·6공의 실세들이 은밀하게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항소심이 끝날 무렵인 올해말 정도면 사면정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그들에 대한 사면은 5·6공 자체나 그 지도층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재판은 과거청산의 발판 마련이 아닌 과거청산의 종말이며, 완벽한 과거미봉의 정점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 25일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에서 "사면이 된다면 5·18재판 전체가 사면을 위한 사법 쇼로 전략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청산인가, 종말인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 데

에는 현 정권을 비롯해, 검찰·야당·시민사회단체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야합사실을 사죄하고 대선자금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되찾아야 했다. 또, 검찰도 불기소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검사제를 수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야당 또한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재판을 계기로 진상규명운동과 과거청산운동을 보다 힘차게 전개했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 그 결정권을 전적으로 맡겨버린 이번 재판에 국민들은 별다른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6·10항쟁 주역 중심으로
곽 교수는 "지금을 놓치면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사면정국 대신 과거청산 정국으로 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5·6공 시절의 핵심 지도급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죄 및 용퇴를 압박하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5·6공 등 군사독재정권에서 발생한 인권피해와 관련된 과거청산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권피해 상황의 증거수집, 인권가해자 비리제보운동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면정국을

타개하고 청산정국을 열어야 할 주체세력으로 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거둔난 이 땅의 모든 민주적 시민·사회단체들을 꼽았다.

성폭력에 방지침서 성폭력 상담소 제작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가 제작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지난 7월 여성의 주권을 기념하며 26일부터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어린이 성폭력 예방 지침서-부모와 교사용」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상담소는 "어린이 성폭력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큰 후유증을 남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침서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지침서에는 상담소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해서 피해 어린이의 사례와 가해자들의 유인방법, 피해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증상 등 전반적인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의:576-7127~8.

○행사와 동정○

- 청년정보문화센터 여름마을
 - 일시:8월2일(금)-4일(일)
 - 장소: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 주최: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 극단 새벽, 2기 연극학교
 - 일시:8월5일(목)-12월20일(금)
 - 장소:소극장 실천무대
 - 주최:극단 새벽(051-806-0828)
- 알찬노후를 생각하는 모임
 - 일시:8월8일(목) 오전 11시
 - 장소:노후복지센터 4층
 - 주최:한국노인의 전화(363-8005)
- 지탁연,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출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를 출판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 집에 대한 인식고취와 함께 아동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각 서점에 판매중이며 가격은 5천5백원. 문의: 275-8505
- 참교육시민모임 주말농장

참교육시민모임은 주말농장에 참여할 회원가족을 모집한다. 참교육시민모임에 연락하면 텃밭을 빌릴 수 있다. 문의: 965-9171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창원지법 민사 제11부(재판장 김상호)는 대림자동차가 노조(위원장 이경수)를 상대로 낸 '쟁취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쟁취행위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임단협 대상과는 무관한 채결권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만큼 노조는 파업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31일 현재 41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대림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원 권대운 씨는 회사측이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된 1, 2차 단체협약 협상에서 교섭대표들이 머릿피와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며 "채결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노조와 협상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으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림자동차 노조가 지난 5월 1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협상채결권이 노조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 노조 규약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원장과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규약 변경을 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회사측은 노조위원장에 협상안을 총회에 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으며 노조측은 반대입장을 밝히며, 6월 5일 쟁의 발생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해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사항으로 법원

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회사측이 규약을 빌미로 삼는 것은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했다.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 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당시 67세) 씨를 대신해 현행 노인복지법 13조(노령수당)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임의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있는 데 대해 '최저생활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95년 4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뒤, 올 4월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 환송판결을 받았다. 앞서 재판진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령수당 국가재정상황인 '예산'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노령수당 대상자의 연령기준, 노령수당의 임의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4일 오전 10시.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5·18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더이상의 역사왜곡과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고 참회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라"

우리 5·18 서명교수 일들은 피고인들의 출정거부 및 변호인단의 변론거부등 5·18재판의 파행적 진행을 지켜보면서 깊은 분노와 탄식은 물론 심각한 우려와 경계를 금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작금의 상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 서명교수들은 현재 진행중인 5·18재판의 진정한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전두환·노태우 등 일부 군출신 인사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정점으로 한 5·6공 정권 전체, 특히 이들에게 굴종하고 영합한 당시의 사회지도층 전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5·6공의 불의한 권력에 빌붙어 특권과 영화를 누린 당시의 고위 지도급 인사들중 지금까지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거나 용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이들은 여전히 막강한 권세자로 거듭 피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절없는 역사계승의 기치 아래 전두환·노태우 등의 무죄를 주장하고 사면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적 작태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가선의 변호인들은 5·6공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라도 계속 그와 같은 몰염치한 작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을 대신하여 변호인들을 역사의 법정으로 끌어내 엄혹히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 서명교수들은 벌써부터 사면을 운운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분개하고 경계한다. 전·노 등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사면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현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사면할 자격이 없다. 그 경우 5·18재판 전체가 한낱 사면을 위한 사법 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명교수들은 5·18재판과 관련된 작금의 파행적 상황이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 엄정한 자기 반성없이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서명교수들은 따라서 현 정권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과거의 3당야합 및 대선자금의 진상을 공개하고 사죄함으로써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당당한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여 피고인들이 겁내는 추상같은 정권이 될 것을 경고한다.

1996년 7월 25일

5·18 내란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 서명교수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②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적인 인정
-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과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들조직 대표 등 중앙위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동법 개정안 실현을 위해 '노동법 개정 투쟁본부' 구성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준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노총측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노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금지 삭제등
민주노총측이 밝힌 노동법 개정안은 'ILO 기준에 따른다'는 원칙아래 복수노

조 금지조항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 조항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의 집단체적 노사관계법 개정안과 주 40시간제, 정리해고 제한 조항 신설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동법 개정을 통한 조직의 확대·강화'라는 목표로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 투쟁 △조직의 확대·강화를 올해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안 노동법 개정

민주노총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노개위의 상황을 진단해 보면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이라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8월말 노개위 개정안 확정과 9월 중순의 정부안 확정, 그리고 12월

초경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급박하게 진행될 노동법 개정 일정에 맞게 적절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개혁투쟁을 위해 민주노총은 9월 말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선전을 시작하며 노개위 개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총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재벌경제 타파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세계 개혁 등 사회개혁 투쟁도 함께 벌일 예정이며, 8월을 맞아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해 노동조합의 통일운동 모범 만들기를 하반기 사업의 하나로 발표했다.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기무사 임재문 사령관의 비리를 추적해 기사화했던 주간 <시사뉴스>의 발행인 강신한(45) 씨가 구속된지 채 두 달도 안돼, 특집부차장 이종원(33) 씨가 31일 전격 구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사뉴스 관계자들은 임재문 사령관 개인의 명예훼손로 고소당한 일로 두 사람이 구속한 것은 기무사의 압력

을 받은 지나친 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이종원 차장과 2명의 기자는 서울지검 한회원 검사로부터 '몇 가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이 씨 등은 기무사 비리기사와 관련해 발행인이 이미 구속되었고, 기무사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별의심없이 조사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무사 비리기사 이후 계속된 압력에 맞서 구성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시사뉴스 비상대책위원회」(시사뉴스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시사뉴스 비대위의 이름으로 배포된 각종 유인물의 배후에는 이 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들어 당일 구속한 것이다.

이날 함께 조사를 받았던 김아무개(시사뉴스 기자) 씨는 "기무사 비리고발 기사는 분명한 증거와 증언, 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한 뒤 보도된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 보다 기무사 사령관 등 기무사 지도부의 비리에 대한 사실여부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사뉴스 임직원 일동 명의로 1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한 명백한 진실 규명과 △15대 국회에서 즉각 조사에 나설 것 △발행인 등의 석방을 촉구했다.

현재 이종원 씨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시위 강경진압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항의서한 전달

따 2일 오후 2시
곳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KBS 별관 앞)
주최 인권협·참여연대

통일운동 탄압 분쇄 및 조성우위원장 석방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따 2일 오후 1시 30분
곳 내곡동 안기부 신청사 앞
주최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소속 재 단체

세계의 인권 ⑥ -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대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광주'로 일어났었다 녹아내렸다 하는 심장을 부들켜 안고 살아온 우리에게 집단학살은 결코 낯의 얘기가 아니다.

뉴욕에 위치한 제노사이드연구소의 90년 보고서에 따르면, 45년 이후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의 2배에 가까운 수가 집단학살과 대량학살의 정치적 살인으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사실 집단학살은 전세계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도 있어 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알려지지조차 않은 채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고대문학은 사라진 민족과 도시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지만 그들 집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다만 악마의 종교와 사악한 민족을 무찌른 승리자들의 이야기로 미화되어 있을 따름이다.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집단학살의 사례들이 조금씩 보고되기 시작했으나, 많은 진실이 묻혀있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학살자들은 언제나 많은 증거를 인멸했으며, 학살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통제하면서 교묘하게 역정보를 퍼뜨려 왔다. 이리하여 분명히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부인현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학살'이란 48년 유엔 제노사이드(Genocide) 조약에 규정된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어느 국민·민족·인종·종교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이들 집단에 대한 계획적인 대량학살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생활조건에 고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치를 강제하는 행위, 그 집단의 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집단에 옮기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집단학살 연구자들은 제노사이드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비판적이다. 그들은 집단학살의 주요 희생자가 사회·정치·경제적 집단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단학살의 대상을 국민·민족·인종·종교

집단에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 "억압자에 의해 특정된 집단과 그 구성원을 절멸시킬 의도로 국가나 여타 당국이 저지르는 일방적인 대량 살인의 형태". 즉 '집단'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학살하고 싶은 집단들을 국가나 지배집단에 대한 조직화된 반대세력으로서 정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 '파괴자' '국민의 적' '사회의 독소' 등 일반적인 집단의 정의에 들지 않는 용어로도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단학살의 대표적 유형들

(1) 선주민과 소수집단에 대한 집단학살

아메리카 인디언의 운명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이다. Human Rights Quarterly (11)는 현재 1백26개국에 걸쳐 2백37개 사회적·민족적 소수집단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 불평등한 통치구조하에서의 독립에 뒤따른 학살

20세기 인류취대의 비극으로 일컫어지는 브룬디와 르완다의 참상이 그 예이다. 93년말 브룬디에서는 적어도 50여 개 시에서 일어난 학살로 수주만에 5만 명에서 8만 명 가량이 살해되었고, 약 70만 명의 난민을 순식간에 낳았다. 94년 르완다에서는 3개월도 채 못되는 기간동안 50만 명에서 1백만 명 사이의 인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비극의 원인은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종족갈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노사이드 연구자들은 이들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는 종족갈등의 씨앗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아무 것도 아니었던 종족의 차이는 두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에 기반한 벨

기에의 위임통치와 그 통치구조를 유지한 독립을 통해 불거지게 되었다.

투치인인 소수 지식인이 전체인구의 85%에 해당하는 후투인을 지배하면서, 후투인은 정치·교육·경제적 무대에서 완전히 배제당해야 했다. 독립후 후투인의 쿠데타와 투치당국의 보복, 갈등과 두려움의 확산, 또다른 살인과 보복이 이어져왔고 상상을 초월하는 학살의 무대를 연출하게 되었다.

(3) '자주'와 '독립' 요구를 억누르기 위한 학살

이 경우 학살자는 그 대상집단이 적과 내통하였다거나 사탄의 종교를 섬기고 있다거나 하는 악선전을 일삼지만 실제로 이들의 자주와 독립요구를 묵살하는 이유는 이들 거주지역의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75년 인도네시아에 의해 불법강점된 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학살당해온 동티모르나, 이라크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폐허가 된 고향마을에서 사막으로 내몰린 쿠르트(Kurds; 이라크 내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로 독립시도는 좌절된 채 이라크 정부의 공격을 여러차례 받아왔다. 걸프전 이후 유엔이 이라크 내에 '안전한 하늘'이라는 거주지대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공격의 위협하에 있다. 이들이 조상대로 살아온 땅에는 석유가 풍부할 뿐더러 유럽으로 통하는 주요도로와 석유파이프 라인이 있다)인의 비극이 그 예이다.

학살자들은 언제나 증거를 인멸하고 학살에 관한 정보접근을 통제하면서 교묘하게 역정보를 퍼뜨려 왔다

(4) 국가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불모로서의 집단학살

한 국가 내의 여러가지 사회적, 계급적 불만을 일정한 집단으로 쏠리게 하고, 그 집단을 학살함으로써 국가적 결속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이다. 나찌의 유대인 학살과 쥘시학살,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조선인 학살 등이 그 예이다. 현대의 예로는 이란 내의 바하이 교도 학살을 들 수 있다. 79년 이란 내의 이슬람 혁명 이후 90년대까지 35만 명의 바하이 교도중 2만 명 이상이 처형되었고, 자의적 구금과 고문, 교육과 고용의 봉쇄, 집과 소유물의 압수가 자행되었다.

폐쇄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학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많은 경우 서방인론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서방인론이 그 학살사건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는가, 얼마나 보도를 지속시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명칭을 붙이는가 등등에 따라서 그 학살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일방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이 무시되고 쌍방의 갈등으로 부각된다든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가권력의 학살행위가 비조직적이고 우발적인 민족·종교 집단의 폭동 결과로 둔갑한다든지 혹은 민간단체나 실제 저항자인 난민의 증언은 과장된 것으로 무시되고 해당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만 크게 의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진실은 가려지고 비극은 계속되게 마련이다. 정치적인 또는 문화적인 편견과 거기에 따르는 치우친 인식, 그리고 체계적인 정치·경제적 제재가 집단학살의 보도를 가로막게 된다. 어쨌든 학살사건의 상업적 보도는 왜곡되기가 십상이다. 하나의 집단학살이 미국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는 학살희생자가 아주 무고한 존재로 보여야 하며 그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며, 그런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이 상당한 힘을 가진 것으로 비쳐져야만 한다고 <워싱턴포스트>지의 한 기사는 털어놓은 바 있다.

사회·문화적인 편견과 정치·경제적 제재가 집단학살의 보도를 가로막게 된다

한편, 사실이 사실대로 보도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집단학살을 받아들이는데는 큰 장애가 있다. 사람들은 진짜로 무고한 자들이 희생자가 될 리 없다는 미신을 갖고 희생자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나찌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행해진 미국대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미국대중은 유대인들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자신들이 희생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의 죽음을 하나하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식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6백만 명의 죽음이 6백만 개 인격의 죽음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장애물은 또 있다. 집단학살의 예방에 실패했을 때는 학살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며 사후적으로라도 학살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단학살을 간과해 버리는 위험과 함께 어떤 국가에 난인을 찍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신블리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해 버릴 위험이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자국민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할지라도 타국에서의 생명권의 엄청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개입을 허락하는 국제법상 개념)은 수십 년간 토론되어 왔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기구와 이론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다른 정치적 동기를 위장하기 위하여 강대국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주장할 위험이 또한 존재한다.

제노사이드 조약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의 개념에는 현실의 집단학살만이 아니라, 집단학살을 저지르려는 음모와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과 시도, 동조행위가 포함된다(3조). 이와같은 일을 저지른 자는 헌법상의 통치자권, 공무원이건, 사적개인이건간에 처벌받아야 하며(4조), 그 행위가 저질러진 영토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약 당사국에 대해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제형사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되어야만 한다(6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무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권력자에게 차별과 억압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바꾸라는, 도덕성에 기초한 인권호소는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다. 자결의 독트린은 종종 도덕의 옷을 입은 국가이기주의

집단학살은 대부분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적 민간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요구된다

의 도구로, 그리고 독재적인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런 사이버 자결론은 유엔의 힘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장 큰 독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엔 회원국 대표의 협의과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절차'와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제형사법정'의 설립이나 유엔 밖에서의 조직적인 활동형태(조기경보시스템 같은)를 창조하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국제적 민간단체의 조직적 활동이 요구된다. 집단학살은 대부분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학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결론은 증명된 바 없기 때문이다. 【류은숙 인권교육실장】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제1조 채약국은 집단학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학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a-e 생략).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 집단학살 (b)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c)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d) 집단학살의 미수 (e) 집단학살의 공범

제4조 집단학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거나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채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학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③
책임자 처벌
- 테오 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인권단체들, 한국정부 항의도 촉구

지난 달 30일 인도네시아 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해 현장 발포명령을 내리고, 시위주동자들을 색출·연행하는 등 대대적인 인권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의 인권단체 대표들이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항의서한 전달에는 인권단체협의회 소속 박정기(유가협) 대표와 김승훈(천주교인권위) 신부, 진관(불교인권위) 스님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오재식(참여연대 공동대표) 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나 대사관 직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김 신부와 진관 스님, 오재식 원장만 경비실문 앞까지 갈 수 있었다.

당초 이들은 대사를 직접 만나 항의서한과 한국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대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전에 약속해야 한다'며 대사관측이 거부

함에 따라, 40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장혜선(참여연대 국제담당) 씨는 "발포명령은 3일전에 해 놓고, 어떻게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하느냐"며 항의했으나 결국 무라드 영사부장에게 서한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

김승훈 신부는 "한국도 80년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는 역사적 교훈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에도 인도네시아 강경 시위진압에 대한 공식입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2일 오전 발송했다.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5월 미얀마 정부에 민주화 노력과 인권 존중을 촉구한 것은 좋은 선례였다"며 "그보다

더한 인권탄압을 행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오재식 원장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시민들을 향해 평화적 해결방법을 찾기에 앞서, 미리 발포명령을 했다는 것은 인도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항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은 1일 최대 야당인 인도네시아민중당 전 당수 매가와티 씨에 대한 연행을 재가했다.

통일운동 보장 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 및 전국연합 회원과 고려대생 등 30여명은 2일 오후 2시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성우(47·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씨 석방과 통일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근(민족회의 상임의장) 목사는 "아직까지도 4·5·6공의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기부에 의존해 통치하는 것은 진정한 문명정부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며 "안기부는 변화된 모습으로

통일과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긴급구속된 조성우 위원장은 94년 범민족대회 때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점과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북한대표와의 회담을 주선한 점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권하루소식 7월 31일자 참조).

민족회의는 이날 안기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와 접촉이 두절된 상황에서 민간 통일운동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남북한 민간교류가 일상화되는 시기에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꾸준히 수행할 것"이라 밝히고 "정부는 민간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는 대신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자유화하고 조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 도중 안기부 요원들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자 참석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에서 수사기관원들이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집회 방해 행위"라며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집시법 상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이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한권의 책-『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법평론』(통권 제6호, 국제법출판사 펴냄) 이번호는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재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그리고 유럽·미주·아프리카 지역인권기구 등의 내용을 1백20쪽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하루소식은 '인권보호와 국제법'이라는 테마기획으로 실린 세 편의 글을 소개한다. 국제법 절차를 통한 인권보호의 내용과 각 지역별 상황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인권보장의 법적 성질(김찬규 경희대 법대교수) 국제법 질서에 있어 인권의 위치는 첫째, 한 국가 내에서의 인권문제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며 둘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셋째, 다수의 인권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 되고 있으며 넷째, 인권에 대한 존중은 대부분이 '대세적 의무'로 되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방법에 있어 인권에 관한 실체법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권보장의 보편적 제도(김석현 한국국제법연구소장)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법은 다양한 법제도와 보장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김석현 소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주권'보다는 이로 인해 희생되는 인간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가진다는 철학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적 인권보장제도(김태현 경북대 법대교수)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노력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첫째, 48년 유엔에 의해 성립한 세계인권선언을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국제인권조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는 66년 2개의 국제인권조약(사회권, 자유권 규약)의 성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둘째, 집단학살, 인종차별, 여성, 어린이·청소년, 난민, 소수민족 등과 같은 개별적 분야의 인권을 다루는 세계적 조약의 채택. 셋째,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성립이다. 50년대 초 유럽인권규약이 발효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가동되고, 70년대에 미주인권재판소가, 80년대에는 아프리카인권재판소가 성립하였다.

이 글은 국제인권제도의 가장 모범이라 불리는 유럽인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인권제도의 수립은 어디까지나 지역내 자발적 사상에 기초해야 하며,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내 소재하는 민간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유럽인권보장제도는 94년 제11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인권법원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출소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과 함께 유럽인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는 유럽사회헌장상의 인권보장 메커니즘도 95년 제3의정서 채택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최근엔 준수법절차의 일종인 '단체고발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백개 미군기지 서울에 배치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준비위원회 발족

용산 미군기지의 폐해를 알리고 미군기지 터를 되찾고자 노력했던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 민도입 준비모임」(임시집행위원장 김용한, 준비모임)이 더욱 다양한 사업 집행과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오늘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1백5만평 중 지난 93년 9만평이 반환되었으나, 여전히 약 1백여 평의 미군기지가

수도 서울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준비모임측은 "일본의 미군기지 반환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은 한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용산 미군기지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모임에서는 여러차례 용산 미군기지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고, 현재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화' 관련 시민의식 조사'를 펼치고 있다.

◎ 인권간행물 ◎

- 「우리네 아이들」 7·8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75-8505)
· 주요내용:일본 보육의 과제와 전망/탁아교사의 철학/유아교육/PC 통신의 신문기사를 통해서 본 아동 성폭력 등 79쪽.
- 「사람과 일터」 8월호-우리일터기획(706-8637)
· 주요내용:성폭력의 배후는 무엇인가?/정신대문제를 연구하는 제일교포 야마시타 영에 씨/영화계 못된 관행 뿌리뽑겠다/경기 연착륙 시도 과연 성공할 것인가/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전국 대기업 노조 비상대책위와 대기업 노조운동 등 166쪽.
- 「민족문제연구」 여름호-민족문제연구소
· 주요내용:민족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35~37년 일제의 '심전개발' 정책과 그 성격/독립군의 국가관을 알 수 있는 '대동제국지리'/일본 군사력의 현주소/천일음악 연구현황과 과제 등 50쪽.
- 「지구촌 인권통신」 제3호-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796-8364)
· 주요내용:추한 한국기업'을 '좋은 기업'으로/공해산업의 해외진출/인도네시아 제일제당의 폐기물 방류/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회의/중국의 리복과 나이키/아시아 수출자유지역의 자본성격과 국제적 대응 전략 등 31쪽.
- 자료집:「한국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참여사회연구소(796-9581)
· 주요내용:제별지배구조와 경제민주주의/한국 사회복지정책과 시민참여 등 65쪽.
- 자료집:「학술단체협의회 소식」-학술단체협의회(271-0491)
· 주요내용:학단협이 기획·주관한 4·11 총선 평가토론회/통일로 한걸음 다가서기/미국속의 한국학 동향/살 지키기, 농업 지키기 이제 허구임을 자백해야 한다/현단계 여성이론의 쟁점/망치를 든 댄서, 그 웃음의 포효-니체의 근대정치주체 비판/새로운 것과 낡은 것: 90년 이후 이론지형의 변화와 그 특징 등 127쪽.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흥성담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89년 평양축전 걸개그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
을 그렸다는 이유로 구속, 회를 이유로 한 달이 넘도
92년 석방된 흥성담(41) 화 록 발급되지 않아 수사기관
가가 영국에서 열리는 에던 의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의
버러 국제예술제 참가 등을 심을 사고있다.

공포의 1시간 30분

사복경찰 50여명 이유없이 쫓아와

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구내에서 70여명의 대학생들은
영문도 모른채 형사들을 피해 필사의 탈출작전을 펼쳐
야 했다. 이들은 수배자도 현행범도 아니었다. 그러나
수십명에 달하는 사복형사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뒤
쫓아오자 학생들은 당혹감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1시간 30여분에 걸친 탈출극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들로 이날 오
전 법원 앞에서 열린 5·18 학살자 사법심판 촉구집회
에 참석한 뒤 학교로 되돌아 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교
대역 매표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수십명의 사복형사들
은 아무런 설명없이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을 뒤
쫓았고, 학생들은 경계의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왜
쫓아오느냐'는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형사들은 계
속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학생들은 약 1시간 반에 걸쳐 수차례 전철을 바꿔 타
는 소동 끝에 동국대로 무사히 피신했고 형사들의 추격
도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한 형사는 학생들을 연행하려던 것이 아니
라고 말했다. 단지 학생들이 선전물을 배포하는가를 감
시하기 위해 뒤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휘자
로 보이던 한 형사가 플랫폼에서 연행시기와 방법을 비
슷한 '작전'을 설명하는 등, 이날 경찰은 상황을 보아 연
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아무개(연세대 4
년) 씨는 "만약 우리가 몇 사람씩 나뉘어 선전전에 들
어갔다면 모두를 연행했을 것"이라며 "공안탄압 과정에
서 드러나는 '무작정 연행하고 보자는 식'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선봉대
원인 강 아무개(항공대 2년) 씨는 "경찰의 행위는 학생
들에게 공포심을 주면서 이후 활동의 위축을 노린 것"
이라며 "8월을 앞두고 통일선봉대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 씨를 초청
한 국제엔네스티(AI) 영국
본부는 4일 "흥 씨의 영국
방문과 작품에 대한 언론
등의 관심이 많다"며 안우
만 법무장관과 청와대, 영
국주재 한국대사 앞으로 항
의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여
권발급을 요구했다.

흥 씨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던 AI 영국본
부 방문과 오는 10일 AI
스코틀랜드 지부 등이 기획
한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자신의 작품 30여 점을 출
품할 예정이었으며, 12일에는
최근 개관한 글래스고우
시의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축하 전시회에 특별 초청자
로 초대되었다.

흥 씨는 지난 7월 4일 광
주시청에 여권신청을 했으
나 일반시민의 경우 2-3일
정도면 나오는 여권이 같은
달 7일 여권계로 연락한 결
과 신원조회를 빌미로 1주
일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12일 경 다시 여권
계로 연락해 보았지만 담당
직원은 며칠씩이나 계속
'다음날 전화 연락을 하라'
고 반복했다. 결국 흥 씨는
31일 광주시 경찰청 신원조
회반에 연락을 한 결과 경
찰측으로부터 '앞으로 2-3
주가 더 걸리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에 흥 씨는 "국보법 관
련자들은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와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

나 누리는 권리가 침해당하
고 있으며, 공안 기간원들은
이를 빌미로 거래를 요구하
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

흥 씨는 "국보법으로 구속
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여
권발급이 지연되는 것은 인
권 침해"라며 이후 손해배
상청구소송 등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은 이번만 있었
던 것은 아닌데 93년 '양심
수를 위한 함부르크 재판'
초청으로 독일 방문때에도
여권을 3개월만에 겨우 발
급받을 수 있었다. 당시 흥
씨는 자신을 고문한 2명의
안기부 요원 모습을 그림으
로 그려 고소를 한 상태였
는데, 안기부는 고소를 취
하하면 여권을 내주겠다고
하는 등 요구조건을 내세웠
다고 전한다.

원폭피해 행사 참여 불교인권위 진관 승려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승
려는 지난 4일 일본 히로시
마에서 열린 '원폭 피해 51
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진관 승려는 '히로시
마 원폭 피해 51주년 영령
들을 위하여'라는 기도문에
서 "히로시마 사람들의 회
생으로 인해 원폭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다"며 "이
제 남은 것은 아시아의 핵
무기가 완전히 철수되는 것
과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
상"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자 상황판 (96년 7월부터)	
구속자(29-8월4일)	2명
합계	39명

검찰, 학살자에 이유없는 관용 전국연합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전두환, 노태우 씨 등에
대한 구형공판이 열린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은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
서 집회를 갖고 5·18 학살
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심판
을 촉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
된 이날 집회엔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지만, 경찰
이 집회장소를 사방에서 에
워싸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로막힌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
위원장은 "5·18 학살자에
대한 단죄는 한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닌 역사적 진
실의 회복과정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학살
자들의 태도는 이들에게 필
요한 것이 철저히 사법적
단죄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
시켜 주었다"며 "법정최고
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결의문을
통해 △반성 없는 학살자들
에 대한 단죄 △학살사적
계변으로 역사를 호도한 피
고측 변호사의 대국민 사과
△3당야합과 대선자금 등
5,6공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사형, 노태
우 씨에게 무기징역, 그리
고 정호용 피고인 등에겐
15년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 이에 제
민주단체들은 실망감을 표
시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
남연합(의장 이장호)은 "진
두환 피고에 대한 사형구형
은 당연한 일이나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은 내
란과 반란죄의 죄과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적
을 상기할 때 오늘의 구형

은 '이유없는 관용을 베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
다"고 밝혔다.

또한 민가협(상임의장 정
양엽)은 성명을 통해 "진·
노 등에 대한 단죄뿐 아니
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악법을 청산하고 피
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배
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조(고 강경대 열사 부
친) 씨는 "우리 사회의 법
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
겐 약한 것 같다"며 "정치
적 부담에 의해 구형이 내
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외노 인권탄압 폭로 기독교, UN인권소위 제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기독교대책본부」(본부장
최의팔, 기독교대책본부)
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소위의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위원들에게 '외
노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
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기독교대책본부는 한국정
부가 작년 10월 제출한 인
종차별철폐 보고서에는 외
국인노동자들이 매우 정당
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외
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불평등한 대우를 은
폐하려는 정부에 맞서 민간
단체가 보다 사실적인 외국
인노동자에 대한 상황을 보
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78년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과 △한국노동자에
비해 50%의 월급만을 받고
△노조 결성이나 가입권이
없으며 △주거도 공장내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지
적했다.

주간/인/권/호/름

(96년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29일(월)>

민가협 발표, 4·11 총선직후부터 7월11일까지 시국사
건 구속자 모두 2백46명으로 올해초보다 2.35배 증가/
교육부, 장애학생 위해 2천년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기
로/세계식량계획기구,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사업 확대해
내년 봄까지 2천5백90만달러어치 식량 추가 지원키로
<30일(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지난 해 북한을 방문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민주(22)씨와 이해정(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3년 선고/
정부와 신한국당이 관련단체들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기로/
한국교회인권센터 5·6공 인권피해 소송 담당자/인도네시아, 지난주부터 계속된 소요진압 위해 현장발
포 명령을 군부대에 하달했다고 <안타라통신> 보도
<31일(수)>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조성우씨 긴급구속/세계화추
진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도입키로/화가 흥
성담씨 한 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도쿄신문> 보도, 95
년 생활·경제문제로 자살한 50대 남자가장은 9백88명
<1일(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조합장이 정의발
생 신고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를 떠나도록
한 것은 부당 정의행위에 해당돼 해고 사유된다고 판결
<3일(토)>

한총련 8월 통일대축전 행사에 북한 대학생 2백여명 초
청키로 하고 북한측 참가자 명단을 띄시밀리로 받은 사
실이 밝혀져 경찰수사에 나서/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영하(43)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인
도네시아 경찰,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에게 오는 5일
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 보내/국제노동기구, 여성들 남
성에 비해 근로시간 길지만 수입은 75%라고 밝혀
<4일(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골프장 캐디는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장보
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남산 옛 안기부 청사
제1별관 폭파공법으로 허물어/정부, 장애인복지대책위원
회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아프리카 짐바브웨, 로
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국제 채택람회 참여
를 금지한데서부터 시작해 동성애 단체와 공방
<해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관계부처 장관 11명과 장애인
관련단체장과 장애인복지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되
법정부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입안·추진할 예정이라
고 한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어져 있는 총괄적인 조정기구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
라 설치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타당한 이야기다. 장애인
관련 업무가 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
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
실이다. 하지만 올해 3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장애인
먼저실천증상협의회」나 과거에 존재했던 기구들의 문제
점으로 지적되어온 일반 장애인의 의사반영과 참여방안
이 이번이야말로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⑦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등 8·15행사 다양

오는 15일 5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인권·사회단체들은 양심수 사면·복권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갖는다.

이들 단체들은 비록 같은 날, 하나의 행사를 치루는 것은 아니지만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외치며 구속되었던 양심수들의 석방과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남용되었던 국보법 철폐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마저도 군사정권과 같은 논리로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함하고 있다.

국보법 철폐주간 설정
지난 5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주간'을 설정해 국보법 폐지 공청회와 선전전을 하고 있는 「민중운동 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공동대표 백기완 등, 민운단)는 이번 행사가 '김영삼 정권에 대한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민운단 김혜련(국보법 철폐 소위 위원장) 씨는 "4·11 총선 이후 국보법 구속자가 더욱 증가하고,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이적성을 문제삼는 것은 민중운동 진영의 통일운동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의도"라며 "김영삼 정권이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냉전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더이상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민운단은 39년 동안 독방에서 지내고 있는 우용각(68) 씨 등 장기수와 조직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사건과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며, 9일에는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서 국보법 철폐 거리문화 공연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8·15 사면 기대

또한 지난해에도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열, 민가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등 인권·사회단체는 올해에도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캠페인을 명동성당에서 벌인다.

남규선(민가협) 총무는 "현 정권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양심수와 장기수를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국보법 구속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이번 8·15 사면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의 하나로 8일 오전에는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

로 실체크기의 모형 감옥을 만들어 '하루 감옥 체험'이 마련된다. 그밖에도 시민가요제, 양심수 석방을 염원하는 가수들과 함께하는 자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노해 씨등 13명 사면청원 한편, 천주교인권위(대표 김승훈)는 8·15를 맞아 양심수의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통령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달 19일 박노해(40) 씨와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된 간첩인 이현치(43), 손유형(66) 씨 등 1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 법무부로부터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무차장 오창익 씨는 "법무부가 청원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석가탄신일 특사에는 단 1명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았다.

범민족대회 보장 촉구 불교인권위

5일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 정부측에 제7차 범민족대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해방 51주년을 맞아 양심수 석방과 전향장기수의 복송 등을 요구했다.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과 일본정부는 "광복 51주년인 오는 15일을 기해 국민기금 2백만 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일에는 국민기금 소속 대외팀 3명 등이 국민기금 설명회를 빌미로 방한해 '일본정부가 3백만 엔을 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지난 달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본 동경을 시작으로 국민기금 반대 이유 등에 대한 순회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미향(정대협 총무) 씨는 "동경집회의 경우 6백여 명의 청중들이 모여 강연을 들었고, 보통 다른 도시에서도 1백50여 명의 청중들이 모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국민기금 반대 이유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 씨는 "국민기금의 이사장 하라다 씨는 폐전직후 내무성에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으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자료를 모두 불에 태우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가해자 중의 한사람이 만든 국민기금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밝혔다.

국보법철폐 공동준비 전국연합, 민주노총등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

회는 1차 간담회 결과에 따라 현재 분산되어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하나의 조직적인 틀로 모으고, 보다 대중적이며 지속적인 철폐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위 결성 계획과 공동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18일 전국연합, 범민련, 민변, 민주노총, 진보정치연합 등 사회·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 활동과 입장을 확인하고 공개토론회, 책자발간, 서명운동, 전문가팀 구성 등의 각종 사업 제안이 논의됐다.

반민주 악법개폐 촉구 각계인사 109인 선언

최근 계속되는 공안탄압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각계 인사 109명의 선언이 6일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영삼 대통령 출범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수년전 활동을 이유로 대거 구속하는 것은 법운영의 과도한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11 총선 직후 7월 11일까지 석달 동안 2백46명이 구속되었으며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백1명이었는데, 이는 공안탄압이 기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안정국 흐름 속에서 빈발하고 있는 구속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반민주적인 악법의 조속한 개폐를 촉구했다.

109인 선언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선언에는 최영도(민변 회장), 이도명(전 조선태 총장), 박형규(인권센터 이사장) 씨 등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선동렬 투수 부진은 한국 '욕의 문화' 탓? 언론폭력에 분노한 어느 일본 주부 이야기

후나바시 히로코(船橋裕子). 그녀는 병으로 휴직중인 일본 어느 중학교 선생이다. 물론 그녀가 선동렬의 부진을 안타까와 할 이유는 눈꼽만치도 없다. 그러나 96년 5월 3일,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일간 경다이> 스포츠면을 펼친 그녀의 눈길은 한 기사 위에서 일어났다. '해프닝과 이번의 진상'이라는 커다란 기획시리즈 첫번째 기사. 그 제목은 "새상이 '구세주'라고 법석떠는 한국의 두 투수가 부상으로 쉬면서도 태평인 까닭은?" 이었고 친절하게도 다음과 같은 긴 부제를 달아놓았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일본과 달리 자기 책임은 덮어두고 상대방만 욕하는 한국의 습관도 관계 있을 듯".

후나바시 씨는 숨을 죽이고 이 선동렬 투수와 조성민 투수를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읽어내었다. 선동렬·조성민의 부상은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닌 데도 두 사람은 거액의 돈만 먹고 만판으로 쉬고 있다는 설명 뒤에 이런 귀절이 이어졌다. "... 한국에는 남을 비난함으로써 우월감에 젖는 '욕'의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 책임은 덮어두고 언제나 남을 탓하는 경향이 강하다. ... (중략)... (선동렬도 조성민도) 팔꿈치와 허리를 타할 뿐,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후나바시 씨는 항의편지를 썼다. 그러나 신문사 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할 리가 만무했다. 이렇게 한 예소한 주부와 거대한 신문사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한국인에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은 본인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신문사 운동부 전체의 일치된 의견이다." (운동부 하야시 기자-전화)

▷"예를 들어 '유태인은 노랭이다', '여자는 걸핏하면 히스텔리를 부린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차별 그 자체이다. 특정 민족이나 인종집단들의 '성격'을 선동렬 투수 개인의 성격과 결부해 단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인종적 편견에 다름이 아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한국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슬픔을 준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5월 9일자 항의서한)

▶"한국에는 '내탓이오'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남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설도 있다." (5월 10일자 운동부장의 회신)

후나바시 씨는 주변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내었고, 베를린의 「일본-독일 평화포럼」이라는 단체가 이 정보를 입수한 것은 그 직후였다. 이 단체는 대표이름으로 문제의 기사가 "민족간의 중보를 도발하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며 "올해 일본에서 발효한 '차별철폐국제조약'의 정신 및 여러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사죄기사가 게재되지 않을 경우 조직적 행동으로 돌입하겠다. ... '일본인은 잘못을 시인한다' 라고 쓴 이상은 일찌감치 채념하는 것이 영리한 선택일 것이다." (동 포럼 카지무라 베를린 대표)

파문은 퍼져, 5월 30일자 항의서한의 명의로 개인이 아닌 「일간 경다이」의 민족차별기사에 항의하는 모임, 명의로 되어 있다. 대서는 기율이 7월 1일, '경다이'는 두 달 만에 무릎을 꿇었다. 비록 1단기사였지만 그 사죄광고들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신문사가 한 평범한 주부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 보였을 것이다.

<인터넷 인권운동사랑방>에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해외민간단체들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북한수해돕기 인터넷 캠페인 Help North Korean Flood Victims : News /일본군 위안부 문제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The Comprehensive Human Rights Initiative Home Page/Amnesty International On-line/Human Rights Resources/DIANA -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tabase/Human Rights Web/Australian Human Rights Page/Solidaritygroup Political Prisoners/Human Rights Watch/APC (The Association for Progreessive Communications)/Greenpeace/EFF (Electirc Frontier Foundation)

<이달의 주제-과거형산>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①-2
군사법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지난 5일부터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주간'을 맞아 6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성 및 김영삼 정권의 국보법 적용에 관한 발제와 '국보법 철폐투쟁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진행됐다. 김순태 방송대 교수는 국보법 제2조(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 제3조(반국가단체 결성) 제7조(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검토를 통해 “국보법은 객관적·외부적 행위보다는 내심·사상을 기본적인 처벌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전 민중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을 자의적으로 선별·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국보법 인식과 관련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김영삼 정부와 인권단체간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남북 분단 상황을 핑계삼아 국보

법 개정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태도”라고 밝혔다. 중산층과 함께할 방안은? 이날 공청회의 주된 논의는 ‘어떻게 국보법 폐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인가?’로 집중되면서, 대중적 여론화를 위한 방법론과 당사자 해결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장호순(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씨는 “국보법은 통분단 상황을 핑계삼아 국보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보법에 의한 피해 대상에 중산층도 예외가 아니라 는 점을 여론화함으로써 무관심한 다수의 중산층이 동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원) 씨도 “국보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전제하며 “구조성 운동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활동방식의 개발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광수(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실장) 씨는 “국보법 개정 운동과 달리 국보법 폐지운동은 그 수준에 맞는 투쟁의 형식이 필요하다”며 “중산층을 설득하는 것이나 이 벤트성 사업보다는 피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보법 철폐운동의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인도네시아의 범죄 막기위한 행동이었다”

인권탄압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전투기를 망치로 부순 4명의 영국 여성들에게 지난 달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자신들을 평화운동가라고 밝힌 윌슨(33), 니드한(29), 크론리드(28), 젤더(44) 씨 등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군사정권에 수출할 목적으로 영국 내의 24개 군수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전투기 생산 공장의 하나인 워튼 공장에 잠입해 1시간 30분 동안 망치로 전투기를 부수었다. 이들은 대부분 무기발사장치 등을 집중공격해 약 1백50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혔으며, 곧 리버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4명의 여성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모두 인정했고, 전투기를 부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론했다. 이들은 변론을 통해 “영국에서 만들어진 전투기를 사용해 인도네시아 군사정권은 독립을 요구하는 동티모르 양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며 “더 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도 이들의 증언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으며, 더 포괄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동티모르에 관한 TV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무죄로 석방되어 가진 3일 석방 환영파티에서 평화운동가의 성원인 린스튼(61) 씨는 “이와같은 일은 3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며 “이 용감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당당히 의견을 밝혔고, 판사도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며 밝게 웃었다. [영국=류은숙]

▶ 2면에 계속

방사능 방출 한달만에 발표 영광핵 비대위, 사고경위 등 공개촉구

지난 7월 중순경 발생했던 영광핵발전소 2호기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 한전측이 한 달 가까이 사고를 은폐하다 8월 6일에야 뒤늦게 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저지 비상대책회의」(공동대표 김양옥 등, 비상대책회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련자료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이번 사고지점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2차 계통 시설”이라며 “이곳은 원자로 내부와 달리 고압 증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여기서 방사능이 기준치보다 1백배가 넘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양주, 정평위)는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2호기 사고의 전말과 관련자료 공개 △핵발전소를 감시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 설립등을 요구했다. 정평위의 홍세현(환경담당) 씨는 “한전측이 방사능

유출을 은폐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유출되었는지는 알수 없다”며 “56호기 추가 건설에 앞서 기존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대책회의의 대표자들은 13일 영광군과 핵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원폭피해자 대책 촉구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성봉희)는 6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14회 반전반핵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박수복(67·『해의 아이들』 저자) 씨가 원폭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했으며, 원폭피해 2세들에 대한 장학금도 전달됐다. 이날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일본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도 원호법을 적용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죄를 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한국정부에도 피폭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편의시설 확충’ 기본요건 국민회의, 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

「새정치국민회의 장애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재, 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노인·아동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약자(移動弱者)들이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엄청난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만큼 편의시설 확충문제는 이들의 평등권 및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이동·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주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전체 기초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여론 형성에 그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비로 인해 엄청난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동기구 설치와 참여의 필요성, 장기적·지속적 사업으로서 이를 담당할 상시기구의 마련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간의 공동기구가 모두 실패로 끝났던 경험에 비추어 “한시적이라도 제 단체가 국보법 투쟁에 전력을 기울이는 경험을 갖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뒤에 상설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개정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확대와 공동대응 문제에 대

○ 행사와 동정 ○

- 성폭력 근절 대책마련 촉구위한 캠페인
 - 일시:8월9일(금) 오전 10시
 - 장소: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동화은행
 - 주최:황수연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966-6364)
- 부활, 제3회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
 - 일시:8월9일(금) 오후6시
 - 장소:명동성당
 - 주최: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763-2606) 등
- 양심수 가족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는 밤
 - 일시:8월10일(토) 오후 6-9시
 - 장소:명동성당
 - 주최: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763-2606) 등
- 국보법 철폐 거리문화 공연
 - 일시:8월9일(금) 오후 5-7시
 - 장소: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
 - 주최: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856-5817)
- 민연협, 96 여름수련회
 - 일시:8월10일(토)-11일(일)
 - 장소:충북 청천 화양구곡
 - 주최:민주연론운동협의회(326-1252)
- 96 통일 희망 나누기 서울 시민 큰잔치
 - 일시:8월11(일) 오후 4시
 - 장소:용산가족공원
 - 주최: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3672-0251)
- 정신대 사진전- ‘깨어진 침묵’
 - 이 사진전은 일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토 다카시의 초대전으로 17일(토)까지 삼성 포토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을 비롯한 북한,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지역에서 위안부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들의 피해현장과 현재의 모습이 전시된다. 문의(528-6615)
- 세계인권포스터전, 전국 순회 전시
 - 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포스터전이 서울 전시회를 마치고 11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23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리베라백화점 갤러리에서 순회 전시를 한다. 문의(053-426-2533)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①-3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홍성담 출국불허 영국언론 대서특필 한국대사관에 영국민들의 항의 잇따라

홍성담(화가) 씨의 해외여행 불허로 한국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6일자 참조>. 영국에서는 지난 5일 BBC라디오 뉴스보도를 시작으로 일간지 <헤럴드>(Herald)·<스콧즈맨>(Scotsman) 지 등을 통해 홍성담 씨의 이야기가 상세히 보도됐으며, 곧 발간될 예정인 English Festival Magazine도 홍 씨에 대한 취재를 마친 상황이다. 또한 런던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최동진)에는 영국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잇따르는 등 인권 후진국가로서 오명을 남기고 있다.

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영국민들의 항의도 보도하고 있다. 지난 6일자 헤럴드지의 기사는 「한국의 억류된 예술인을 위해 항의하다」라는 표제를 달았다. 이 기사는 글래스고우(스코틀랜드) 소재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한국정부에 항의한 내용을 전하고 한국대사관에서 밝힌 입장도 소개했다. 한 국대사관의 대변인은 "홍 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한다.

을 살았다는 것 △홍 씨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남한 보안당국이 이를 불허했다는 것 △홍 씨 석방운동에서 비롯된 글래스고우시와 홍 씨간의 인연이 깊고 △글래스고우시와 홍 씨의 작품을 구입해 갤러리에 소장하고 있으며 △영국 시민들이 한국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기사제보 715-9185

한국대사관에 항의 빗발
대사관측 "전혀 몰라"
영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국내 언론의 침묵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양이다. 홍 씨가 89년에 국보법으로 수감된 이후부터 최근 영국에 초청받기까지의 상황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출국을 불

국내 언론 침묵
영국 언론 일제히 보도
같은날 스콧즈맨지는 홍 씨의 사진과 함께 광주학살의 잔혹함을 표현한 홍 씨의 판화작품을 게재했으며, 3단에 걸쳐 홍 씨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주요 보도 내용은 △홍성담 씨가 북한에 작품을 보냈다는 이유로 3년의 징역

학교내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캠페인
일시: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동화은행 앞)
황수연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966-6364)

생활안전지원특별법 강화 전국 여대협 국회청원

8일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2기 전국 여대협)는 정신대 문제의 완전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기 전국 여대협은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정신대문제에 관해 진쟁범죄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4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생활안전지원특별법'을 강화하여 고령의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돈으로 진쟁범죄를 무마하려는 일본정부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간수교수 변호인, 접견권보장 요구

간첩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무하마드 간수 교수의 변호인인 김한수 변호사 등이 지난달 29일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변호사 등은 간수 교수에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담당수사관(성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94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9조가 불법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변호인접견을 보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차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젊은 간수 4명은 푸른 수의를 입고 몸부림치는 수감자 7명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1명도 안되는 감방에 차례차례 처넣고 있다. 책상으로 엉성하게 만든 바리케이트를 너머로 보라색 머릿수건을 두른 20여 명의 민가협 어머니들이 '왜 내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하느냐'며 큰 소리를 쳤다. 일껏 보던 한 교도소 앞에서 자주 본 전경감지만 이들 모두는 각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수 가족들 눈시울 붉혀
이 행사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정양업, 민가협) 등 14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중에 하나인 '하루 감옥 체험'으로 황상익(서울대 의대) 교수와 안도현(시인) 씨 등 7명의 인사들이 참여해 5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경험했다. 삼척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일가족이 모두 간첩혐의를 받고 5년간 감옥살이를 하다 석방된 김순자(54) 씨는 "동생과 당숙이 무기형을 받아 1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며 "연극이라 해도 그때 싸우던 감정이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학생들이 진짜 간수인줄 알고 먹살을 잡았다니까"라며 웃었다. 유정식(일본 유학생 간첩사건, 안동교도소 수감) 씨의 누나 유임순(64) 씨는 "간수들이 포승줄로 손과 발을 묶어서 감방에 내던지는 것을 보니까, 내 동생도 그렇게 당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양심수 석방 행사에 참가하면서도 이들은 올해 양심수 특별사면은 힘들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있는 희망은 쉽게 버리지 못하겠다"며 화려한 명동거리를 지나 젊은이들에게 좀더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더욱 애처로웠다.

이장호 감독·천정배 변호사 등 참가
이러한 행사에 처음 참가했다는 이장호(52) 감독은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격동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그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 죄값을 위해 행사 참가요청에 선뜻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화인으로서 양심수 석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 봤다"며 다음 영화작품을 기대해 보라고 말했다. 또한 천정배 국회의원은 "감관이지만 교도관들에게 모욕적인 대우와 동물 우리와 닮은 감옥에 있으면서, 형벌에 대해 생각했다"며 "이러한 교도소 환경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교도소는 재범을 양산하는 곳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보통 15년이면 출소한다면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30년을 이러한 동물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인권간행물 ○

- 현장에서 미래(7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주요내용:경제조정-막고 있는 '문민정부'의 경제정책/특집1- 연구소 창립1주년 '현시기 노동운동과 연구소의 과제'/특집2-노동운동과 노동법, 그 이론과 역사/기획-'자본이나 노동이나(11)-날로 더해가는 자본의 언론지배' 등 257쪽
- 사월혁명회보-사월혁명연구소(888-3682)
· 주요내용:기념 학술토론-4월혁명 36주년 토론. 4월혁명과 역사 바로세우기/투고 4월혁명 정신과 21세기(장명국)·한국근대 자본주의와 4월혁명(최단옥)·금권인가 민권인가(정병호) 등 36쪽
- 지구촌 인권통신(주간 해외진출기업감시 소식지)-참여연대(796-8364)
· 주요내용:특집환경-인도네시아 새우 양식업장·필리핀 석소공장/국회회의 소식-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회의/연계기획 단체탐방-프랑스 AGIR ICI(여기서 행동하라)/해외리포트-중국의 리복과 나이키 등 31쪽
- 노동사회연구(제8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 주요내용: 노동동향-남아공 노동운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OECD 가입과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96년 상반기 임단투의 특징·96 공노대 공동임투, 성과와 과제/기획연역-전환기 남아공에 대한 세계사적 이해/연구노트-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운동·노동자간 연대정책에 관한 연구 등 158쪽
- 함께가는 여성(96.8)-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 특집-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방송비평-'자반고등어'에 나타난 왜곡된 가족상/그때 그 시절 '민우회이야기' 등 20쪽
- 민족예술(96.8)-민예총(778-4225)
· 주요내용: 특별기고-1996년 8월, 친일문학론을 다시 읽는다/지상강의: 혼란 속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문화정치/근현대사의 현장 3-물살따라 흐르는 반의세의 기운 등 92쪽 값3천원
- 고난함께(96. 7·8호)-고난모임(393-4662)
· 주요내용: 만나고 싶은 사람-최종진 장로/시론-분단 반세기를 넘기며 이름만 남은 '통일'제6회 효도나들이(김석형, 장기수)/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뒤 출소한 임인출씨/장기수 가족을 찾아서-남북이민 조작간첩 사건 정영씨 가족 등 50쪽, 값1천2백원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민중운동단합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 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국가보안법 인식과 적용분석(박래균)/미국의 국가보안 관련 입법의 실제(장호순) 등 51쪽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25일까지 납부!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⑦-4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장기수 김인서씨 원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93년부터 김영태(66), 함세환(65) 씨와 함께 북한송환을 요구해온 비전향장기수 김인서(68·89년 10월 출소) 씨가 지난 7월 29일 저녁 9시경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김인서 씨는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편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거동조차 할 수 없어 누워 지내는데, 그나마 얼굴에는 중풍현상이 미세해 대화가 가능했다. 또한 그는 이전부터 만성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앓아 오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 전선지원 사업입무를 맡아 전남 광주에

내려와 빨치산활동을 하던 중 51년 생포된 김인서 씨는 광주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에서 20년형을 선고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만기출소 후에도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 7개월간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

남한에서의 막노동 인생 89년 10월에 출소하고 난 뒤에도 일가친척이 없다는 피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장기수들이 그렇듯이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자라도 공사판 막노동이었다. 처음에

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했고, 그 뒤 2년간 장성에 서 골재채취 작업을 했다. 그리고 나서 93년 6월 1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조선탄 구내서점 점원으로 일해 왔다. 뇌출혈로 쓰러지던 그날도 구내서점에서 일을 하던 것이다.

그는 북한송환을 위해 노력해온 김영태 씨와 함께 광주 탕재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일에 상심했을 텐데도 김영태 씨는 "고된 점이 많지만 침을 놓고 약을 써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으로 내다보았다.

북한의 두 딸 보고다

김영태 씨는 이보다도 "이제 우리는 70살을 넘어서고 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당당히 걸어가야 할 사람인데, 정부가 비인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송환성사를 위해 힘써주길 부탁했다.

김 씨를 포함한 비전향장기수 3명은 자신들은 전쟁포로로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김인서 씨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다. 역매역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93년부터 통일원, 적십자사 등으로 복송을 요청해온 것은 물론, 지난 6

월 24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호세 아알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인권하루소식 6월25일자 참조>.

복에는 이제는 할머니가 된 첫째 딸 김하심(51), 둘째 딸 김정심(47) 씨와 여동생 2명 그리고 조카들이 김인서 씨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의 부인은 81년 4월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미행·도청장치 발견 범민련 사무국장 자택

이전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 씨의 집에 도청장치로 보이는 시설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대선충남연합(의장 이장호, 대전충남연합)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해 공작·정보정치에 대한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오 씨에 의하면 "몇달 전부터 수상한 사람이 집 주변을徘徊하고 전화 감도 좋지 않았다"며 "전화선을 확인한 결과 전화단자함 안에 도청장치로 보이는 시설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연합은 "문민정부 4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도청과 미행을 자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과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끈질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독신청: 715-9185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연일 시민과 언론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이 8월을 맞아 정부당국의 어떠한 대책마련이나 해결책 제시없이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성폭력 근절을 요구했던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의 모임인 「황수연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 등, 공대위)와 「안산시 본오동 소재 우성유치원 원장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약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일련의 성폭력 사건은 엄밀히 말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성폭력 대책 마련보다, 언론과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줄어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끈기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후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집회를 마친뒤 최영애 소장과 진관(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스님 등 공대위 대표

들은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 건의문과 성폭력예방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접수했다.
공대위측은 건의문에서 △전 신앙증 교장 황수연(현 교육연구관) 씨의 조속한 구속기소와 우성유치원 원장 정태영 씨의 법정최고형 구형 △교육 감독기관 관련자들의 처벌과 업무태도 시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정부의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공대위에서는 정부에 조속한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범국민 집회를 31일 열 예정이다.

양심수 석방 행사 대전충남겨레모임

38년째 옥살이를 하는 우용각 씨등 12명의 최장기수 가 복역중인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홍성·공주·천안 등 4개의 교도소에 47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는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양심수를 위한 동일의 밤' 행사가 열린다.

통일맞이 대전·충남겨레모임(공동대표 김선건 등)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0일 오후 7시 대전 YWCA 강당에서 열리며, 장기수의 생애를 형상화한 공동창작극 <이제 철창을 던지고>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유가협 창립 10돌 기념식 및 단결을 위한 수련의 밤

일시: 8월 11-12일 (일, 월)
장소: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0347-64-0064)
주최: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763-4700)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후원회

시위용품 신고규정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지난 8일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하나로 명동성당과 중앙극장 앞을 왕복하는 시위 도중 중부경찰서장이 1백여 명의 전경을 동원해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옥외 집회신고를 했으나 시위참여자들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시위진행을 했다는 이유이다.
이에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

도, 민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정양업, 민가협)은 중부경찰서장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가 되었던 수의는 '수의'형태의 옷에 불과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시위를 막은 중부경찰서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항의했다.

"양심수가 사람이름인가요?" 명동에서 확인한 인권의 사각지대

9일 오후 명동성당.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인 이 곳에서, 또 한편에 자리하는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침해의 현장을 확인했다.

명동성당 옆에 자리잡고 있는 계성여고. 이곳을 거처간 수 많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이 학교 학생들은 늘상 농성과 시위의 현장을 눈 앞에서 경험해 왔다. 이날도 학생들은 양심수 석방을 외치는 목소리 한 가운데 자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기자에게 단연한 물음이 생겼다. '학생들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학생들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얻을 수 없었다.

기자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려던 순간, 누군가 이들을 호령했다. 다급하게 돌아서는 학생들과 함께 가보니 윤리선생님이란 분이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내몰고 있었다. 기자의 설명을 듣고나서도 그 선생님은 한 마디로 요청을 잘라버렸다.

"저건 다 미친 짓이야. 예들은 저런데 관심없어!" 아이들의 관심사항을 모조리 알고 있다는 윤리선생님과 자신의 관심마저도 선생님의 호령 한 마디에 봉쇄해 버려야 학생들이 사는 곳, 인권의 사각지대가 거대한 몸집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물어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돌아선 기자는 또다른 여고생들을 만났다. 영광여고생이라 소개한 이들은 시민가요계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명동성당에선 캠페인 행사의 하나로 제3회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가 열릴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심수를 아느냐'는 물음에 대한 이들의 답변은 의외였다. 이들은 '양심수'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다고 하며, "양심수가 사람이름인가요?"라고 되물었다. 한편으로 당연한 대답이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에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의 소개로 명동을 찾았다는 학생들의 설명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민노총 투쟁본부 체계로 총력투쟁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없는 노동법개정 거부

하반기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 관련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산하 18개 연맹과 11개 지역본부, 2개 그룹조직의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중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가 신노사관계 구상이나 노사관계개혁위(노개위)

의 구성을 통해 노동법 개정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진행된 노개위 개정이 노개위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판단하에 민주노총의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사·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개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조합과 다른 형태의 교사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근로자파견법·변형근로제 등의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노조 정치활동금지·제3자개입금지·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 등 노동약법 철폐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권영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합법화에 연연해 노동법 개악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자식의 뜻으로 다시 나선 가족들' 유가협 창립 10주년 행사

박정희 정권 때부터 56공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몸을 던져 독재에 항거했던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광주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을 빼더라도 분신·투신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이들,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폭력에 살해된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는 상당수의 죽음이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열사라고 불리는 이들의 유가족들이 광주, 부산, 거제도 등에서 올라와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군 소재 정신대 할머니들의 거처)에 조용히 모여들었다. 전국민주주의민중동일유가족협의회 창립 10돌 행사와 아울러 수련회를 갖기 위해서다.

"유가족은 이 땅 이 시대가 만들어 낸 역사의 곁을 속에서 있는 가족들입니다. 피불이나 인척도 떠나버린 빈 공간을 자식들의 정신과 뜻으로 다시 살고자 나선 유가족들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민중과 역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나섰습니다."

기념사를 하는 박정기(67, 고 박종철 열사 부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유가족들은 숙연했다.

지난 86년 8월12일 10인의 유가족들이 모여 첫발을 내디뎠다. 자식이나 식구를 잃은 이들은 집회의 현장마다 함께 했다. 올해로 7년째 치르는 합동추모제, 88년에는 1백35일간의 농성을 통해 의문사 문제를 세상에 알린 이들 유가족들은 죽어간 자식들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이날 기념식장에는 민가협과 출신한 장기수, 추하공연하기 위해 온 연회파 등만이 유가족들의 외로운 기념식을 지켜 볼 뿐이었다.

통과될 때까지 투본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투본의 활동은 세 시기로 나뉘어 전개될 예정이다. 첫 단계는 오는 9월 노개위의 개정안이 제출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며, 노개위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만일 노개위의 개정안이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안으로 나타날 경우, 민주노총은 '긴급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노개위에 대한 태도를 최종 결정하는 한편,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의 시기를 제3단계로 설정하고 노동자대회의 결의를 거쳐 총파업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투쟁을 위한 연대의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또한 9월초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노동조합 관련 자문위원회와 국제자유노련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권영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합법화에 연연해 노동법 개악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 주요 공판 안내 ◎

- 8월13일(화)
김재호의 5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신진
- 8월16일(금)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강길용, 일반교통방해 등, 오전10시, 단독10부, 525호 신진
-이상 서울형사지법

주간/인/권/호/름 (96년8월5일부터 8월11일까지)

<5일>
12·12와 5·18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사형, 노 씨에게 무기 구형/아사히신문, 이번 집중호우로 북한주민 2백여 명이 숨졌다고 세계식량계획 하우저 평양사무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6일>
한전, 한달만에 영광핵발전소 2호기 고장으로 방사능 방출된 것 발표/최근 계속되는 공안탄압 증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각계 인사 109명의 선언 발표/감사원 감사 결과, 경찰 인력배치가 일선 부서엔 부족하고 상급부서엔 과잉상태로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8일>
창원경찰서, 법원의 파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한채 파업 주도한 대립자동차 노조 위원장 이경수 씨등 3명 검거에 나서/민가협등 시민·인권단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천9백96인 선언' 발표/환경운동단체, 영광원전 2호기 방사능 배출 사고에 대한 항의 집회/법민련 대전충남지부 이전 사무구장 집의 전화단차함에서 도청장 치료 보이는 소형 부착물 발견돼

<9일>
성폭력대책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폭력에항 종합대책마련 촉구집회 가져/이장호 감독 등 14명, 양심수 석방 캠페인 행사 가운데 8일 침묵행진을 사전 통고없이 막은 중부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국회 내무위 김중총 의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적발된 경찰관이 7천9백 여명, 이중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44명에 이른다/발표/안기부 등 공안관계부처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민주당 전 당수, 반정부 시위로 관련 자카르타 경찰청에 출두해 6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

<10일>
내외통신 보도, 한총련 대표 도종화(연세대), 류세홍(조선대) 씨 항공편으로 평양도착

<11일>
한전, 울진원전 1호기의 복수기 고장으로 오전 11시부터 가동 중단한다고 발표/지방경찰청장 회의에서 경찰관이 범죄자의 습격이나 순찰차 탈취행위에 효율적 대처위해 근무중 실탄을 켜 총기를 지니도록하는 방안 마련키로

<해설>
지난 한주간은 8·15 광복절을 맞아 보다 많은 양심수가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가진 주간이었다. 또한 제7차 범민족대회 등 통일관련 행사를 정부가 앞장서 원천봉쇄하고 관련 학생 등을 연행하는 등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뜨거운 광복절을 맞게 되었다.

경찰의 강력대응과 관련해 이전과는 달리 순찰차 탈취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중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것과 그러한 행동을 국가 권력에 도전행위로 규정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앞선다.

정부, 통일축전 폭력대응 전경 투석으로 학생 증상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이 열릴 예정인 연세대학교에서는 전경터를 방불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뒤 이미 사흘전부터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한데 이어, 현장에서 나타나는 전경들의 진압방식이 점차 과도한 폭력성을 띠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오후엔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경들이 무차별 투석전을 벌여,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증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전경들의 투석으로 동아대 영문과 95학번 오승준 씨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 명의 학생들이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세브란스병원 측은 "치료를 받고 돌아간 학생들 외에도 30여 명의 부상자들이 응급실에 있다"고 전했다.

법적·인적 청산요구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성명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장용주 신부)은 12일 성명을 통해 "양심수 석방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열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한 역사청산은 우두머리 몇 사람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5·6공 부패세력 일소 △국가보안법 및 노동약법 등 인권유린적 법·제도의 개폐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사면복권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문민정부 아래서도 3천여 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구시대적 악법에 의해 구속되어 있으며, 4백여 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다"며, "박노해, 황석영, 서경원 씨 등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법적구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성 직업훈련생 취업 사례 모집

여성노동자회 9월10일까지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대표 이철순, 노동자협의회)는 8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동안 '직업훈련기관 수료생 취업 사례'에 대해 공개모집하고 있다.

노동자협의회는 96년 주요 연구과제로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졸업생들의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취업방안에 대해 연구를 할 예정이다.

왕인순(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씨는 "직업훈련기관은 공공기금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훈련수료생들의 효과적인 취업은 여성 직업훈련정책의 확대와 여성인력 고기능화를 위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아 취업 경험이 있거나, 취업 준비중인 여성들은 우편과 팩스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우편: 구로구 구로본동 496-43호 전화: 869-1347
전송: 837-1407
천리안, 하이텔 ID: KWWA.

기사제보
715-9185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①-5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5·18 학살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한창인 이때, 5·6공에 부역하고 대규모 부정비리를 저질렀던 비양심 부패사범들이 광복절 특사를 빌미로 대거 사면·복권된다. 반면, 역대 정권의 희생양인 양심수들은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에서도 전원 배제됨에 따라, 다시한번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13일 정부는 5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상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사면복권자 명단 2면>.

이번 특별사면·복권의 대상자엔 김중휘(울곡비리 관련자,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씨를 비롯해 동화은행, 슬롯머신, 산업은행 비리 관련자 등 전원 5·6공 관련 부정비리사범들이 포함됐다. 이로써 울타리 세번째 이뤄지는 특사에서 또다시 양심수들은

전원 배제됐다.

또다시 양심수 배제
법무부는 "이번 특사가 지난해 광복 50주년 특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사회복귀능력이 있는 모범수 등을 조기에 사회활동에 복귀시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국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공안사범은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4백여 양심수 가운데 김태홍(38·대전교도소), 이현치(43·*) 씨 등 두 사람만이 가석방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인 김태홍, 이현치 씨는 각각 81년에 간첩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88년 20년으로 감형돼 16년째 수감중이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8일자 참조>.

각 단체 비난 성명
이날 정부의 사면대상자

발표에 대해 각 사회단체들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통해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석방을 요청한 바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울곡비리, 동화은행 비리 등 각종 비리 연루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스스로 정권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비리청산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개혁정권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양심수의 석방을 통해 국민화합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우롱한 행위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는 조만간 정부의 폭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4백만 천주교 신도 및 양심세력과 함께 모든 힘을 기울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조치는 대선을 앞두고 '구여권 끌어안기' 차원에서 사면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사면권의 정당성은 악법에 의해 갇힌 양심수를 석방할 때만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리주범을 대거 사면복권시키면 서 단 2명의 양심수를 끼워

넣은 처사는 오욕의 현대사를 바로세우려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종배 등)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5·18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리관련 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사면복권의 혜택을 준 것은 정부가 내세워 온 '역사바로세우기'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사면복권대상자들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사죄" 촉구 여연, 8·15 성명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 여연)은 8·15 51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국민기금 지급계획의 중단" 등을 거듭 촉구했다.

여연은 "해방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과 식민지배 동안의 악랄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은 커녕 망언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만적인 '민간위로금'으로 과거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연은 정부에 대해 △조건없는 4차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인도주의적 자세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수해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조건없이 지원할 것 △방위비 삭감과 복지비 증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고발은 배반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해 효산콘도의 특혜허가를 밝혀낸 후 양심선인을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없이 힘든 일이었다는 감사결과에 잘 못된 점이 전혀 없다"며 "감사원에서 사건의 진모를 밝히기 전에, 내가 인사불만자나 무능력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히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씨는 "감사원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많은 세미나를 했지만 감사원 내부 직원의 고발에 대해 해신 직위해제 등 단호한 조치를 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고발이 배반이 아닌 깨끗한 사회를 위한 미덕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달 3일 감사원 제4국 국장이었던 남정수 씨에 의해, 자신이 언론을 통해 △외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감사를 중단했다는 점과 △무뎠던 이유 없이 효산콘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을 말한 것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

하지만 이날 현씨는 "감사원측으로부터 기자나 변호사를 만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고, 직위해제를 철회해 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감사원이 이 사건을 은폐하

기 위해 고소했다는 점을 드러내 주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는 김선호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감사기록과 기자회견자료 등 증거자료들이 모두 확보되었고, 현 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기회를 얻기 바랄 뿐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다음 재판은 8월 23일 오후 2시이며, 검찰측이 신청한 남정수 씨와 조선정(감사팀 조장) 씨의 증언을 들기로 했다.

8월말 성폭력 추방대회 각 단체 참여 요망

황수연씨 구속수사 및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 등, 공동위)는 오는 8월말 성폭력추방을 위한 서울시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신양중학교에서 황수연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17개 여성·인권·교육 단체가 모여 결성한 공동위는 2개월 동안 소규모 캠페인을 통해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집중하게 제기해 왔다.

공동위는 △학교내 성폭력 문제 등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침을 제시, 그의 실천을 결의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공동위는 시민대회를 성폭력 근절운동에 찬성하는 사회·시민단체들과 함께 행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966-6364(공동위 김맹규 간사)

<8·15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특별사면
· 울곡비리 관련자 - 김종휘(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 동화은행비리 관련자 - 이용만(전 재무부장관) 안영모(전 동화은행장)
· 슬롯머신 관련자 - 정덕진(회전호텔 사장) 정덕일(뉴스타호텔 사장)
· 산업은행 대출비리 관련자 - 이형구(전 노동부장관)
◎특별복권

· 슬롯머신 관련자 - 임삼탁(전 법무청장)
· 한전공사비리 관련자 - 안병화(전 한전 사장)
· 군 인사비리 관련자 - 김종호(전 해군참모총장)
· 상무대 관련자 - 조기현(청우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 축협비리 관련자 - 명의식(전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5일자 하루소식은 광복절 관계로 쉽니다

대우그룹, 해고자 집회 방해 회장집앞 등 한달동안 집회신고

대우정밀 해고노동자들이 7월 한달동안 집회를 가졌던 김우중 회장 집앞과 남산 힐튼호텔 앞에서, 이전에는 개최된 적이 없던 주거환경정화결의대회와 환경보호캠페인이 8월 한달 내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잡혀 있어, 대우그룹측의 조직적인 집회 방해 음모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우정밀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부산에서 올라와, '5월부터 원직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한 김우중 회장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대우센터와 김회장 집, 김회장 부인이 경영하는 힐튼 호텔 등지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집회를 열어 왔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와 방배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 하자, 경찰측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어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그들 집회가 12시간 내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명확히 집회를 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집회 신고를 접수 받고 이후에 불허통지를 하라'는 요청을 했으나, 경찰측은 즉각 '상호 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회 허가를 할 수 없다'며 불허통지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대우정밀해고자복지실천협의회(의장 박종석, 대우해복협)의 박종수(선전담당) 씨는 "남대문경찰서에서 힐튼호텔 앞 집회의 신고자가 호텔 직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해고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막는 대우그룹측의 비인도적 처사에 기가막힐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 법규상담부 관계자는 "사전에 집회 방해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기업은 없었다"며 "이러한 행동은 증거집기가 힘들어 법적 대응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해복협은 지난 5.6일 양일간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대우정밀측과 만나 대화를 했으나, 회사측에서 이전과 같이 해고노동자들과의 개별면담만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집회마저 봉쇄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17명의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25일까지 납부!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전쟁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

마침내 정부는 연세대에 비롯,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함께 연세대 진압작전을 수행했다. 시위진압에 헬기가 투입된 것은 86년 건국대, 94년 서울대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연세대에 투입된 6천여 명의 경찰 병력은 수백명의 학생들을 강제연행했으며, 학생회실 등을 무

<진급 설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14일 오후 2시 40분경 헬기 11대, 51개 중대 6천 명, 다연발 최루탄 발사차량, 소방차를 연세대에 투입, 한총련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던 범청학련 집회를 강제해산했다고 한다. 이어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등, 친관변 단체들이 일제히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엄정한 법집행'으로서 옹호하면서 학생들을 나무라고 나섰다.

우리는 최근 며칠간 진행된 경찰들의 학교 구내의 학생 집회에 대한 탄압을 지켜보면서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엄정한 법집행'은 정부 공권력의 생명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으면 정부는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명분도 잃게 되는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번 8·15 특사에서 5공비리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 복권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사면권을 함부로 남용한 데서도 극적으로 드러나듯이 현 정부의 법집행은 극도로 자의적이다. '엄정한 법집행'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미 '엄정한 법집행'일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측면에서 공정한 법집행의 모습을 관철시킨 후에야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할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분명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표현의 한 형태인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껏 학교 구내에서 열리는 집회는 관례적으로 집회 신고도 없이 치뤄 왔던 집에 비취 불 때 정부가 학생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의 강경진압이 '인권'의 관점에서 불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금껏 보여온 통일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혼미스러운 것이었다.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은 분명 정부의 통일외지를 의식케 하는 바 있으며 이는 민간차원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 교류활동을 철저히 불법시하여 온 정부의 태도에 잘 드러나 있다 할 것이다. 현정부의 이런 통일정책 아래 학생들이 자구책으로 이른바 '불법'대회를 강행했다고 한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분명 정부 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사표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당장 연세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경찰병력 배치를 철회하고, 구속·연행된 학생들을 석방할 것으로 촉구한다.

1996년 8월 14일
인권운동사랑방

차별 수색, 학교전체를 벌집 쑤시듯 뒤집어 놔다.

이에 대해 일부 사회평론가들은 "학생들의 과격행위 투쟁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초래했다"며 대학생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전개된 배경 등에는 침묵함으로써,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민간통일운동을 전개해 온 사회단체들을 즉각 정부의 강경무력진압을 비판하고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정부는 단 한차례도 민간통일운동의 긍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간통일행사를 보장한 적도 없다"며 "수십번씩 대북정책을 바꿔가며 정부 스스로 한총련의 극단적인 정부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구단일화 논리에 의해 일방적 탄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도 즉각 논평을 내고 "통일주장이나 운동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진압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자유로운 통일 논의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민간통일논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 최루탄을 난사해대는 것이 21세기를 앞둔 우리 경찰의 임무는 아니다"며 "집회의 목적을 떠나서 방어 수단조차 변변치 못한 학생들에게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대폭 축소

국가행정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동시에 행정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인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종배, 김창국, 오재식)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행정정보의 공개대상을 대폭 제한하고 공공기관을 심판하는 기구인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안마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부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포괄적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절차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되었던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당초 법률안은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등 9개 항목을 비공개대상으로 제한했으나,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상협상 관련정보 △통일 관계정보 △부동산투기 관련정보까지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언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한미일 공조 대신 민족공조체제 수립할 것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남북은 모든 군비 경쟁을 중단할 것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사제보 715-9185

"거짓말 일삼는 김대통령 사과하라" 쌀수입 반대, 농민들 투쟁 결의

정부가 지난 5월 국내 쌀 부족을 내세워 식용쌀 수입 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드디어 농민들이 쌀 수입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전영수, 충남연맹)은 지난 14일 '식용쌀 수입 규탄 및 통합의료보험, 쌀자금 재취를 위한 96 충남농민 대표자 대회'를 열고 식용쌀 수입 저지와 쌀자금 재취를 위한 전 농민조직의 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이에 앞서 충남도청에서 김영석(35농업) 씨등 32명은 '김영삼 정부의 수입 쌀 식용전환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쌀 수입이 강행될 경우 쌀농사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영석 씨등은 △수입 쌀의 식용전환정책 철회 △식량자급기반보급 조장하는 농지법 개정 △식용쌀 수입 정책에 대해 김영삼대통령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윤정(충남연맹 총무부장) 씨는 "95년 UR협상 타결시 정부는 농민들에게 쌀수입을 해도 최소시장 접근으로 1~3% 내에서 수입할 것과 수입된 쌀은 식용이 아닌 사료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2년도 안돼 약속을 번복하는 것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 농민조직들은 9월 10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서울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는 '쌀자금 재취를 위한 도보행진단'을 구성해 전국을 순회할 계획이다.

행사와 동정

한국노동청년연대 출소동지 환영 및 보고대회

- 일시: 8월16일(금) 오후 7시
- 장소: 한양대 학생회관 콘서트홀
- 주최: 한국노동청년연대(635-8034)

장준하 선생 21주기 추도식

- 일시: 8월17일(토) 낮 12시
- 장소: 경기도 파주 광탄면 신수리 나사렛교회
- 주최: 장준하 선생 추도식 준비위원회

가족과 성 상담소 3기 상담원 교육

- 일시: 8월17(토)-18일(일)
- 장소: 종로성당 4층 교육장
- 주최: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269-5766)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 일시: 8월22일(목)~24일(토)
- 장소: 중구 장충동 타워호텔
- 주최: 한국여성비정부간기구위원회(268-6709)

동부문화센터, 독립영화제 개최

동부문화센터에서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소극장 아리수에서 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 영화제에 상영되는 영화는 '어머니의 보라빛 수건',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등이다. 문의(467-2277)

광주 「인권지기」 목요일인권공부반 모집

「인권지기」에서는 매주 목요일 인권공부반을 운영한다. 인권관련 국제 조약 등을 공부하며, 인권 실현의 희망을 만들어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062-529-7576)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제2의 건대 사태 우려 자진해산 요구목살...경찰 검거작전 돌입

16일 오후 7시 정부는 전경 2만여 명을 연세대에 투입해 검거작전에 돌입해 밤 12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15일 오후 2시 한총련은 남은 행사를 모두 폐기하고 자진해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참가자 전원을 검거한다 는 강경방침을 고수해 각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15, 16일 '8·15 51주년

기념대회 행사위원회, 「민 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해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자진해 산을 할 수 있도록 이성적 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 히 촉구했다.
평화적 자진해산 보장 또한 16일 오후에는 민가 협 어머니들이 연세대 이과 대에서 대치중인 학생들을

방문했다. 민가협은 각 단 체에 호소문을 보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매도하 며 행사가 종결된 지금까지 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 보지 말고 각 단체가 참여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 가협은 "학생들의 시위방 법, 시위 목적을 떠나 작금 벌여지고 있는 경찰의 폭력 행위가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까지 1193명 연행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경찰측은 15일 오후부터 연세대 주변에 전경 1백30 개 중대 1만5천여 명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검거작 전을 폈다. 학교주변은 물론 지하철역, 각 지방역·터미널 등지에서 대대적인 검문을 벌였다. 이 결과 16 일 오전까지 1천1백93명이 연행됐다(<문화일보> 8월 16일자 참조).

범청학련 대회에 참석했다가 16일 간신히 연세대를 빠져나온 황아무개(31) 씨는 "연세병원 매점에서 부터 신촌 로터리 그레이스 백화점까지 검문을 하고 있다. 25세 이하로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검문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측은 열기로 계속해서 학생들의 이동을 파악하고 있으며, 연 세대 앞 8차선 도로를 가득 채운 것은 물론, 교문마다 경찰병력이 물샴없이 지키고 있어 실제로 포위망을 뚫고 나간다는 것을 불가능 해 보였다.

영남대 여학생 의식불명 학생들이 피신한 이과대 만도 부상자가 2백여명에 달하며, 김하영(영남대 문 화인류학과 3) 씨가 의식불 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 이 심한 학생은 4-5명이라 고 한총련측은 밝혔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16 일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불법폭력시위를 막기위해 경찰 인력을 2천8백18명 증원하 고, 예산 1천6백57억원을 배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20:10시 현재

이한열 추모비 앞을 가로막은 경찰병력

백양로 백주년기념관을 지나 이한열열사 추모비 앞은 전경대열로 가득찼다. 이곳은 87년 6월 살인적 최루탄 난사로 숨진 이한열 열사의 넋이 잠든 곳이다.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의 맥을 이어 놓으면서 국민들을 거리로 이끌어냈다.

바로 그 교정 여기저기에는 헬기에서 빨간색을 섞어 뿌린 최루액이 남아 진달래 빛 을 띠고 있었다. 대형 플래카드가 걸린 학생회관 창문은 깨지고 불길에 그을려 거무 르름했다.

이과대 건물 앞에 쌓아둔 바리케이트에는 공권력의 침입에 대비해 불이 붙여지고 간간이 최루탄 발사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한여름밤 매미울음소리 보다도 귀를 때 리는 것은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였다.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과대와 문과대 건물에서 만난 학생들은 "자진해산을 하겠다는 데도 안받아 들인 다. 사방이 막혀있어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15일 학생들은 전경 2개 중대를 무장해제 시킨 뒤 전경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는데, 여기서 언론이 말하는 과 격시위의 허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경찰측에서 강경하게 나온다면 자신들도 그 냥 있지만은 앓을 것이라며 제2의 건대 사태가 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 경진압을 할 경우 우리쪽 보다도 전경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며 기자에게 속히 이곳에서 내려가길 재촉했다.

"무사하길 바란다"는 인사를 나눈 한 학생의 얼굴이 잊혀지기도 전인 밤 10시 경찰 의 검거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구속자 1백여 명을 넘길 것이라는 경 찰측의 예상대로 대량 구속사태가 우려되는 속에 건대사태, 동의대 사태가 무겁게 떠 올랐다. 86년 10월 전국반외세반독재에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 사건(일명 건대사태)으 로 사상최대 1천2백90명이라는 구속자를 낳은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 농성중인 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경찰 7명이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언론은 원인규명을 방기한 채 과 격시위로 학생들을 매도했고 72명이 구속·기소, 30여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자 가족 사원아파트서 내몰아 한진중공업 가족 상경투쟁

한진중공업(사장 송영수, 한중)이 파업을 스스로 해 각시킴을 위해 노력할 예정 산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5 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급기야 가족 들까지 사원아파트에서 내 몰아 16일 오전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와 사태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지난 7월 25일 파업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있자 스스로 파업 을 풀었다. 이 과정에서 노 조위원장 박재근 씨가 구속 되었으며, 8월 10일에는 회 사 경비원들과 관리자들이 한중 해고노동자 박성호 (34)의 부인을 폭행해 임신 9개월중인 부인이 실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후 박성호 씨는 '건조물 방화미수죄'라는 혐의로 11 일 영도경찰서에 구속되었 으며, 노조 간부 부인 4명 과 어린 자녀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들 가족들은 16일 노사 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 승중)를 찾아가 진정서를 냈으며, 한진해운 전무이사 문종철 씨를 만나 '최대한 이 사태에 대해 회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서초동에 소재한 송영수 사 장집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송 사장 집이 휴가를 가고 있어 집앞에 항의서한을 두고 와 야했다. 이들은 오늘 조중 훈 한진그룹 회장집을 찾아 가 항의를 하고 다시 부산 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이후 가족들은 9월 국정

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 부 각시킴을 위해 노력할 예정 이며, 회사측의 손해배상청 구소송 취하를 위해 법적 대응도 모색할 계획이다.

안경호(한국공항 92년 해 고) 씨는 "아무리 구속이 되더라도 노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원아파트 를 봉쇄하고 거리로 내쫓은 것은 반인륜적 폭력만행"이 라며 "임·단협 협상에서 노 조는 노조원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등을 요구했지 만 회사측의 미온적인 협상 태도로 일관해 사태가 이렇 게 까지 커진 것"이라 주장 했다.

전·노 시면위한 전주곡 특별 사면조치 항의

8·15 특별 사면·복권에서 김영삼 정권 초기의 안형모 (전 동화은행) 씨 등 대형 비리관련 사범 11명이 일제 히 포함된 것에 대해 참여 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들은 16일 정부종합청사 후 면에서 '부정비리관련자에 대한 8·15 특별 사면·복권 조치를 철회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4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 에서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 장은 "공소장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부정비리 사범 을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 한 것은 문민정부 개혁 3년 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려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번

조치가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 관련자들의 사면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의혹을 떨치지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 취소 와 김 대통령의 임기내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신대·고용 주요의제 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한국여성NGO위원회(공동 대표 손봉숙) 주최로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이 오는 22-24일 서울 타워호텔에 서 중국, 일본 등 7개 지역 4백여 명이 참가한 가 운데 열린다. 이번 포럼은 북경여성대회 후속작업으로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UN 여성행동강령의 각 국별 진 행정도과 실천방안에 대한 공동전략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23일 각국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며, 주 요의제로 정신대 문제·고 용안정·인권문제 등이 발 표된다.

"먼저나와 장기수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현치·김태홍씨 석방

지난 13일 김영삼정권 개혁초기 구속되었던 대형비리 사범들이 8·15 특별 사면·복권조치로 대부분 풀려났을 때, 진흙 속의 진주처럼 두 명의 양심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현치(43·제일교포), 김태홍(38·제일교포) 씨. 이중 이 씨는 81년 고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임신 9개월인 부인 박정숙 씨와 함께 국보법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때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 감되었으며, 부인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또한 김태홍 씨는 일본에서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연세대로 유학 와 공부하던 중 보안사에 연행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5일 오전, 동양최대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대전교 도소 앞에는 '8·15 특별사면 명단'이라고 쓰인 조그만 색 지에 '3638 이현치' '3801 김태홍'이라 쓰여진 글씨가 보 였다. 그리고 '이현치·김태홍 선생의 출소를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민가협 어머니들이 눈에 띄었다.

10시 20분경 이현치 씨가 부인과 형님 야마모토 쓰네 오 씨의 손을 잡고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 나오며 4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인 박 씨와 뜨거운 포옹을 했다. 그는 "나는 연행직후 3일 동안 잠도 못자 고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이미 연행됐을 때 조서가 꾸 며져 있었다.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될 동안 면회는 물론 변호사의 접견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39년 동안 감옥에 계신 우용각(68) 씨 보다 먼저 나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남아 계신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다짐 하듯 말했다.

15분 뒤 김태홍 씨도 일본인 형수와 함께 모습을 나타 냈다. 그는 석방된 사실이 아직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지 커다란 두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서투른 한국말 로 고맙다고 거듭 말했다. 그 역시 제일교포 간첩으로 16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손유형(66·전주교도소) 씨의 건강을 걱정하며 "그는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 그 분과 함께 나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 연세대학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 대표 기자회견 -

일시: 17일(토) 오전 11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실(745-5872)

<이달의 주제-과거형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공권력 행사, 인간존엄성 보장선에서 광기어린 언론, 반인권적 간접살인 부추겨

한총련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작전이 "씨말려 죽이기"로 확정됨에 따라, 그 방법이 모든 비인도적 만행을 망라한 치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여기엔 살상이 난무하는 전쟁터의 기본 규칙조차 무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인권적 반인도주의적 작전은 광란의 메카시즘을 선동하는 언론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재야출신 국회의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광기를 거들고 있어 커다란 실망을 던져주고 있다.

굶어 죽을테면 죽어봐라 8일째 연세대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은 19일에야 약간의 의약품들을 들여보냈을뿐 여전히 학생들에 대한 식품 반입을 차단했다.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테면 죽어봐라'는 식의 고사작전이 진행되는 속에 부상 및 탈진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19일에도 10여명의 여학생들이 구급차에 실려가야 했다. 농성중인 한 학생은 "의료품이 들어왔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직격탄추탄에 맞아 부상한 학생들은 별다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인도적 작태에 대해 최영도(민변 회장) 변호사는 "전쟁시에도 부상자 치료 등의 의료지원은 차단·공격할 수 없다. 정부가 원치 않는 집회 및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의료지원마저 차단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공권력을 보장하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경찰의 진압방식은 명백히 한계를 넘어선 비인도적 처사"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약간의 의약품

을 반입시키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자수'하는 학생에게 '관용'을 베풀겠다는 등의 선심을 보이면서, 동시에 "시위 학생에 대한 총기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총기 발표' 고려 이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농성대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조만간 벌어질 강제 진압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위대에 총기를 발표하겠다'는 발표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더욱 심각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언론 때도 '개보다 못한 학생' 각 신문·방송은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간접살인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보수언론의 선봉이라고 자부해온 조선일보는 연일 사실 등을 통해, 현재 연세대에 모여 있는 모든 학생들을 '김정일의 행동대원'으로 매도하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주어진 안된다'는 끔찍한 논리를 담당하게 역설하고 있다. '생각이 다른 자에게 개 취급도 필요없다'는 반인권적 논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속자 상황판	
(96년 7월-8월19일 오전)	
연대사태	구속자(연행자)
	69 (2316명)
합계	108명

민주인론운동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최소한 한총련의 주장이 무엇이든지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며 언론의 일방적 매도와 편파보도를 규탄했다.

재야출신 의원, 한총련 비난 언론의 광적 매도와 정부의 인도주의마저 걷어차버린 마녀사냥 속에 사태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로지 '한총련의 폭력성'으로 사태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야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한총련 비난'에 한 목소리를 보탬으로써 한때나마 인권을 이야기하던 자신들의 과거를 무색케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이러한 재야출신 의원들의 한총련 비난에 대해 한 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의 채만수 부소장은 "과거 그들이 아직 운동을 할 때 이 사회의 극우 세력들이 그들을 비난하던 똑같은 말과 논리로 이제 그들이 한총련을 비난하고 있다"며 "알량한 권력의 한 모퉁이에 안주하기 위해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난과 비판만을, 어떤 것에 대해서는 칭송만을 강요하는 권력의 의지에 굴종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평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8월20일(화) 현인숙,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단독1부, 선고
- 8월21일(수) 손영우의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속행
- 8월23일(금) 유현수(속행), 최진수(신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김병목(속행), 학광동(신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유용기, 국보법, 오후2시, 합의1부, 속행 명원장, 국보법, 오전11시, 단독5부,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생리대 전달 차단 여연등 "안전귀가 보장"

경찰이 4천여 명의 학생들의 귀가를 봉쇄하고 음식물과 의약품 등의 반입을 완전 차단한 상태에서 19일 오후 2시40분경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소속 50여 명은 연세대 정문에서 여학생들의 필수품인 생리대 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이과정에서 교문 앞에서 자녀들의 귀가조치를 요구하던 학부모 10여 명이 가세했다.

경찰측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안된다'는 입장만을 거듭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30여 분간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벌였다. 여성단체들은 물품상자를 들고 생리대를 직접 꺼내보이며 대표자들만이 직접 전달할 수 있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켓과 함께 생리대를 손에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이들을 에워쌌던 사복경찰 50여 명은 방독면을 쓰고, 최루탄 분사기를 들이대며 진압에 들어가려

는 태도를 보였다. 조영희(여연 정책부장) 씨는 "전·노 정권 때도 이런 식의 토끼몰이는 하지 않았다. 사형수도 물과 음식은 준다"며 시위여학생 중 1/3은 생리대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뒤 여연등 신촌로타리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서 거리시위를 벌인 뒤 그레이스 백화점앞에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여연은 "연세대의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와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보장할 것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법적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권영길 위원장 출국 미국 민주당 초청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의 초청을 받고 19일 출국했다. 권 위원장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내 주요 노조지도자들과 정계지도자들을 만나 한국의 인권상황과 노동현실을 설명하게 된다.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언

김근태(국민회의) : "한총련의 비현실적인 관념성에 기초한 통일문제 인식과 국민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운동 방식에 대해, 그리고 의사표시 방법의 폭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제정규(민주당) :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상적인 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우재(신한국당) : "나도 60년대 초에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의장단 중 한 사람이었지만 한총련의 시위는 통일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총련 시위는 오히려 통일문제 해결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우익의 대두를 합리화시키거나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민여론의 반영이라고 본다."
김문수(신한국당) : "강경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될지는 의문이지만 학생들을 가만두면 안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
임채정(국민회의) :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입장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8월18일자 인용>

주간/인권/호/름

(96년8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12일>
녹색교통운동,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 외국에 비해 최고 10배에서 5배 이상 높아/안기부 11일 밀입북한 한총련 소속 류세홍(25·조선대) 도종화(22·연세대 휴학)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법원으로부터 발부

<13일>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금' 발족/대구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양승원(21) 이경과 김효길(21) 이경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유가족 가족행위 흔적 있다며 정확한 진상 요구/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 개정요강소위원회 발족/정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증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주동자, 배후세력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문 발표/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 명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추진' 강행해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

<14일>
대한의사협회 발표, 의사의 90%가 도시에 집중/경찰 6천여 명 병력 연세대 교내에 투입해 한총련 통일대추진 지지/여야 한총련 격렬시위 양상에 대해 일제히 우려 표시/경·경에 의해 여대생 성폭행한 범인으로 지목된 2개월동안 구속됐던 회사원 김중보(30·회사원·완주군 용진면) 씨가 가족들의 주적으로 진범 붙잡히면서 결백 입증돼 억울한 옥살이 풀려나

<15일>
8·15특사에서 장기수 중 김태홍(38)·이현치(43) 씨 가석방/범청학련 통일대추진 행사에 참여하려고 상경한 영남대생 김하영(21·문화인류3) 씨 의식불명 상태/김대통령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경우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 밝혀/대구 달서구청 청사층계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설치/연세대에서 경찰의 새차계 걸친 진압으로 통일대추진 무산

<16일>
정부와 신한국당, 한총련 지도부와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해 사범치리키로/검찰 한총련 중앙위원회, 조직통일위원회 이적단체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중/신한국당, 성폭력을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특별법 개정추진키로/통계청 발표,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 평균41만3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x 증가/경찰 원천봉쇄에 이어 또다시 연세대 교내로 진입, 학생과 충돌(대치 5일째)/민교협 연대사태에 관련한 경찰의 봉쇄와 관련해 성명내고 학생들의 자진해산 받아들일 것 요구

<18일>
검찰, 소설가 김하기 씨 국보법 위반 혐의(탈출)로 구속 영장 청구키로/전고조(현재 해직자 3백46명 미복직) 전고조 결성 등을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 청원운동에 나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종교계 지도자 10여 명 기자회견 열고 연대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경찰력 철수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귀가 허용 촉구/연대사태 대치 7일째 경찰, 병력 98중대 1만2천여 명과 경찰 헬기 2대 동원해 건물주변 전면 봉쇄, 일제의 학생통행이나 식품·의약품 반입 차단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⑥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설립과 지원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정부, 연대사태 평화해결 의지 없었다 시민·사회단체, 21일 과잉진압 규탄대회

20일 단 하루만에 농성진압으로 2천5백여 명을 연행하고 난 뒤, 주요 언론들이 '한총련 사태 종결'을 보도

하고 나선 가운데, 30여 개 단체가 망라되어 19일 구성된 '연세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

회단체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등이 정부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집회를 갖는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비상대책위는 20일 낮 12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인도적인 강경진압과 연행의 즉각 중단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귀가 보장 △비인도적인 강경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내무부장관 등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

20일 새벽 정부의 무력진압과정을 지켜본 교수, 종교, 사회단체들은 즉각 정부의 폭력적, 반이성적 작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이날 오전 11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한총련 사태에 대한 공동입장을 정리·발표했다.

장, 경찰청장 등은 용분의 책임을 질 것 △총기사용 발표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전투적 강제진압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총기발사까지 감행하겠다는 경찰당국의 입장은 광주학살 주범들의 사고방식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민족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개방적 통일은의와 환경마련에 힘써야 하며,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학생들 행위의 이면에는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당국의 독선이 존재해 왔다"며 "실사 학생들의 주장이 과격하다 할지라도 직접 폭력으로 학생들을 강제진압하고 언론이 원색적 흑백논리로 이들을 매도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장의 다양성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진지하게 통일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수들은 정부에 △각계의 중재노력을 목실한 진압작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 △국무총리, 내무장관, 교육장관, 검찰총

최규업(34·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씨는 "정부는 학생들을 적으로 돌리고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던 일이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미명하에 임기 내에 민족민주운동세력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재야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번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수 등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규명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 간사 연행 연희동서 학부모 돕던중

20일 오전 10시 연세대 이과대 건물에 있던 학생들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빠져나오자, 이들 중에서 자식을 찾기 위해 현장을 해매는 학부모들을 돕기 위해 연희동에 갔던 채은아(32·민가협 간사) 씨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채 씨는 민가협 소속 어머니들과 함께 연희동 부근에서 이들 학부모들에게 조급이라고 도움을 주고자 사방을 뛰어다니던 중이었으나, 경찰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채 씨를 집회 및 폭력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연행했다. 현재 채 씨는 노량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독자투고 715-9185

원인규명없이 학생폭력 집중 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 보도 모니터

8월12일부터 18일까지의 한총련 시위관련 보도에 있어 방송3사는 매우 불공정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대회를 강행하려는 학생측과 대화를 진북, 불법집회로 규정된 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을 보도하면서 방송3사는 뉴스시간의 1/3, 17, 18일에는 거의 뉴스시간의 1/2을 할애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보도로 일관했다.

8월14일 헬기를 동원한 강제해산에 대한 보도에서 방송3사는 경찰의 강경진압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입장을 보도하지 않고, 오직 학생들의 폭력적인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였다.

한총련 시위관련 보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이 과격하고 폭력적이 된 원인이 경찰의 강경진압과정에서 비롯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시위관련 보도에 있어서 검·경의 발표나 주장을 되풀이 보도하여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화시켰다.

셋째,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학생들의 모습을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석파이프를 든 학생,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 매 맞는 전경 등 일방적으로 학생의 폭력 장면만 반복방영하여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을 고착화시켰다.

넷째, 부상자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경찰부상자만 따로 폭지를 할애해 보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부상에 관한 보도엔 인색했다. 다섯째, 시민 인터뷰와 관련 단체 인터뷰, 여야 국회의원의 인터뷰 보도에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일색으로 보도했다.

여섯째, 법원의 학생들에 대한 영장기각에 관련한 보도나 8월15일 대회를 폐막하고 자진해산하겠다고 발표한 학생들에게 출입구를 봉쇄한 것과 같은 경찰의 입장에 불리한 보도에는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으로 방송3사는 사태의 원인, 추이, 결과,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이성적으로 보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의 대학생 모두를 북한의 사주를 받는 좌익극렬분자, 폭력단체로 매도하는 지극히 왜곡되고 편향되며,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KNCC 언론위원회 모니터팀】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이 한달 넘도록 발급되지 않은 홍성담(41·화가) 씨가 결국 지난 10일 영국에서 열린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다.

홍 씨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예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됐는데도 불구하

고 2~3일이면 나오는 여권이 한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개막된 고문반대 전시회에서는 덴 존슨(AI 영국지부 소속) 씨가 홍성담 씨 대신 참석해, 축하 연설을 했다. 덴 존슨 씨는 "전시회 참가자들은 홍 씨의 작품에 강한 메시지를 받았으며 호평을 했고, 영국 방문이 좌절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에딘버러 전시회의에 홍 씨가 참석을 하려고 했던 글래스고우시의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은 10월까지 개관 축하 전시회가 진행된다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영국을 방문할 수 있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영국·류은숙】

승진 성차별 가장 많아 고용평등추진본부 결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난 14일 고용불평등고발센터에 접수된

고발 및 상담 사례에 대한 상반기 결산을 발표했다. 고용불평등고발센터 찾은 상담자를 살펴보면 금융권이 20.9%로 가장 많았고, 운수·유통·무역이 19.1%, 교육기관이 8.7% 등의 순이었으며 직종은 사무직이 54.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담 유형은 성차별 및 관련 직제개편(22.0%)과 부당해고 및 부당인사(20.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희롱 및 폭언, 폭행도 17.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명숙 상담실장은 "여성들의 장기근속과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승진차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상담사례중 상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등 이유가 납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고용평등고발센터는 모집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상담한다.

고려대 서창캠퍼스, 군병력 진입으로 긴장 "5공정권 되살아났는가?"

서울에서 수만 명의 경찰병력이 연세대를 초도화시키고 난 몇시간 뒤, 충남 조치원에 소재한 고려대 서창캠퍼스엔 무장한 군인들이 철자와 트럭을 앞세우고 들어와 학생들을 긴장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오전 9시반경부터 차량과 함께 들어온 군인들은 학교교정에 총을 메고 돌아다니며, 도서관과 건물 옥상에 진을 쳤고, 이에 학생들을 즉각 분노 섞인 항의에 나섰다. 학생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날 군부대의 진입은 '부대 훈련장소로서 대운동장을 사용한다'는 학교측과의 합의공문에 따른 것이라 한다. 결국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공문내용에 어긋나게 학교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부대는 1시간만에 철수하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최근 한총련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원교정에 또다시 군화병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은 5공 군사정권의 환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한총련 과잉진압 및 탄압 규탄대회 -
 일시: 21일(수) 오후 3시
 장소: 명동성당

<이달의 주제-과거형산>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⑦
재발방지 조치로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테오 반 보넌-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연행자 확인전화 '182' 검거에 역이용 경찰, 부상자 치료뒀전 사법처리 혈안

20일 저녁 MBC-TV 드라마 방송중 연세대 사태로 인한 연행자 확인은 국번없이 '182'로 하라는 안내자막이 흘러 나왔다. 이를 본 사람들은 방송사와 경찰측의 편의제공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이를 경찰이 이용해 추적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김아무개(24·광주지역단체 소속) 씨에 따르면 경찰은 자녀들의 신원확인을 하려는 문의전화를 역이용해 조사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분개하며 그는 총학생회측과 학부모들에게 절대 전화를 걸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학부모 자녀 면회 안돼 182로 전화를 걸면 연행 여부를 알려준다는 보도와는 달리 연행학우 학부모들

이 각 경찰서로 찾아가 연행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경찰측은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 수의학과라고 밝힌 한 학생(25)은 친형과 동대문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정보과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당신네 자식들이 뭐 잘한 게 있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울먹이며 "약만이라도..." 심지어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받고 있어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강남경찰서로 동생을 찾아간 한 시민은 20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경찰서 앞에서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동생 이동혁(고려대) 씨는 눈에 들을 맞아 실명위기에 처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조사를 이유로 강남서로 송치되었다고 한다. 울먹이며

"동생에게 다만 경찰병원에 서 조제한 3일치 약봉지만이라도 전해달라"는 한 시민의 애원은 묵살되었다.

구타로 근화발 자극 남아 경찰의 비인도적 처사는 물론이고, 경찰의 폭력성이 확인되고 있다. 17일경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조아무개(한신대 신학과 졸업) 씨의 경우 연세대 치과대 병원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단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었으며 근화발 자극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학원 전원 유죄판결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의 여부는 실제 활동 내용이나 그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지난 5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원)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학원의 실제 활동과 지향이 평화적이고, 활동의 영향이나 그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면서도 "출범선언이나 규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시각은 '사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지난 7월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재판부(형사9단독, 판사 유원석)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과정 부당대우 금지 요청 AI, 한총련 사태 인권보장 촉구

한총련 통일행사와 관련된 대규모 학생들이 연행되고 이들에게 부당한 경찰폭력이 행해지자, 국제앰네스티(AI)는 20일자로 긴급호소문을 보내왔다.

AI는 "경찰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것과 경찰조사과정에서 더욱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우려한다"며 "국

제인권기준에 따라 구금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저항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대우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한국당국에 △가족 및 변호사 접근을 보장할 것 △적당한 의료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규탄대회가 21일 오후 3시 30분 1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연합·민주노동·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사회·시민단체로 결성된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비상대책위'(탄압비대위)가 주최했다. 탄압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들의 자진해산 의사와 사태해결을 위한 각계의 중재노력을 목상하고 진압작전을 강행한 정부측에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총기사용 불사 발표의 즉각 철회와 박일룡 경찰청장의 해임 △연행 학생들의 즉각 석방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이념공세 즉각 중단 △올바른 통일정책과 통일논의의 보장을 위한 공개 토론회 제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투쟁을 미리 차단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과거 86년 건대 사태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87년 6·10투쟁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던 이번 탄압을 이겨내자고 격려했다.

진압대 여학생 성추행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에 나선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씨는 "여연으로 속속 들어오는 제보에 의하면 진압이 끝난 뒤 옥상에 대기해 전경차까지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줄줄이 세워 놓고 지나가는 진압대마다 여학생의 젖가슴을 꺾어뜯으며 성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희롱한 전경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몰상식 지난 17일 오후 의약품 전달을 위해 연세대를 방문했다가 되돌아온 임종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약사는 "전쟁중이면 적군과 야군을 치료하는 것이 보건의료인의 의무이다. 그런데 17일 연세대를 방문한 약사회 8명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종합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료가 안되면 약품이라도 전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했다"며 몰상식한 정부의 조치에 분개했다.

다음 연설에 나선 김영규(인하대 행정학과, 민교협) 교수는 "현정부의 이번 탄압 관련 범죄자를 풀어주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청년학생들과 재야운동세력들에 대한 사전포석"이며 "올 가을 노동법 개정에 있어

교협 서울지회장) 교수, 중호 스님 등 3인이 사회국장을 면담해 '한총련에 대한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언론본연의 객관성을 회복할 것' 등의 사회단체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대표단은 8월 20일자 '북한, 재야단체에 한총련 시위 지지 선동'이라는 기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중앙일보 사회국장은 "기사를 보지 못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한다.

3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나누어 이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사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언론사 항의방문 8월 20일자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국민들의 악감정을 격앙시켰던 '사수대가 이달 막고 있다'는 재하의 기사는 사실확인도 없이 경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한 기사였음이 확인됐다.

21일 오전 11시30분 한총련 통일행사에 대한 언론의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를 규탄하기 위해 중앙일보사를 방문했던 최규업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중앙일보 사회국장과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위와같이 밝히고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사 항의방문엔 전국연합, 한총련, 민교협 소속 회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 위원장과 단철 노동법 개정에 있어

아시아자동차 노조 위원장등 2명 구속

20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조남일 민주노동 광주전남 지역본부 의장 겸 아시아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과 윤주천 조직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창환 교선실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5명은 19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두 달전 아시아자동차 입단협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던중, 출동한 경찰병력에 의해 연행됐다.

이에 민주노동은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구속사태를 야기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사측에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노조간부들의 구속을 도왔다는 것은 노사신뢰를 저해한 것"이라 비난했다.

연세대 사태 부상자 소식 실명 4명, 두개골 함몰, 뇌사, 뇌출혈...

전체 부상자수는 물론 연대 내부에서 있었던 부상자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며, 더욱이 20일 진압과정에서의 저질러진 경찰폭력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부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 속보에 따르면 14일 정경일(세종대 3) 씨가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위기에 빠졌다. 16일 저녁 8시 경 동교동 로타리에서 시위하던 김현기(21·연세대 의예과) 씨가 경찰쪽에서 날라온 것으로 보이는 돌에 왼쪽눈이 맞아 연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위기이다.

17일 오후3시경 연세대 종합관 오른쪽 길에서 박수근(24·대전침례신학 4) 씨가 경찰이 쓴 직격쇠루탄 2발에 왼쪽눈과 턱 아래쪽을 맞아 실명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종합관 5층에서 상황을 지켜본 한예림(24·여) 씨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기중이던 사수대 20여 명을 향해 경찰이 2미터 앞에서 4발 발 쏘아 여러 명의 학생이 다쳤고 한 학생은 두개골이 푹 꺼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서규석(24·고려대4) 씨가 시위도중 돌에 맞아 실명위기에 처했다.

이밖에도 김화영(영남대 문화인류학과 3) 씨가 원래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긴장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이다. 또한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전지역 대학생이 뇌출혈로 중태에 빠져 연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①
재발방지 조치로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과거 회귀하려는 김영삼 정권의 보수극우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극우논리가 판을 치는 현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적 기본권마저 도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미완성의 법률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항의방문자까지 연행하고, 가면 등 시위용품을 문제삼아 집회를 불허하는 등 현행 집시법을 빙자한 권리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허가제로의 개악 방침은 그나마 존재하던 표현의 자유 영역을 더욱 축소, 침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89년

집시법 개정이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방침은 헌법정신까지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 시비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물론 정부는 허가제라는 표현 대신 '집회장소 사용시 시설주의 승낙서 의무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규정의 적용이 모든 집회와 시위의 실질적 허가제로 기능할 것이란 점은 명약관화하다. 동시에 그동안 대학내의 집회가 관례적으로 신고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법 개정을 통해 학내 집회마저도 허가제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학생자치의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으로 볼 때, 학생자치 활동의 하나인 학내 집회마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총련 사태를 통해 정부는 보수극우의 논리를 하나 둘 관찰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5공정권의 학원 탄압에 버금가는 학원자치 말살과 학원내 자유로운 사상활동의 금지는 물론, 4·19를 연상케 하는 경찰총수의 '시위대에 발포' 방침을 통해 정부는 과거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나섰다. 또한

냉전논리를 부활시키는 방위비 증액 발표와 지구지구한 반공교육의 복권을 꿈꾸는 '대통령의 이념교육 지시' 등은 극단적 보수화로 나가는 현 정권의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것이다.

김 이경 죽음에도 전국연합 성명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2일 한총련 해산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숨진 김중희 이경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무당국과 언론의 한총련에 대한 이성을 잃은 무차별 강경대응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며, 따라서 이번 김 이경의 죽음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

8월12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폭행, 인신모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산피해 등 인권피해에 대해 아래의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피해사태는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법률구조도 지원합니다.

<신고전화> 민변 522-7284/민가협 763-2606/인권운동사랑방 715-9185/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한국교회 인권센터 744-3717

했다. 더불어 "폭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물리력을 동반한 시위나 진압은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했다.

올해 인권상황 조사 AI, 조사단 파견

국제 엠네스티(AI)에서는 올해도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조사단 2명을 파견한다. 클레어 맥베이(AI 한국담당자) 씨와 마이클 더디 씨는 이번 방문에서 정치범, 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맥베이 씨는 올해말에 있을 한국정부의 UN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사와 관련해 국내 고문관련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인권단체들과 AI의 캠페인 전략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AI는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민변, 민가협, 천주교인권위, NCC 등에 보내왔다.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오원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95년 한해동안 41개국에서 2천9백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으며, 79개국에서 4천1백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알려진 수치이며 실제 통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인권협약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 등 5개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90년 이후 미국에서는 6명의 청소년이 사형집행되었으며, 이 숫자는 5개국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사형 존치론 비과학적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1764년 백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한 이후 금세기 접어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9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졌다. 현재 세계의 절반이상인 1백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제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은 존치되고 있다. 88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

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사형제도가 중신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 사형제도와 범죄율에 관한 많은 연구서들 중 88년 유엔의 보고서 "모든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사형제도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범죄율의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형-생명권의 침해

국제엠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지존파의 경우를 물론, 민주화를 깃잡고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범죄혐의자인 전두환 씨의 경우에도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흉포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국가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두환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며칠 앞두고 그의 범죄행위가 심판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도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 씨에게도 생명권이 있기 때문이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을 무기형으로 감형하라는 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옥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즉각 종식하라는 각종 인권활동을 전개해 온 사람으로서 세월의 무상함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

며 오늘 그에게 선고될지도 모르는 사형을 반대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치료, 가해자 치료·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가 발족되었다.

22일 오전 10시30분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예총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실레스트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벌여온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경과, 조직체계 및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출범을 알렸다.

가정폭력방지법 추진본부는 취지문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이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은 가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사업으로 9월 한달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사회복지계·의료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1천인의 서명을 받아 9월말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9일에는 각 정당, 정부, 여성·사회단체, 경찰 등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를 갖는다. 각 정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다.

10월중에는 시민견기대회를 비롯해, 현재 결성되어 있는 9개 지역운동본부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촉구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행사와 동정●

- 민족문학작가회의 하기 이사회
 - 일시:8월24일(토) 오후 2시30분
 - 장소: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실
 - 주최:민족문학작가회의(313-1486)
- 제5차 전대협의 밥(정기총회)
 - 일시:8월24일(토)-25일(일)
 - 장소:공주 감사 계룡산 유스호스텔(0416-857-9987)
 - 주최:전대협 동우회(3673-1989)
- 전국순회 시낭송회
 - 일시:8월24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안산시민회관
 - 주최:민족문학작가회의(313-1486)
- 사제 체육대회 및 통일염원미사
 - 일시:8월26일(월) 오후 2시
 - 장소:충북 음성 꽃동네
 - 주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3672-0251)
- 참여연대 제4차 국제연대포럼
 - 일시:8월26일(월) 오후7시 ·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 발표주제:지속 가능한 개발과 아시아의 경험/아시아 지역의 환경현황과 전망
 - 주최:참여연대(796-8364)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①
사실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시민에 총기 위협·항의자 연행

한총련 탄압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던 시민 민윤제(31) 씨가 성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권총으로 위협을 당하며 연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성남연합 회원 등이 함께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총기위협은 정부의 한총련 사태에 대한 강경방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총련 탄압은 물론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무언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박일룡 경찰청장의 총기사용 발언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총기사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성남연합 이정옥(28) 씨에 의하면 22일 오후 8시경 성남연합 회원 및 시민 8명이 성남시 태평동 태평역 내에서 한총련 탄압관련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 역무원의 허락을 요청하던 중, 피켓 옆에서 있던 민윤제 씨를 경찰관 2명이 수갑을 채우며 연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관 1명이 권총을 뽑아 들고 "반항하면 특수공무 방해"라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겁에 질린 민 씨가 도망치자, 총기를 겨누고 있던 경찰관이 뒤쫓아가 민 씨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구타하며 다시 머리에 권총을 겨

누 채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민 씨는 다리를 유리에 찰려 병원에서 14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이에 성남연합 회원 및 시민들이 경찰의 권총위협과 구타, 무차별 연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궁지에 몰린 경찰관이 전화요청을 했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과 전경 50여 명에 의해 항의자 성

남연합 회원 및 시민 7명이 연행되었다. 23일 풀려난 이정옥 씨는 이때 상황을 떠올리며 "며칠 전 있었던 한총련 사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폭압적 진압이 주변에서 쉽게 개편된 것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폭행이나 폭언은 물론 실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총기를 사용하는 데 많은 시민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 씨가 성남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총기위협을 한 경찰관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역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관 3명도 폭행사실을 극구 부인했다고 한다.

연행자들 가운데 23일 오후 6시경 이정옥(26) 씨 등 6명이 진술만 받은 상태에서 풀려났으며, 나머지 2명도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검찰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까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컴퓨터 통신상의 검열문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달 통신공간상에서의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 검열철폐연대)가 구성되었으며, 통신공간에서 자유언론을 지켜 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한국 통신검열 백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에 의한 검열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검열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93년 9월 「공산당선언」을 천리안에 게재한 이

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상호(당시 건국대생, 무죄선고 받음)씨 사건을 비롯해, 95년 선거당시 토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 등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토론문화가 침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열철폐연대는 "최초의 문명정부라 부르는 현정부의 피시(PC) 통신 문화에 대한 무지함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명정부의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검열실정법에 의한 검열의예도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의 대표적 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95년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검열기관이 되고 있다. 특히 심의규정에는 정보제공자(IP)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포함되어 있어, 출판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열의 범위는 사적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까지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검열철폐연대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 통신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마저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연세대 진압작전이 끝난지 나흘이 지났다. 연일 부상당한 전경들의 이야기와 연세대가 입은 피해액 등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인 학생들이 당한 피해의 내용은 전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만으로 짐작하자면,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진 인권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해진 인권탄압에 대한 조사와 발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하실에서 3일간 구타 경찰이 학생들에게 가한 인권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연행·조사과정에서 벌어진 구타와 성희롱 및 조작수사에 의한 구속남발이다.

20일 진압작전에서 연행돼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최 아무개(25·여) 씨는 "연행당시부터 중랑서 보호소에서 나올 때까지 84명 모두가 계속해서 구타당했다. 특히 전경의 의식불명 소식이 보도된 이후 더 심하게 맞았다"고 밝힌 뒤 "한 남학생이 구타에 항의하자 남학생들 모두 지하실로 데려가 3

일내내 때렸으며, 전경들이나 식당 아주머니로부터 남학생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구토증세를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제보해 왔다.

최 씨에 따르면, 경찰은 부상중인 연행자에게 치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병원측으로부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여학생에게 소독만을 시킨 채 경찰서로 연행했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나가서 해라'는 말 이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씨는 경찰이 속옷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속옷을 들추게 한 사실도 전해왔다. 현재 경찰의 성희롱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계속해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쇠파이프 주고 사진찍어 서울대 1학년 김 아무개(20·남) 씨의 경우는 조작에 의한 구속여부로 의혹을 사고 있는 사례이다. 김 씨의 사례를 제보해온 학교 동료에 따르면, 그는 통일행사 기간 동안 사수대가 아닌 본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면회시 김 씨가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쇠파이프를 쥐어 주고 사진을 찍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올 함께 구속된 6명의 남학

생 모두가 같은 경우라고 김 씨는 전했다고 한다.

지나가던 시민도 구타 통일행사에 참석한 뒤 연행되었던 학생들 외에, 시위를 한 사실도 없는데 신촌 주변에서 불법 연행돼 경찰폭력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 아무개(한신대 2년) 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아주머니는 "아들이 18일 오후 약속때문에 신촌에 갔다가 연행된 뒤 3일만에 풀려났다. 아들은 풀려날 때까지 48시간 동안 계속 구타를 당해 안경이 깨지면서 눈부위에 피멍이 들었고 양무릎이 깨졌으며, 현재도 밤마다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병원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전해왔다.

공포감에 제보 못해 현재까지 민가협엔 20건에 이르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당사자의 직접 제보에 의한 구속여부로 의혹을 사고 있는 사례이다. 김 씨의 사례를 제보해온 학교 동료에 따르면, 그는 통일행사 기간 동안 사수대가 아닌 본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면회시 김 씨가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쇠파이프를 쥐어 주고 사진을 찍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올 함께 구속된 6명의 남학

같은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는 구속학생의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는 신청인들이 줄을 이었다. 찾아온 부모와 친구들은 한결

같이 자식의 억울함과 동료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돌아갔다.

인권침해 실상 보도해야 이번 사태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경찰의 폭력성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관련된 문제라는 특성 외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경찰편을 들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정론마저 얼굴을 내밀기 무서운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에서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TV화면에서 일궈낸 몇몇 비루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실상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아시아 독립비디오 한마당

25, 26일 서울대 호암관

25, 26일 서울대 호암관 삼성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리는 맥브라이드 라운드 서울대회에서 아시아 독립비디오 한마당과 아시아 지역 독립영화인들의 연대를 위한 워크샵이 열린다.

25일 낮 1시부터 4시까지 "사회운동과 비디오운동"이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아시아 비디오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워크샵이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기간 중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말레이시아·라오스·몽고 등 10여개국의 독립비디오 작품이 상영된다.

아래 지로로 남부를

구독료 월1만원

적자에 허덕이는 <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지로번호: 7618848

- 한총련 과잉진압 및 탄압 2차 규탄대회 -
일시: 24일(토) 오후 3시
장소: 명동성당

<이달의 주제-과거형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각계 반발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계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 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구형보다 낮아졌으며,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것은 내란목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란목적 살인부분에 대해 정호영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광주항쟁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날 선고공판을 직접 방청한 김동완(KNCC) 총무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들은 논평을 통해 “전 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

등에 대한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힘든 만큼 낮고, 정호영, 박준병 씨에 대해 12·12 관련 혐의에 무죄를 언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며 항소심에서 좀더 명확하게 밝혀지길 촉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는 쿠데타와 학살로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기구가 만든 국보법 등 악법과 제도의 청산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보법 등 악법에 의해 2천여 명이 사바로세우기를 완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석방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쿠데타 세력들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인정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쿠데타 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방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민과 모든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극히 실망스런 판결”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전 피고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노태우 씨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정상 참작이라는 명목으로 법정형에도 못미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운이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형량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외에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많은 단체에서 선고공판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에 대한 유죄 확정에는 환영을 했지만 뚜렷한 과거 청산에는 이번 선고공판이 상당히 미흡하다

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26기 여성상담 교육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는 26기 여성상담 전문교육을 9월3일-10월4일 실시한다.

매주 화, 목요일 오전, 오후 2시간씩 진행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6주간의 후속교육을 받고 여성의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수강료 10만원, 신청은 8월30일까지. 문의: 269-2962*5

이주노동자 워크숍 외노협 28일부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8일부터 9월1일까지 4박5일간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세계 경제구조정책에 도전하는 이주노동자’의 주제로 국제외국인노동자 실무 한국워크숍을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세계화와 APEC, 이주노동자에 끼치는 영향 △이주노동자의 상황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전략 등이 다뤄진다. 참가비 10만원. 신청: 744-9063.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

8월12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폭행, 인신모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산피해 등 인권피해에 대해 아래의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법률구조도 지원합니다.

<신고전화> 민변 522-7284/민가협 763-2606/인권운동사랑방 715-9185/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한국교회 인권센터 744-3717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가 열린 이후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이 한국여성 NGO 위원회(공동대표 이연숙 등) 주최로 지난 22-24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동아시아 여성포럼에는 일본, 중국, 몽고, 마카오 등 7개 지역에서 4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가별 여성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정신대문제 등 3개의 주요문제와 여성폭력, 경제 및 개발 등 6개 주제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들 참가자들은 보고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였다. 특히 동아시아 여성의 삶에 공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 이념이 가족구성원간의 민주성 획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몽고의 오이도브 엔크투야 씨는 급속한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최근 공산당이 아닌 민주당이 집권해 개방경제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특히 고용 불안과 매춘이 증가하고 있

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의 옌린 구 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심각성을 폭로했다.

포럼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그동안의 회의를 결산하며 결의안을 채택해 여성평등을 위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 철회와 법적 책임, 국가배상 △직장내의 성차별 제거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 보장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거주에 최소 30%의 할당제 △중요가 인종·성차별, 계급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여성을 차별해 온 교역과 관습들로부터 해방 요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 모든 개발과정에 여성과 여성단체 참여 △가정폭력과 강간 등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위해, 각국 정부가 핵발전소와 핵무기 및 핵실험 중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2년 뒤인 98년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지난 93년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지역준비회의로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태지역 실무회의가 개최되면서 이곳에 참석한 한국 여성대표들과 동아시아지역 여성대표들이 동아시아의 지역·문화적 특수성에 공감해 동아시아지역 여성들만의 회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만들어졌다. 제1회 포럼은 일본에서 열렸다.

구속자 상황판

(96년 7월-8월23일 현재)	
연대사태 (국보법 36명 포함)	462명
합계	570명

주간/인/권/호/름

(96년8월19일부터 8월25일까지)

<19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이유에 대해 ‘군의 광주 무력진압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힌 녹음테이프 발견/박일룡 경찰청장, 경찰에 대항하는 폭력시위에 대해 총기사용 불사 밝혀/명값 인상에 반발한 요르단 시위사태와 관련 요르단 당국 시위관련자 일제검거 시작

<20일>

경찰측, 범청학련 대회와 관련해 농성중인 연세대 진압 개시/전남경찰청, 17일 남춘천 사무실과 조선대 총학생회실의 압수수색에서 주채사상 시험문항등 발견했다고 발표/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김계진), 90년 윤석양 씨의 폭로로 알려진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대상자에게 손해 판결/인도네시아, 소요사태와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가톨릭 사제 산드리아완에 대해 대통령 모욕과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

<21일>

김봉준(21·백화점 종업원)씨,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2시간 동안 폭행당했다며 경찰 고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부가 5년마다 조사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남성 장애인 수가 15년전보다 줄어드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연세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의경 김중희(20) 씨 사망/대법원 민사1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받다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 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린 원심 확정/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인 클레르크 국민당 당수, 인종분리정책 도입등과 관련 당시 자행 인권유린에 대해 사죄

<22일>

연세대 통일축전 행사와 관련해 5천8백48명 연행, 한총련 간부 36명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전농 소속 농민과 학생등 4백여 명 부산역 광장에서 ‘쌀수입저지를 위한 농민결의대회’ 개최/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심재돈), 조남윤(26·당시 행정2) 씨등 연세대생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년 당시 과잉진압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판사,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사이무개(60) 씨에게 징역1년 선고/고려대, 교내 학생회관에 있는 한총련 사무실 폐쇄키로/서울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전봉진), 4·11 총선 때 컴퓨터통신 토론방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동욱(33)씨에 대해 유죄인정

<23일>

대법원 형사3부(대법관 지창권), 89년 이내창씨 의문사 사건보도와 관련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이공순(전 <한겨레신문>기자) 씨 상고심서 무죄선고한 원심확정/노개위, 전문가 2백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57.3%가 정리해고계 요건 강화 주장/프랑스 경찰, 체류허가 요구하며 장기기능성을 벌여온 아프리카 이주민들 강제해산

<25일>

‘하남 동일을 여는 사람들’, 하남시 주둔 미군부대에 수도로 납부 촉구 범시민서명운동/12·12 당시 신군부의 병력동원사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시민 희생 사실이 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①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 제공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의장 아스비온 아이데 교수, 인권소위) 제48차 유엔회의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8월 초 판노현(방송대 법학) 교수와 이성훈(전 인권협간사) 씨등이 참관했다.

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무리없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정부 대표로 제네바 대표부의 이종희 참사관과 선우 영 법무부 인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획기적인 사항은 한국정부 대표측이 자진해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제 14조 상의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국내인권기구 설치 검토 중이라고 한 점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 상에는 조약국의 의무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의 개인제소 접수

권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약국이 조약 14조를 선언했을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에 한국정부가 곧 선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약에 따른 개인제소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에 힘입어 화교문제와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화교·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인제소 가능해져
판노현 교수는 "한국인권운동이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 흑 식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개인제소 길이 열릴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현재 이러한 취지의 선언을 한 국가는 22개국에 불과하다.

'불처벌' 보고서 관심끌어
루이 주아네·반 보벤 등

한편 인권소위 제48차 회의에서는 크게 20여 개 인권관련 안건이 상정·토의되는데, 이번 회의 안전중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인권소위가 루이 주아네(Louis Joinet) 씨와 장기제(Jean Guisse) 씨, 그리고 반 보벤(van Boven) 씨에게 의뢰한 불처벌(impunity) 관련 보고서들과 제실종관련조약(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s) 초안의 내용이다.

그 밖에도 비상상태와 인권, 극심한 빈곤과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과학기술발전과 인권, 장애와 인권 등의 주제들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루이 주아네 보고서와 반 보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연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

구독료 남부
지로번호
7618848

주요 공판 안내

- 8월29일(목) 이철우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진추원회 국보법, 오후3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연성수,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8월29일(목) 여성소, 화염병사용등의 법률위반등, 오후2시, 2단독, 321호, 신진
 - 8월30일(금) 황윤미, 국보법, 오전11시, 5단독, 합의 519호, 속행 박지현, 국보법(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진이원구, 국보법(잠입·탈출),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신진김미정, 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이상 서울형사지법

48차 유엔인권소위 열려
이 기간 중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기가 5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지난 6, 7일 제네바 유엔빌딩에서 열린 인종차별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순경 손배소송 승소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며 "기존의 배상액보다 많은 액수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직분을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와 가족이 폭행·고문 등으로 고통을 당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며, 이로써 김 씨와 가족들은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해고노동자 사당의원 입원

대우그룹 해고노동자 현종복(30) 씨가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씨의 경호원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신한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이를 항의하는 이성도(대우정밀 해고노동자) 씨등 13명을 '법원내에서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연행, 관악경찰서에서 형의로 분산·수용했다.

현종복 씨는 지난 26일 서초동 서울지법 정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선고를 받고 퇴장하는 김우중(대우그룹 회장) 씨에게 "94년도 복직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다가 김 회장과 함께 나온 10여 명의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현 씨는 현재 사당의원에 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계속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태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현 씨는 "나를 폭행했던 경호원들은 대우정밀의 축구부원들이었다"며 "내 목을 직접 때렸던 사람중한 사람은 대우정밀 노무관리팀 과장으로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된 대우정밀 해고노동자

6명을 면회한 이종찬(91년 대우정밀 해고) 씨에 의하면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이들에 대해 범원알 시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힐튼호텔(김우중 씨 부인이 경영)측이 영입방해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들 대우그룹 해고노동자들은 89, 91년의 임금인상투쟁 과정에서 해고되었으며, 대우그룹측은 지난 94년 5월 25일 이들 해고노동자들을 일정기간 계열사에 근무하게 한 후 96년부터 복직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로 올라와 힐튼호텔과 김우중 씨 집앞 등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매춘 여성 1백20여만명 여성민우회 대책시급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이어 대두되고 있는 주부와 미성년자 매춘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장 등, 여성민우회)의 주축아래 27일 [매춘을 알 사회학과) 교수는 "오랜 역사 동안 매춘을 발달시켜 온 남성문화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와 아내까지도 매춘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며 매춘을 조장하는 성문화와 성산업의 과감한 철폐를 주장했다.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매춘이 성행하고 있는 현상과 기존 매춘 여성들의 고령화(매춘 여성은 평균 40대 불쌍한 여성)와 변형된 매춘업소 형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매춘 실태와 현상에 대해 발표한 변리나(참누리 대표) 씨에 의하면 "현재 출근시간과 매상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식이 덜한 '보도사무실'이 유행하고 있다"며 "보도사무실에서는 10여 명의 매춘 여성을 확보해 아르바이트 형태"라고 설명했다.

90년말 허가된 보사부에 허가된 유흥업소가 41만 5천 개에 달하고 있으며, 무허가 업소를 포함해 매춘 여성들의 수가 약 1백20만-1

백50만여 명에 이르는 현상에 대해 이영자(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랜 역사 동안 매춘을 발달시켜 온 남성문화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와 아내까지도 매춘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며 매춘을 조장하는 성문화와 성산업의 과감한 철폐를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티브 강력한 성문화 개혁운동 활동과 △항락업소 변경의 원 인인 분배구조 개선 △「윤락행위등 방지법」 등 행정통제 강화를 통한 점진적인 매춘 방지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제뉴스분석 참여사회아카데미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원장 임현영)에서는 오는 9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강좌 '국제뉴스분석-세계를 읽자'를 진행한다. 수강료 4만원, 문의: 796-8365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기구로서 18명의 개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전문가위원회다. 아직 위원중 한국인은 없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유엔에 의해 65년에 채택되어 69년에 발효된 조약이다.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백46개국에 달하며, 한국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79년에 가입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가 조약에 따라 제출하여 이번 심의를 받은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는 이미 제8번째로, 정부측의 인권관련 정기보고서로는 가장 연조가 깊은 셈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조약국의 조약상 의무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조약은 세 가지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조약국은 매 4년마다 위원회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조약국은 다른 조약국의 조약위반사실에 대해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State-to-State complaints). 셋째, 조약국이 위원회의 개인제소접수권한을 받아들일 경우(조약 제14조를 선언했을 경우) 인종차별의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이 위원회에 대해 조약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

8월12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폭행, 인신모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산피해 등 인권피해에 대해 아래의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피해사제는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법률구조도 지원합니다.

<신고전화> 민변 522-7284/민가협 763-2606/인권운동사랑방 715-9185/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한국교회 인권센터 744-3717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①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 제공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해소송

“탄압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사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

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이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과 다시 돌아올 입국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안 변호사는 △국제엠네스티 영국본부 등의 공식초청을 미술가로서의 영예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여권발급 거부로 BBC 방송 등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떠

안게 되었고 △여권담당기관의 미발급 사유가 ‘안기부의 불허가’라는 것은 홍 씨가 지난 89년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고소한 것과 홍 씨의 혐의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된데 따른 안기부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고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이미 93년 3월 사면·복권이 이루어져 걸림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93년 11월에는 함부르크재단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고 귀국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담 화가는 “이번 영국의 초청은 나 한 개인의 초청이라기 보다 한국의 민중예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하지만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탄압을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당국의 잘못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토론회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이후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중, 노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청회를 끝내고, 이제 9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할 노동법 개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과 경실련(사무총장 유재현)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그동안의 노개위 활동에 대해 김선수(민변) 변호사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 시도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노개위의 체계적인 의견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계의 요구를,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갈등의 염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김윤환(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교수는 “바람직한 민주적 노사관계는 미래산업사회-즉 후진자본주의 질서 청산-건설이라는 장기적 방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며 “후진자본주의 질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관치경제, 냉전적 안보외교

등의 타파를 통해 인간, 자연, 국가간의 공존할 수 있는 공존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광택(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국제적인 개정 압력을 받았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원리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논리가 관철되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없는 노동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사회아카데미 개강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원장 임현영)는 9월 9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배움의 욕구를 풀기 위한 참여사회아카데미를 개강한다. 3번째를 맞고있는 이번 참여사회아카데미는 총 12개 강좌를 개설해 주부와 노인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문의:796-8364.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썩크 탱크

【편집자 주】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 제48차 회의가 지난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엔인권소위 회의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관심을 끌고 있는 루이 주아네 보고서와 테오 반 보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연재 기사의 대부분은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이 금년 회의 초반을 참관하고 집필한 것이다.

속성을 고려해서 2년마다 위원들의 절반이 바뀐다. 또한 결석이나 유고에 대비하여 교체위원(alternate member)도 동시에 선임된다. 현재 총 26명의 위원들이 선임되며 지역간 안배원칙에 따라 아시아에는 6명이 배당된다. 아시아에 6명이 배정되지만 실제로 상임위원국이나 마찬가지로인 중국, 일본, 인도를 빼고 나면 3석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연재 기사의 대부분은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이 금년 회의 초반을 참관하고 집필한 것이다.

을 받아 선임된 인권소위 위원들은 제네바대사와 유엔대사를 역임한 박정용 전의무차관으로, 인권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박위원의 법률보좌역으로 이화여대 법대의 홍성필 교수를 위촉해 수행, 자문케 하고 있다. 인권소위의 의장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규정에 따라 매년의 정기회의 첫 회의에서 위원중 호선한다. 관행상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며 선임하는 데, 순

아가서 인권소위는 인권법의 기준과 원칙을 기초하여 인권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엔의 인권관련선언과 조약은 인권소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어 기초되는 것이 보통이다. 인권소위의 이러한 권한은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에 관해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전 영역에 미친다. 한마디로 인권소위는 인권위원회의 썩크 탱크(think tank)이자 사전축매로서 인권위원회에 상정될 모든 인권관련 안건을 미리 전문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거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소위원회의 주요 결정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인권소위의 회의는 전체회의(plenary meeting)와 실무그룹회의(workin g group meeting)

어떠한 인권침해도 여기서는 점잖은 고발과 훈계나 억지루성이 방어와 옹호, 그리고 사교와 협상의 대상일 뿐이다. 다만 민간인권단체들은 비교적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다.

인권소위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산하기구로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와 달리 개인 자격의 전문가 위원(expert member)으로 구성된다. 인권소위 위원

은 자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 인권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임된다. 인권소위 위원은 업무의 연

태 성공했다. 정부의 추천

서에 따라 서구 몫인 이번 제48차 인권소위의 의장으로서는 저명한 국제인권법학자인 노르웨이의 아스비온 아이데(Asbjorn Eide)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26명의 위원중 아시아는 6명 인권소위의 일차적 기능은 인권실현과 관련된 주제나 쟁점에 대한 연구검토에 있다. 또한 인권소위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국제사회가 의면하거나 소홀히 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나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받습니다.

8월12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폭행, 인신모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성추행, 재산피해 등 인권피해에 대해 아래의 전화로 접수 바랍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법률구조도 지원합니다.

<신고전화> 민변 522-7284/민가협 763-2606/인권운동사랑방 715-9185/천주교인권위원회 777-0643/한국교회 인권센터 744-3717

(3면에 계속-->)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 전국연합, '문민독재' 우려

최근 한총련 사태와 관련 28, 29일 전국의 주요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과 학생들의 무더기 연행, 집시법 개악, 국방비 12% 증액, 고무 총격탄 등 시위진압장비 도입 등 정부가 행하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한총련의 폭력시위를 근절하겠다는 핑계로

사회비판세력의 싸늘 자르겠다는 것이며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연합은 29일자 성명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마녀사냥식의 탄압과 강권조치의 강화는 우리 사회를 문민독재로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당국측에 불순한 강권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한총련, 인권피해조사 백서발간 예정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정명기, 한총련)은 연세대 사태에서 광범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각 학교별로 인권피해사례 조사작업에 나섰다.

한총련은 컴퓨터 통신에 '한총련 사태 진상규명 및 인권피해조사' 관련 지침서를 지난 주말부터 매일 올리고 있다. 지침서는 "공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사람을 사살하는 미도덕적인 행위 등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권력의 부당함을) 국민과 학우들의 힘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조사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연세대 사태를 통하여 생긴 수많은 불상사와 피해를 정확하게 밝혀, 현 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인 본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각급 학교별로 모아진 인권피해사례를 1차로 29일까지 모으고, 그 뒤에도 계속 수집,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총련이 수집중인 인권피해 사례들은 폭행, 성추행, 인격모독

(폭언 등), 재산피해(가방에 든 현금, 카드, 옷 등) 등이고 이를 입증할 사진자료와 비디오, 육성녹음, 증언록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지난해 12월 여성발전기금법 시행이후 정부는 2001년까지 1천억 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재정경제원이 97년 예산안에 기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여연)은 "2001년까지 1천억 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7년 예산안부터 1백억 원씩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나 여성유권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연은 '97년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 1백억 원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정원 등 정부관계 부처 및 각 정당 대표실, 국회여성특위 위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자료요약>

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는가. 그것은 오로지 역사의 좌절과 왜곡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적 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했다.

군사쿠데타에 대응하여 일어난 5월항쟁은 후진국 특유의 자본주의 발전유형 속에서, 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군사정권체제에 대한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5월항쟁은 이후 민중운동을 성숙시킨 결정적 계기였으며, 민중 일반이 투쟁에 동참함으로써만이 민중억압적인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12·12와 5·18 재판에 대한 평가-

차병직(민변 출판·홍보위원장, 변호사)
검찰은 규모면에서 방대한 기록을 남긴 수사 끝에 94년 10월 12·12사건에 대해 군사반란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결정을, 95년 7월 5·18사건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에 대한 항의의 물결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끝내, 전·노·씨 모두를 기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주장과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의 행태 단계 전부에 걸쳐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보다는 적법절차가 모범적으로 지켜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그러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 이후의 과거 청산 : 과제, 원칙, 전략-

곽노현(민교협 정책위원장, 방송대 교수)
이번 선고공판으로 광주시민들의 유혈항거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역사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법적으로도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내란기간중에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삼청교육대와 언론인, 교수들의 대량해직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명과 보상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과거청산에 대해 두 가지 대립된 견해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과거청산의 대미로 보는 견해와 본격적 과거청산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여전히 사면을 요구하는 5,6공 세력이 사회 도처에 건재하고, 현 정권의 약점으로 인해 미봉적 과거청산의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예상되는 사면정국을 청산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6공 권부실체 전연, 나아가서는 당시의 사회지도층 전체에 대한 재판임을 인식하는 바탕위에서 5,6공 권부실체 및 적국 영합인사들에 대한 책임문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시국사범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현 정권은 전두환 씨등의 형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 이들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①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 제공
-테오 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연세대,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성추행 항의에 "이 빨갱이 년" 곤봉으로 구타

지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연세대에서 있었던 제7차 범민련대회를 전후해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주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자신들이 당했거나 목격한 사실들을 제보해 왔다. 컴퓨터 통신 상에 올라와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주로 성추행, 폭행, 폭언, 수사과정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런 컴퓨터 통신상의 사례들은 대부분 구체성이 없고, 확인이 불가능해 언론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왔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인권협)와 한총련이 광범하게 자행되었던 연세대 사태 관련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에 의한 성추행은 주로 20일 새벽 종합관 진압 이후 연행과정과 연회초등 학교에 임시수용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등에서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다. 종합관에서 연행되었다 불구속으로 풀려난 7대학 이아무개(22) 씨는 "종합관에서 잡혀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계단을 내려올 때 옆에 서 있던 전경들이 손으로 가슴을 만져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 빨갱이 년' 등의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속옷 검사를 한다며 가슴을 들춰보고 만지기도 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면 여지없이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여럿이었다는 증언들이 있음에도 경찰병원에 현재 몇 명이나 치료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실대 김정 등 전과정에서 광범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관에서 연행되었다 불구속으로 풀려난 7대학 이아무개(22) 씨는 "종합관에서 잡혀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계단을 내려올 때 옆에 서 있던 전경들이 손으로 가슴을 만져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 빨갱이 년' 등의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속옷 검사를 한다며 가슴을 들춰보고 만지기도 하면서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면 여지없이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것을 봤다는 의경의 진술만으로 구속시킨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2/3는 경찰이 부수"

한편, 경찰의 진압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종합관의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과 언론의 주장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학생들은 "종합관 2/3는 전경들이 부수다. 학생들은 랩실(어학실)과 교수연구실에는 접근 하지 않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종합관에 있다 가 연행, 불구속으로 풀려난 최아무개(21) 씨는 "바깥의 바리케이트에 불을 붙인 것은 학생들이 했지만, 건물 내부의 계단에 불을 낸 것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학생들이 없던 곳까지 뒤져 유리창이며 기물들을 모두 부수다"고 증언했다. 경찰들은 연세대 상황이 종료되고도 25일까지 학교 안 한 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 수사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들게 하고 사진을 찍어 구속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부상자 파악 안돼
이번 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들의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진압 과정에서 들 것에 실려나간

서 족구나 진압훈련을 해마치 80년대 초 같았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은 경찰이 학생들의 가방을 뒤져거나 건물의 사물함을 뒤져 노트북 컴퓨터, 현금, 카드 등을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다.

피해조사 순탄치 않아
하지만, 이런 인권피해에 대한 조사작업이 순탄치만은 않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손민아(33) 씨는 "피해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다"며 "그럴수록 용기있게 증언하는 것이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 사례를 조사중인 전국대학여학생대표자협의회 간부는 "성추행을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시위 때마다 일어나는 경찰의 성추행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권협과 한총련은 각각 다음주까지 인권피해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자료집이나 백서 형태로 발간하여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고발할 예정이다. 인권협은 민가협 763-2606, 민변 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715-9185, 천주교인권위 777-0643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안내
지로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96년 8월분 총목차(696-717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696	8/1	1	"사면정국은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소로 전략 우려/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에 방지침서 제작
		2	대림노조 회사 노조운영 개입에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697	8/2	1	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확정/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시사뉴스 또 구속
		2·3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대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제노사이드 조약
698	8/3	1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인권단체들 한국정부 항의도 촉구/UN 인권소위, 5·18 등 불처벌 문제다뤄/통일운동단체, 안기부 방문해 통일운동 보장 촉구
		2	한권의 책-『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준비위원회 발족/인권간행물
699	8/6	1	홍성담씨 한 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참가 예정/공포의 1시간 30분, 사복경찰 50여 명 이유없이 쫓아와/불교인권위 진관 승려 원폭피해 행사 참여
		2	'검찰, 학살자에 이유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입장한 사법심판 촉구/기독교대책본부, UN 인권소위에 한국내 외노 인권탄압 폭로/주간인권호름(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700	8/7	1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불교인권위, 범민족대회 보장촉구
		2	정대협,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하며 일본 순회집회/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국보법철폐 공동준비/각계인사 109인, 반민주 악법개폐 촉구 선언/언론폭력에 분노한 어느 일본 주부 이야기, 선동설 투수 부진은 한국 '육의 문화' 탓?
701	8/8	1	"국보법은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인도네시아의 범죄 막기위한 행동이었다"
		2	한전, 영광핵발전소 2호기 방사능 방출 한 달만에 발표/한국교회여성연합회, 원폭피해자 대책추진/『이동약자 위한 기본법』 토론회
702	8/9	1	홍성담 씨 출국불허에 영국언론 대서특필, 한국대사관에 영국인들의 항의 잇따라/전국 여대협, 생활안전지원특별법 강화 국회청원/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간수교수 변호인 접견권보장 요구
		2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인권간행물
703	8/10	1	장기수 김인서 씨 좌반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미행·도청장치 발견, 범민련간부 자택
		2	성폭력대책위, 성폭력예방교육 등 종합대책마련 촉구하며 서명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 접수/대전충남겨레모임, 양심수 석방 행사/시위용품 신고규정없다며 민변·민가협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양심수가 사람이름인가요?, 명동에서 확인한 인권의 사각지대
704	8/13	1	민주노총 투쟁본부 체계로 총력투쟁,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없는 노동법개정 거부/유가협 창립 10주년 행사와 수련회/주요 공판 안내
		2	정부 통일축전 폭력대응, 전경 투석으로 학생 중상/정의구현사제단, 법적·인적 청산요구 광복절 성명발표/여성노동자회, 여성직업훈련생 취업 사례 수집/주간인권호름(8월5일부터 11일까지)
705	8/14	1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법만 포함/여연, "일본 사죄" 촉구하는 8·15 성명 발표
		2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관도 특별 폭로한 현준희 씨 1차 공판/성폭력대책위, 8월 말 성폭력 추방대회 각 단체 참여 요망/대우그룹, 해고자 집회 방해하기 위해 김우중 회장집앞 등 한 달 동안 집회신고
706	8/16	1	전쟁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2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대폭축소 의결/민족회의, 96평화통일선언 채택/ 쌀수입 반대, 농민들 대대적 투쟁 결의

<인권하루소식> 96년 8월분 총목차(696-717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707	8/17	1	제2의 건대 사태우려, 자진해산 요구묵살...경찰 검거작전 돌입/16일 20:10시 현재, 이한열 추모비 앞을 가로막은 경찰병력
		2	구속자 가족 사원아파트서 내몰아, 한진중공업 가족 상경투쟁/경실련 등 시민단체, 전·노 사면 위한 전주곡이라며 특별 사면조치 항의/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정신대·고용 주요의제/민저나와 장기수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현치·김태홍 씨 석방
708	8/20	1	공권력 행사 인간존엄성 보장선에서, 광기어린 언론 반인권적 간접살인 부추겨/구속자 상황판
		2	생리대 전달 차단, 여연 등 "안전귀가 보장"/미국 민주당 초청으로 권영길 위원장 출국/연세대 사태에 대한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언/주간인권호름(8월12일부터 18일까지)
709	8/21	1	"정부 연대사태 평화해결 의지 없었다", 시민·사회단체 21일 파업집회 규탄대회/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민가협 간사 연행, 연회동서 학부모 집단 중
		2	원인규명없이 학생 폭력 집중보도, 한총련 사태 관련보도 모니터/홍성담 '여행자유' 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고용평등추진본부 결산, 승진 성차별 가장 많아/고려대 서창캠퍼스, 군병력 진입으로 긴장, "5공정권 되살아났는가?"
710	8/22	1	연행자 확인전화 '182' 검거에 역이용, 경찰 부상자 치료된 사법처리 혈안/전학련 전원 유죄판결/조사과정 부당대우 금지 요청, AI 한총련 사태 인권보장 촉구/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
		2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 명 결집,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아시아자동차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연세대 사태 부상자 소식> 실명 4명, 두 개골 합몰, 뇌사, 뇌출혈...
711	8/23	1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전국연합, 김 이경 죽음에도 성명/올해 인권상황 조사위해 AI 조사단 파견
		2	<독자투고> 전두환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오완호(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712	8/24	1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 시민에 총기위협·항의자 연행/이중삼중 검열 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2	연대 사태 학생 인권침해 상상 초월, 구타·성희롱부터 조작에 의한 구속까지/아시아 독립비디오 한마당, 25-26일 서울대 호암관
713	8/27	1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 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여성의 전화, 26기 여성상담교육/외노협 28일부터 이주노동자 워크샵
		2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아시아여성기금 철폐·국가배상 요구/구속자 상황판/주간인권호름(8월19일부터 25일까지)
714	8/28	1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재소 집수권한' 약속,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해소송 승소,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주요 공판 안내
		2	복지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해고노동자 사당의원 입원/매춘 여성 1백20여 만명, 여성민우회 대책시급 촉구/참여자사회아카데미, 국제뉴스 분석 강좌 진행/인종차별철폐위원회란?
715	8/29	1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해소송, "탄압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참여자사회아카데미 개강
		2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생크 탱크/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받습니다
		3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1503호 절차란?
716	8/30	1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인권간행물
		2	전국연합, '문민독재' 우려하며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한총련, 연대사태 인권피해 조사해 백서발간 예정/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자료> 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717	8/31	1	연세대 사태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성추행 항의에 '이 빨갱이 년' 끈봉으로 구타
		2·3	8월 총목차(696호-717호까지)